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의 조세 · 재정정책 동향

2009. 2

전 병 목 외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 〈연구진 및 집필분야〉 —

전병목 연구위원 : 총괄

조진권 회계사 : 미국

구자은 회계사 : 캐나다

정희선 회계사 : 영국 · 스웨덴

마정화 연구원 : 독일

김태훈 회계사 : 프랑스

정경화 연구원 : 네덜란드 · 핀란드 · 싱가포르

김정아 주임연구원 : 호주

송은주 주임연구원 : 일본

기은선 회계사 : 대만 · 중국

목 차

I. 서론	9
II. 외국의 최근 조세·재정정책	10
1. 미국	10
2. 캐나다	36
3. 영국	47
4. 독일	61
5. 프랑스	77
6. 스웨덴	87
7. 네덜란드	96
8. 핀란드	106
9. 호주	116
10. 일본	126
11. 싱가포르	144
12. 대만	159
13. 중국	178
III. 국가별 정책의 시사점	202
1. 국제적 정책흐름	202
2. 주요국의 위기대응 정책 유형	203
가. 가계지원 정책	204

나. 고용유지 및 창출 정책.....	206
다. 기업활동 지원 등.....	207
3. 시사점.....	208
〈부록〉 외국 경제위기 대응정책의 부분별 내역.....	211

표 목 차

〈표 II -1〉 CBO 재정전망(2009~2019)	13
〈표 II -2〉 경제축진법에 의한 추정예산계획	15
〈표 II -3〉 2009년 H.R. 1424 시행으로 인한 예산규모	17
〈표 II -4〉 재무부의 주택 및 금융시장에 대한 지원정책	18
〈표 II -5〉 H.R.1에 대한 예산효과 분석	20
〈표 II -6〉 경기부양법의 규모변화 추이	20
〈표 II -7〉 환급액 계산방식	23
〈표 II -8〉 주요한 세액지원 내용(H.R.3221)	24
〈표 II -9〉 H.R. 1424 조세지출에 대한 예산효과	28
〈표 II -10〉 경기부양법(H.R.1)에 반영된 조세수입 예측	29
〈표 II -11〉 미국의 경기대응 조세 · 재정정책	33
〈표 II -12〉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경기부양 논의(Economic stimulus plan)	34
〈표 II -13〉 경제행동조치의 규모 및 내역	40
〈표 II -14〉 캐나다의 경기대응 조세 · 재정정책	46
〈표 II -15〉 영국 일반정부 부문 예산 총량	48
〈표 II -16〉 영국의 경기대응 조세 · 재정정책	60
〈표 II -17〉 독일의 경기대응 조세 · 재정정책	76
〈표 II -18〉 재정수지 현황 및 전망	79
〈표 II -19〉 프랑스의 경기대응 조세 · 재정정책	86

〈표 II -20〉 중앙정부 예산지출.....	89
〈표 II -21〉 중앙정부 예산수입.....	89
〈표 II -22〉 스웨덴의 경기대응 조세 · 재정정책.....	95
〈표 II -23〉 네덜란드의 경기대응 조세 · 재정정책.....	105
〈표 II -24〉 근로소득세율.....	113
〈표 II -25〉 핀란드의 경기대응 조세 · 재정정책.....	115
〈표 II -26〉 호주의 경기대응 조세 · 재정정책.....	125
〈표 II -27〉 생활대책의 내역과 규모.....	128
〈표 II -28〉 생활보호를 위한 긴급대책의 규모.....	131
〈표 II -29〉 일본 주택차입금에 대한 특별공제.....	136
〈표 II -30〉 일본 인정장기우량주택차입금에 대한 특별공제.....	136
〈표 II -31〉 토지의 등록면허세 세율.....	138
〈표 II -32〉 2009년도 세제개정에 의한 세수증감.....	142
〈표 II -33〉 일본의 경기대응 조세 · 재정정책.....	143
〈표 II -34〉 2009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145
〈표 II -35〉 부문별 세출예산(안).....	146
〈표 II -36〉 싱가포르의 경기대응 조세 · 재정정책.....	158
〈표 II -37〉 대만의 재정수지 추이.....	160
〈표 II -38〉 대만사랑 12대 공공건설 프로젝트.....	165
〈표 II -39〉 대만의 세법개정 논의동향.....	166
〈표 II -40〉 대만의 소득세 공제금액 확대.....	167
〈표 II -41〉 대만의 소득세 한계세율.....	168
〈표 II -42〉 대만의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방안.....	169
〈표 II -43〉 대만의 경기대응 조세 · 재정정책.....	177
〈표 II -44〉 중국의 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179

〈표 II -45〉 2009년도 중국의 경제운영방향	180
〈표 II -46〉 중국의 경기부양정책 10개 주요 분야	181
〈표 II -47〉 경기부양자금 투자계획	183
〈표 II -48〉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조치	198
〈표 II -49〉 중국의 경기대응 조세 · 재정정책.....	201
〈표 III-1〉 각국의 경기활성화 정책의 규모('08. 10월 이후).....	203

그림 목 차

[그림 II-1] 예비예산안상 정책의 재정효과.....	49
[그림 II-2] 독일 연방정부 예산(2002~2009년).....	62
[그림 II-3] 주요국의 GDP 성장률(2009년도 예상).....	117
[그림 II-4] 호주정부의 경기부양책.....	118
[그림 II-5] 상품권 이용분포 예측.....	162

I. 서론

- 미국의 주택금융시장 붕괴에서 촉발된 국제적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후퇴를 야기하고 있음
 - 자동차 및 건설산업이 금융과의 긴밀한 관련성으로 인해 먼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후 다른 산업으로 파급
 - 세계는 소비감소, 실업증가 등과 같은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

- 국제적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각각의 실정에 맞는 조세·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시행
 - 국가별 정책의 일반적인 방향은 재정지출 확대와 조세부담 완화를 통한 총수요 확대
 - 동시에 경기침체의 극복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잠재력의 확충도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작용
 -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과 함께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실업대책 등이 중요한 정책 방향
 - 미래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회안전망 구축, 환경친화적 산업에 대한 지원 등도 중요

- 본 보고서의 목적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조세·재정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정책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
 - 2008년 이후 주요국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

Ⅱ. 외국의 최근 조세·재정정책

1. 미국

가. 경제동향

	GDP (10억 달러)	재정수지 (% per GDP)	실업률 (%)	환율(USD/SDR)	
				기말	평균
2003	10,960.80	- 4.8	5.99	1.49	1.40
2004	11,685.90	- 4.4	5.53	1.55	1.48
2005	12,421.90	- 3.3	5.10	1.43	1.48
2006	13,178.40	- 2.2	4.62	1.50	1.47
2007	13,807.50	- 2.9	4.60	1.58	1.53
2008Q1	14,224	- 3.2	5.27	1.64	1.60
2008Q2			5.23	1.63	1.63
2008Q3			6.03	1.56	n.a.
2008Q4			n.a.	n.a.	n.a.

	이자율			CPI	주가지수 (Dow)
	재무성증권 수익률	공채수익률 (10년)	공채수익률 (3년)		
2003	1.01	4.02	2.11	106.83	
2004	1.37	4.27	2.78	109.69	10,783.01
2005	3.15	4.29	3.93	113.41	10,717.50
2006	4.72	4.79	4.77	117.07	12,463.15
2007	4.41	4.63	4.34	120.41	13,264.82
2008Q1	2.15	3.66	2.17	123.17	12,262.89
2008Q2	1.64	3.89	2.67	125.88	11,350.01
2008Q3	1.66	3.86	2.63	127.34	10,850.66
2008Q4	n.a.	n.a.	n.a.	n.a.	8,668.39

주: 1. n.a. = not applicable

2. GDP는 경상수치이며, 2008년 수치는 CBO가 발행한 보고서(1월7일)상의 실제 금액

3.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의 2003~2007년 수치는 OECD 자료, 2008 자료는 CBO의 보고서 자료임.

4. 주가지수는 종가기준

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8.11, IMF, OECD Economic Outlook 84, 2008
<http://www.krx.co.kr/index.html>, 네이버증권 <http://stock.naver.com/world/>,
 야후금융 <http://finance.yahoo.com/intlindices?e=americas>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 재정전망¹⁾

- CBO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09년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8.3%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달러, 2010년에는 GDP의 4.9%인 7,030억 달러로 감소
 - 2008년의 실제 재정적자는 GDP 대비 3.2%인 4,550억 달러로 2007년도의 GDP 대비 1.2%인 재정적자보다 무려 2.6배 증가하였음
 - 2009년 1월 9일 발표된 CBO의 재정전망 보고서에는 차기 오바마 정부의 감세정책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정적자는 더 증가할 것임
- 2009년의 재정수입은 2조 3천억 달러로 경기침체와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2008년보다 1,670억 달러 감소
 - 자산가격의 하락과 경기침체는 법인의 실적 악화를 초래하여 법인세수 감소
 - 특히 상장주식의 가치하락은 자본이득과 연금소득의 감소를 가져와 개인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수입은 2008년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임
 - 경기회복으로 인한 2010년과 조세감면의 일몰규정 폐지 등으로 인하여 2011년 이후 조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 2009년의 재정지출액은 3조 5천억 달러로 2008년보다 5,7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법정지출액(Mandatory spending)은 부실자산프로그램(TRAP)의 시행과 국책모기지업체(Fannie Mae와 Freddie Mac)에 대한 지원

1) 2009년 1월 7일에 발표한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2009~2019 경제전망 보고서 참조

<http://www.cbo.gov/ftpdocs/99xx/doc9957/01-07-Outlook.pdf>

으로 36% 증가

- 재량지출액(Discretionary spending)은 2008년보다 4.6% 증가
- 부실자산프로그램 등의 시행이 끝나는 2009년 이후에는 재정지출 금액은 매년 5% 증가

○ 연방정부의 부채는 2009년에 7조 2천억 달러로 GDP의 50.5%에 달할 것이며 2019년에는 9조 3천억 달러로 GDP의 41.9%에 이를 것으로 예측

□ 현저한 재정적자의 증가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부실을 막기 위해 2008년에 시행된 경기부양정책에 기인

○ 2008년 부시정부와 의회는 ① 가계의 소비 위축, ② 주택시장 가격의 하락, ③ 금융시장의 부실자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세차례의 경기부양법으로 지원

○ 2009년 1월 오바마대통령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안을 제시하자, 여당인 민주당 하원에서 경기부양법안을 발의·의결한 뒤 2월 10일 상원에서 수정하여 의결한 후 2월 13일 양원은 최종합의하여 7,872억 달러의 경기부양법을 통과

〈표 II-1〉 CBO 재정전망(2009~2019)

	Actual														Total, 2010-	Total, 201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	2019		
In Billions of Dollars																
Revenues																
Individual income taxes	1,146	1,060	1,199	1,396	1,572	1,726	1,853	1,978	2,099	2,227	2,347	2,475	7,745	18,870		
Corporate income taxes	304	223	252	290	333	348	334	347	347	349	353	355	1,553	3,304		
Social insurance taxes	900	915	938	978	1,032	1,067	1,141	1,192	1,242	1,294	1,347	1,403	5,176	11,653		
Other	173	160	144	162	187	197	216	229	241	253	262	272	906	2,164		
Total Revenues	2,524	2,357	2,533	2,825	3,124	3,353	3,544	3,746	3,929	4,122	4,309	4,505	15,380	35,991		
On-budget	1,866	1,686	1,846	2,111	2,372	2,561	2,710	2,873	3,019	3,173	3,320	3,476	11,600	27,461		
Off-budget	658	672	687	714	752	793	834	873	910	949	989	1,029	3,780	8,530		
Outlays																
Mandatory spending	1,597	2,164	1,857	1,914	1,906	2,033	2,156	2,288	2,458	2,572	2,684	2,890	9,865	22,758		
Discretionary spending	1,133	1,184	1,188	1,189	1,193	1,220	1,246	1,274	1,308	1,335	1,362	1,399	6,036	12,714		
Net interest	249	195	191	220	289	358	392	418	434	448	452	451	1,450	3,654		
Total Outlays	2,978	3,543	3,236	3,323	3,388	3,610	3,794	3,980	4,201	4,355	4,497	4,740	17,351	39,126		
On-budget	2,504	3,026	2,689	2,752	2,784	2,973	3,121	3,271	3,453	3,565	3,663	3,857	14,320	32,129		
Off-budget	475	517	547	571	604	637	672	709	748	790	835	883	3,031	6,997		
Deficit (-) or Surplus	-455	-1,186	-703	-498	-264	-257	-250	-234	-272	-234	-168	-235	-1,972	-3,135		
On-budget	-638	-1,340	-843	-641	-412	-413	-411	-398	-434	-393	-342	-381	-2,721	-4,668		
Off-budget	183	155	140	143	149	156	162	164	162	159	154	146	749	1,534		
Debt Held by the Public	5,803	7,193	7,829	8,238	8,475	8,516	8,734	8,925	9,149	9,335	9,127	9,344	n.a.	n.a.		
Memorandum:																
Gross Domestic Product	14,224	14,257	14,452	15,137	16,048	17,035	17,986	18,864	19,703	20,537	21,397	22,278	80,659	183,438		
As a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Product																
Revenues																
Individual income taxes	8.1	7.4	8.3	9.2	9.8	10.1	10.3	10.5	10.7	10.8	11.0	11.1	9.6	10.3		
Corporate income taxes	2.1	1.6	1.7	1.9	2.1	2.0	1.9	1.8	1.8	1.7	1.6	1.6	1.9	1.8		
Social insurance taxes	6.3	6.4	6.5	6.5	6.4	6.4	6.3	6.3	6.3	6.3	6.3	6.3	6.4	6.4		
Other	1.2	1.1	1.0	1.1	1.2	1.2	1.2	1.2	1.2	1.2	1.2	1.2	1.1	1.2		
Total Revenues	17.7	16.5	17.5	18.7	19.5	19.7	19.7	19.9	19.9	20.1	20.1	20.2	19.1	19.6		
On-budget	13.1	11.8	12.8	13.9	14.8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4.4	15.0		
Off-budget	4.6	4.7	4.8	4.7	4.7	4.7	4.6	4.6	4.6	4.6	4.6	4.6	4.7	4.7		
Outlays																
Mandatory spending	11.2	15.2	12.9	12.6	11.9	11.9	12.0	12.1	12.5	12.5	12.5	13.0	12.2	12.4		
Discretionary spending	8.0	8.3	8.2	7.9	7.4	7.2	6.9	6.8	6.6	6.5	6.4	6.3	7.5	6.9		
Net interest	1.7	1.4	1.3	1.5	1.8	2.1	2.2	2.2	2.2	2.2	2.1	2.0	1.8	2.0		
Total Outlays	20.9	24.9	22.4	22.0	21.1	21.2	21.1	21.3	21.2	21.0	21.3	21.5	21.3	21.3		
On-budget	17.6	21.2	18.6	18.2	17.3	17.5	17.4	17.3	17.5	17.4	17.1	17.3	17.8	17.5		
Off-budget	3.3	3.6	3.8	3.8	3.8	3.7	3.7	3.8	3.8	3.8	3.9	4.0	3.8	3.8		
Deficit (-) or Surplus	-3.2	-8.3	-4.9	-3.3	-1.6	-1.5	-1.4	-1.2	-1.4	-1.1	-0.9	-1.1	-2.4	-1.7		
On-budget	-4.5	-9.4	-5.8	-4.2	-2.6	-2.4	-2.3	-2.1	-2.2	-1.9	-1.6	-1.7	-3.4	-2.5		
Off-budget	1.3	1.1	1.0	0.9	0.9	0.9	0.9	0.9	0.8	0.8	0.7	0.7	0.9	0.8		
Debt Held by the Public	40.8	50.5	54.2	54.4	52.8	50.0	48.6	47.3	46.4	45.5	42.7	41.9	n.a.	n.a.		

주: n.a. = not applicable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

1) 2008년 2월 경제촉진법(H.R.5140²⁾ :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 CBO와 JCT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촉진법의 시행으로 2008년에 1140억 달러의 조세수입 감소(2008~2018년까지 약 820억 달러의 순수입 감소)와 재정적자 1,520억 달러 증가(2008~2018년까지 1,240억 달러의 재정악화)할 것으로 예측

가) 모기지론에 대한 대출 한도 확대

- 연방주택공사(FHA)의 소수가족(single-family) 프로그램에 대한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조치 시행
 - FHA는 고위험 · 고액의 대출을 받은 자에게 허용될 수 있는 최고의 비용을 부과하고, 소수가족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모기지 한도 증액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을 최소화
- 연방주택공사(FHA)가 소수가족(single-family)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모기지 한도를 현행 conforming loan agreement³⁾의 87%에서 175%까지 확대하여, 현행 보증대출금(insuring loans)인 362,790 달러에서 729,750 달러로 증액

2)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h110-5140>

3) conforming loan agreement란 연방국립담보협회(the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FNMA)와 연방주택담보대출회사(the 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FHLMC)가 구입하거나 보증할 수 있는 연간 대출금액 상한을 의미.

〈표 II-2〉 경제촉진법에 의한 추정예산계획

(단위: 10억 달러)

	재정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08~ '13	'08~ '18
조세수입의 변화													
개인환급액	-68.9	-6.1	0	0	0	0	0	0	0	0	0	-75.0	-75.0
감가상각 환급액	-44.8	-6.2	11.7	8.8	7.6	5.9	3.8	2.3	1.3	1.0	1.1	-17.0	-7.5
총수입변화액	-113.7	-12.3	11.7	8.8	7.6	5.9	3.8	2.3	1.3	1.0	1.1	-92.0	-82.5
직접지출에 대한 변화													
개인환급액	36.8	3.6	0	0	0	0	0	0	0	0	0	40.4	40.4
주별 교부액	1.0	0.3	0	0	0	0	0	0	0	0	0	1.3	1.3
행정비용	0.2	0.1	0	0	0	0	0	0	0	0	0	0.3	0.3
FHA의 독립 가구에 대한 대출한도증액 ④	※	0	0	0	0	0	0	0	0	0	0	※	※
직접지출변화 액⑤	38.0	4.0	0	0	0	0	0	0	0	0	0	42.0	42.0
재정적자 또는 흑자의 순변화													
재정적자 또는 흑자의 순 변동액	151.7	16.3	-11.7	-8.8	-7.6	-5.9	-3.8	-2.3	-1.3	-1.0	-1.1	133.9	124.4

주: ※: -50백만달러와 영(零)사이의 금액; FHA = 연방주택관리국.

- ④ 행정비용을 제외한 모든 직접소비지출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액은 지출액과 동일함. H.R.5140에 의하면 2008년에만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의회예산사무국은 2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측
- ⑤ 의회예산사무국은 연방주택관리국 규정으로 2008년 14백만달러의 지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또한 연방주택관리국 규정을 조정하는 경우 2009년에 7백만달러의 징수액을 상쇄할 것으로 보임)
- ⑥ (-) 금액은 재정적자의 감소(잉여금의 증가)를 나타내고, (+)의 금액은 재정적자 증가(잉여금의 감소)를 나타냄

자료: <http://www.cbo.gov/ftpdocs/89xx/doc8973/hr5140pgo.pdf>

2) 2008년 7월 주택경기촉진법(H.R. 3221⁴⁾) :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

가) 개인의 부실채권 보전

- 연방주택공사(FHA)의 개입을 통하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부실채권 금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금융시장 안정장치 마련
 - 연방주택공사(FHA)는 주택가격이 담보대출금액을 하회하는 경우 담보대출자의 신용위험에 따라 대출금액을 감액조정

3) 2008년 10월 구제금융법(H.R. 1424⁵⁾) : Economic Stimulus Relief Bill)

- 연방정부에 부실자산을 매입 및 보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부실을 방지하고 안정을 도모하며, 에너지관련 세제 개정과 감면관련 일몰규정의 확대 등을 통해 2009년에만 총 8,086억 달러(세금효과 1,086억 달러 포함)의 재정지출이 소요⁶⁾

4)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h110-3221>

서브프라임으로 야기된 주택경기 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자, 2008년 2월 하원(House)에서 주택경기 촉진을 위해 발의된 법안(H.R. 3221)이 상원(Senate)에서 7월 11일에 통과된 후 7월 31일에 미국 대통령의 인가를 거침

5)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h110-1424>

6) 2008년 9월 29일 하원에서 상정된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법안은 부결되고, 10월 1일 상원에서 법안수정을 통하여 가결된 뒤 10월 3일 상원의 법안 수정 없이 통과됨

〈표 II-3〉 2009년 H.R. 1424 시행으로 인한 예산규모

(단위: 억 달러)

	금융지원 규정	조세관련 규정	합계
EESA	7,000	27	7,027
EIEA	-	11	11
TEAMTRA	-	1,048	1,048
합계	7,000	1,086	8,086

주: H.R. 1424의 구성은 ① 긴급경제안정화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EESA), ② 에너지향상및확대법(Energy Improvement and Extension Act of 2008; EIEA), ③ 감면확대및최저한세면제법(Tax Extenders and Alternative Minimum Tax Relief Act of 2008; TEAMTRA) 3부분으로 나누어짐

자료: Joint Committee on Taxation, <http://www.house.gov/jct/x-78-08.pdf>

가) 금융기관 지원

□ 재무부(Treasury) 산하 금융안정청(Office of Financial Stability; OFS)이 신설되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등의 자문⁷⁾을 받아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RAP)을 운영하며, 금융안정감독이사회⁸⁾(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Board)의 관리감독을 받음

-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RAP)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을 공정가액으로 매입 또는 보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증하는 경우 위험에 따라 산출된 보증수수료를 수취
 - 법 시행으로 2,500억 달러가 즉시 투입되고 대통령의 인가를 얻은 경우 재무부 장관은 1,000억 달러를 추가집행 가능

7) 자문 구성원으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저축기관감독청장(Director of the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주택도시개발부 장관(the 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통화감독원장(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임.

8) 금융안정감독이사회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위원장, 재무부 장관, 주택도시개발부장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으로 구성

- 추가로 3,500억 달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요청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경영자 보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거나 페널티를 부여
 - 재무부에 부실자산을 직접 양도한 금융기관은 경영자 보수에 대한 환수조항(clawback)을 제정 또는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금지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전국신용조합출자보험기금(NCUSIF: National Credit Union Share Insurance Fund)의 구좌당 예금보호한도를 100,000 달러에서 250,000 달러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증액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공이익과 투자자보호 목적으로 부실자산에 대한 시가평가기준(mark-to market accounting) 적용을 유예할 수 있음

〈표 II-4〉 재무부의 주택 및 금융시장에 대한 지원정책

(단위: 10억 달러)

정책	집행금액(Disbursement)		보조금 (Subsidy) ²⁾
	12월31일 현재	한도(Potential) ¹⁾	
부실자산프로그램	247	700	64
주택관련 세제	-	12	n.a.
모기지증권 매입	71	unlimited	-1
전환우선주 매입	14	200	n.a.
MMF에 대한 보증	Unknown	3,000	n.a.
추가자금지원	259	unlimited	n.a.

주: 1. n.a. = not applicable

1) Potential disbursement: 재정지출에 대한 최고한도 금액 또는 보증금액 한도

2) Subsidy: 구입비용에서 미래시점의 자산매각액 또는 추정이익을 차감한 가액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09 to 2019, p.39

4) 2009년 2월 경기부양법(H.R.1: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⁹⁾

가)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 인프라 구축, 과학, 에너지, 교육과 의료분야에 재정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에 중점
 - 경기부양법(H.R.1)은 2009~19년의 기간 동안 재정지출로 5,754억 달러와 2,118억 달러의 조세지출 규모로 총 7,872억 달러의 규모를 가짐
 - 8,195억 달러로 하원에서 통과, 상원¹⁰⁾에서 재정지출의 감소와 감세안의 확대를 통해 법안의 규모가 더 증액되었지만 결국 양원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초 하원발의 법안보다 감소
 -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은 약 6,750억~7,750억 달러의 재정지출(감세 3천억 달러 포함)을 수반하여 3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감세안이 반영되었음¹¹⁾
 - 정부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출확대(건설 및 투자활동, Medicaid, Food Stamps 등)

9) 2월 13일(미국 현지시각)에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2월 17일 현재 미국 대통령의 인가만 남겨 놓고 있음.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h111-1>

10) 민주당 하원의 경기부양계획에 대하여 공화당이 반대하여 상원에서 일부 수정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공화당 비판 : 감세규모는 확대되고, 즉각적인 경기부양을 도모하지 못하는 재정지출(예: 과학, 교육과 의료분야)은 축소
- 민주당의 반박논리 : 선제적인 고용창출을 통한 소비주체의 체질 강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각 경제주체의 경쟁력을 강화

11) Phillip Rucker, "Obama Tax Cuts Likely Very Soon," The Washington Post, Dec. 29, 2008, p. A4.
Tax Notes, "Obama Lobbies for Recovery Plan with Massive Tax Cuts," Jan.12, 2009, p.182

〈표 II-5〉 H.R.10에 대한 예산효과 분석

(단위: 10억 달러)

	By Fiscal Year, in Billions of Dollars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09-2019
DIVISION A—APPROPRIATIONS *												
Estimated Budget Authority	288.7	7.1	4.6	3.6	2.5	1.1	1.1	1.1	1.1	0.5	0	311.2
Estimated Outlays	34.8	110.7	76.3	38.1	22.9	12.8	7.0	3.1	1.6	0.8	0.1	308.3
DIVISION A—REVENUES												
Estimated Revenues	*	*	*	*	*	*	*	*	*	*	*	-0.1
DIVISION B—DIRECT SPENDING												
Estimated Budget Authority	90.3	107.6	49.0	7.6	7.3	15.1	4.7	-4.7	-4.1	-1.9	-1.4	269.5
Estimated Outlays	85.3	108.6	49.9	8.1	7.4	15.1	4.7	-4.7	-4.1	-1.9	-1.4	267.0
DIVISION B—REVENUES												
Estimated Revenues	-64.8	-180.1	-8.2	10.0	2.7	5.5	7.1	5.8	5.1	5.0	0.1	-211.8
NET IMPACT ON THE DEFICIT												
Net Increase or Decrease (-) in the Deficit	184.9	399.4	134.4	36.1	27.6	22.4	4.7	-7.3	-7.5	-6.1	-1.4	787.2

3. Most of the spending for Division A would stem from discretionary appropriations. The totals include about \$29 billion in 2009-2019 changes to mandatory programs that are contained in Division A.

Notes: Components may not sum to totals because of rounding. * = revenue reductions of less than \$50 million.

Sourc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and 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

〈표 II-6〉 경기부양법의 규모변화 추이

(단위: 억 달러)

	하원		상원(2/10)		양원합의통과(2/13)	
	'09년	'09~19년	'09년	'09~19년	'09년	'09~19년
재정지출주 ¹⁾	1,071	6,372	1,197	5,457	1,201	5,754
조세지출주 ²⁾	625	1,823	945	2,924	648	2,118
합계	1,696	8,195	2,142	8,381	1,849	7,872

주: 1) 재정지출 금액은 Division A와 Division B의 Direct spending 을 합한 금액

2) 조세지출 금액은 Division B의 Revenues 의 금액

자료: CBO

나) 개인에 대한 직접원(적인 재정지Economic Recovery payment)

- Social Security, Railroad Retirement, Veteran's Compensation and Pension, Supplement Security Income benefits 수령 권한이 있는 개인들에게 1회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1인당 300 달러에서 250 달러로 감액되어 의회에서 통과: 2009년에 140억 달러, 2010년에 17억 달러, 2011년에 1.5억 달러의 조세지출 예상

다) 실업 대책

- 실업자 및 실업가구에 대한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지원
 - 비자발적인 퇴직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COBRA¹²⁾ 유지보험료(COBRA continuation premiums)의 65% 보조금을 최장 9개월까지 지원
 - 2009년도에 143억 달러, 2010년에 91억 달러, 2012년에 1.4억 달러, 2009~19년 기간 동안 총 247억 달러의 조세지출 예상
-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s) 확대, 빈곤가구 지원정책(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을 위한 자금조성, 자녀부양 지원 정책으로 나뉘어짐

12)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5 : COBRA법은 종전 고용주의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18개월 동안 퇴직자에게 지속적인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퇴직자는 보험유지 비용 상당액의 102%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함
(<http://waysandmeans.house.gov/media/pdf/110/cobra.pdf>)

라) 지방정부 지원 대책

- 연방정부는 주정부에게 국고보조금(grants-in-aid)을 지급하기 위해 재정안정화펀드(State Fiscal Stabilization Fund) 활용
 - 주·지방정부가 지역개발을 위하여 세제혜택이 있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정책

1) 2008년 2월 경제촉진법(H.R.5140¹³⁾ :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가) 개인과세

- 개인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환급액(tax rebates)은 2007년과 2008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형태(독신 또는 부부합산),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추가로 300 달러의 환급금이 지급됨
 - 기본요건으로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과세소득금액 및 사회보장기여금과 장애기금(veterans disability payments)의 합계액이 3,000 달러 이상인 개인이어야 함
 - 환급액은 독신의 경우 최소 300 달러에서 최대 600 달러, 부부합산의 경우 최소 600 달러에서 최대 1,200 달러임. 다만 개인납세자의 소득금액이 일정수준(독신의 경우 75,000 달러, 부부합산의 경우 150,000 달러)을 초과하는 경우 phase-out 규정이 적용되어 일정비율 만큼 환급액은 감소됨.

13)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h110-5140>

- JCT에 의하면 2008년에 689억 달러, 2009년에 61억 달러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표 II-7〉 환급액 계산방식

	독신	부부합산
환급액	Max(\$300, 납부세액) • 단, 납부세액이 \$600을 초과 시 \$600임	Max(\$600, 납부세액) • 단, 납부세액이 \$1200을 초과 시 \$1,200임
Phase-out 감소액	(소득금액-\$75,000)*5%	(소득금액-\$150,000)*5%
자녀추가환급	자녀 1인당 \$300	자녀 1인당 \$300

자료: Joint Committee on Taxation, <http://www.house.gov/jct/x-16-08.pdf>

나) 법인과세

- 특별감가상각제도는 가속감가상각법(acceleration depreciation)과 즉시상각법(immediate expensing of capital purchases) 2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가속상각법은 2008년의 과세기간에 신규 투자자산에 대하여 50%를 즉시상각으로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다음과세연도부터 잔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일반적인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 즉시상각법¹⁴⁾은 투자금액이 일정금액(종전 12만 8천 달러)보다 작은 경우 일시에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법인데, 이번 경제촉진법에서는 25만 달러로 증액. 단 투자금액이 일정금액(종전 51만 달러)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상각금액은 Phase-out 규정이 적용되며 기준금

14) Section of 179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액을 51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확대

- 감가상각비의 손금인정으로 2008년에 689억 달러, 2009년에 61억 달러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2) 2008년 7월 주택경기촉진법(H.R. 3221¹⁵⁾) :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

- 2008년 7월 31일에 시행된 주택경기촉진법의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2008년에 11.7억 달러, 2009년에는 160억 달러의 조세지출이 수반되지만 2008~2018년까지는 총34억 달러의 순수입이 나타남

가) 개인과세

- 주요한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자가소유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공제, 주택관련 채권에 대한 비과세, 재해지역 주택에 대한 조세지원 등이 있음

〈표 II-8〉 주요한 세액지원 내용(H.R.3221)

구분	내용	금액주
생애첫주택구입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용 주택 구입가격의 10%와 7,500 달러(기혼자의 개별신고의 경우 3,740 달러) 중 적은 금액을 환급 • 환급된 금액은 주택 구입한 연도의 2차년도부터 15년간 국세청에 분할납부 • 납세의무자는 세액공제 적용시점으로부터 3년 전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비과세되는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48.5억 달러

15)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h110-3221>

서브프라임으로 야기된 주택경기 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자, 2008년 2월 하원(House)에서 주택경기 촉진을 위해 발의된 법안(H.R. 3221)이 상원(Senate)에서 7월 11일에 통과된 후 7월 31일에 미국 대통령의 인가를 거침

〈표 II-8〉의 계속

구분	내용	금액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를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 뿐만 아니라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로 신설 • 공제금액은 재산세와 500 달러(부부합산 신고의 경우 1,000 달러) 중 적은 금액 	15.3억 달러
임대주택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세액공제¹⁾의 한도를 2008~2009년에 한시적으로 증액하였는데, 대도시의 경우 거주자 1인당 2.2달러(종전 2달러) 소도시는 종전 2,325,000 달러에서 10% 상향 조정 	10.8억 달러
주택관련 채권 이자에 대한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의 공급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위하여 주 또는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됨 • 법 시행으로 주 또는 지방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채권한도 금액을 110억 달러 증액 	14.7억 달러
길프촉진 지역에 대한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손실액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소득세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H.R. 3221 시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허용 	10억 달러

주: 1) 임대주택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의 거주를 위하여 임대자산을 신축(new construction), 개축(rehabilitation) 등을 하는 소유자에게 임대주택 현재가치의 일정비율(9% 또는 4%) 상당액을 10년간 세액공제로 허용하는 제도임

2) 조세지출 금액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합계액임

자료: Joint Committee on Taxation, <http://www.house.gov/jct/x-64-08.pdf>

3) 2008년 10월 구제금융법(H.R. 1424¹⁶⁾ : Economic Stimulus Relief Bill)

□ JCT의 보고서에 의하면 H.R. 1424의 조세지출규모는 2009년에 1,086억 달러, 2009~2018년 동안 1,10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16)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h110-1424>

가) 개인과세

- 최저한세의 면제금액(AMT exemption amount) 한도를 2007년 66,350 달러에서 2008년 69,950 달러로 증액하고, 이월된 세액공제(unused minimum tax credit) 금액의 사용 비율을 50%(종전 20%)로 확대
- 경영자의 보수는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지만,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RAP)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금인정 한도를 강화
 - 경영자 보수에 대한 세법인정 한도가 기존 10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감소하고, 황금낙하산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손비로 불인정
- 주와 지방정부의 판매세(sales taxes)에 대한 소득공제, 적격강사료와 관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초중등교사의 수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부동산 재산세에 대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일몰규정을 2009년까지 연장
- 자녀세액공제 환급액은 종전 과세소득(earned income)이 10,000 달러를 초과하면 phase-out 되는데, 세법개정으로 1년 동안 8,500 달러로 감액해줌으로써 약 31억 달러의 조세지원 가능
- 납세의무자의 주된 거주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한 채무면제이익 비과세 일몰규정(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금융기관이 발행한 우선주의 처분손익을 세법상 자본손익(capital gain or loss)에서 영업손익(Ordinary income or loss)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자본손실이 자본이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한계를 배제

나) 법인과세

- 재생에너지(renewal energy) 생산 지원을 위하여 세액공제의 일몰규정을 확대하고, 탄소배출 환수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신설
 - 재생에너지세액공제의 일몰규정을 2년(풍력생산 및 석탄정제의 경우 1년)으로, 태양력에너지세액공제와 풍력에너지세액공제 등은 8년으로 연장
 - 탄소배출 환수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산화탄소의 1톤당 20 달러의 공제 허용

- 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디젤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 자전거출근 종업원에 대한 환급 등이 있음
 - 바이오디젤에 대한 세액공제는 종전 1갤론당 50 센트에서 1 달러로 증액하고 일몰규정을 1년 연장함
 - 새로운 하이브리드 자동차(New qualified plug-in electronic drive motor vehicles)에 대하여 2,500 달러에 시간당 4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킬로와트당 417 달러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phase-out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 판매량을 25만대로 함.
 -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종업원에게 발생하는 자전거 취득 및 수선비용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종업원당 20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100만 달러의 조세지출 예상

- 에너지의 효율적 소비 및 절약을 위해서 에너지 고효율 건물에 대한 공제 일몰규정을 1년 연장하고, 고효율 생활제품 세액공제(energy efficient appliance credit)의 범위를 확대

-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2%에서 14%로 상향조정하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일몰규정을 2009년 말까지 연장.

〈표 II-9〉 H.R. 1424 조세지출에 대한 예산효과

(단위: 백만 달러)

내용		2009	2009~13	2009~18
EESA	• 우선주자본손익을 영업손익 처리	2,724	3,322	3,045
	• 경영자 급여에 대한 손금인정 제한	-	-	-
	• 주된 거주 주택에 대한 채무면제의 일몰 확대	-	362	362
	(소계)	2,724	3,684	3,407
EIEA	• 재생에너지세액공제 등에 대한 에너지생산지원	1,536	6,507	10,877
	• 바이오디젤 등 수송국내연료에 대한 세제지원	490	3,157	2,558
	• 에너지보전 및 효율성에 대한 세제지원	355	2,511	3,499
	• 에너지관련 조세수입 증가	-1,305	-5,791	-16,995
	(소계)	1,067	6,996	-61
TEAMTRA	• 최저한세 배제 확대 등	78,889	64,184	64,108
	• 개인소득세 공제에 대한 일몰규정 확대 등	5,884	11,353	11,491
	• 법인세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규정 확대 등	13,957	30,936	36,893
	• 자녀세액공제 등 추가조세면제	4,705	9,099	10,914
	• 재난구제를 위한 세제지원	3,223	7,686	8,813
	• 외국인의 소득 이연에 대한 과세	-1,849	-11,003	-25,161
	(소계)	104,826	112,255	107,058
H.R. 1424의 조세지출 총 합계		108,626	122,935	110,404

자료: Joint Committee on Taxation, <http://www.house.gov/jct/x-78-08.pdf>

4) 2009년 2월 경기부양법(H.R.1: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¹⁷⁾

□ 경기부양법(H.R.1)은 분야별 재량지출액(Division A) 3,084억 달러와 조세 · 실업 · 복지 대책(Division B)으로 4,788억 달러로 구성¹⁸⁾

○ 2월 12일 발표한 JCT의 보고서에 따르면 Division B의 조세부분 총 3,264억 달러는 1,118억 달러의 outlays와 2,146억 달러의 감세부분으로 나뉨¹⁹⁾

〈표 II-10〉 경기부양법(H.R.1)에 반영된 조세수입 예측¹⁾

(단위: 백만 달러)

	2009	2010	2011	2009-13	2009-19
A. 개인 · 가구소득 지원	△25,586	△173,163	△31,175	△229,988	△232,426
B. 에너지 지원	△393	△1,482	△1,539	△6,212	△19,963
C. 법인 지원	△39,918	△35,984	2,208	△60,587	△6,150
D. 제조업 회복 지원	△1	△174	△297	△1,031	△1,850
E. 채권발행 지원	△227	△348	△566	△2,561	△6,501
F. 기반시설 금융지원	△179	△752	△7,085	△6,001	△19,638
G. 주정부의 저소득가구 지원	△3,033	△49	132	△2,209	△74
H. 경기회복 보조금 지원	△14,041	△169	△15	△14,225	△14,225
I. 실직가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	△14,465	△9,628	△1,525	△25,565	△25,585
합계	△97,843	△221,749	△39,862	△348,379	△326,412

주: 1) 조세수입 내역에는 Outlay 금액이 일부분 반영되어 있음

자료: Joint Committee of Taxation, <http://www.house.gov/jct/x-19-09.pdf>

17) 2월 13일(미국 현지시각)에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2월 17일 현재 미국 대통령의 인가만 남겨놓고 있음. <http://www.house.gov/jct/x-19-09.pdf>

18) <http://www.cbo.gov/ftpdocs/99xx/doc9989/hr1conference.pdf>

19) 2월 13일 CBO에서 발표한 보고서상의 Division B의 조세수입 규모는 2,118억 달러와 차이 발생

- Division B에 반영된 세제지원은 2009~19년 동안 3,264억 달러(재정 지출 포함)로 ① 개인소득 지원(71.2%), ② 에너지 지원(6.1%), ③ 법인 지원(1.9%), ④ 제조업 회복지원(0.6%), ⑤ 경기회복을 위한 채권발행 지원(2%), ⑥ 기반시설 금융 지원(6%), ⑦ 주정부의 저소득가구 지원, ⑧ 경기회복 보조금 지원(4.4%), ⑨ 실직가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7.8%)으로 나누어짐²⁰⁾

가) 개인과세

□ Making Work pay Credit 신설

- 연소득 200,000 달러이하인 근로가구에 근로소득의 6.2%와 400 달러(가구: 800 달러) 중 작은 금액은 2009년과 2010년 2년간 환급
 - 총조정후소득(AGI) 금액 75,000 달러(가구: 150,000 달러) 초과하는 경우 환급액은 축소(phase-out)
 - 상·하원 통과하면서 500 달러(가구: 1,000 달러)에서 환급액이 축소
- 개인·가구 소득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도에 77.8%, 2009~2019년에는 50%에 달함

□ 교육지원세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 대학교육비세액공제(HOPE scholarship credit): 2009년의 교육비 지출액(2,000 달러 한도)은 전액 공제하고, 2010년에는 2,000 달러를 초과 금액(4,000 달러 한도)에 25%공제
 - 총조정후소득(AGI) 금액이 80,000~90,000 달러를 초과(가구: 160,000~180,000 달러)하는 경우 Phase-out 규정 적용
- 2009년과 2010년에 한시적으로 컴퓨터 관련 구입비용을 적절한 고

20) <http://www.house.gov/jct/x-19-09.pdf>

등교육비용으로 인정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와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의 2년간 확대

- EITC : 세 자녀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을 45%로 인상
- 자녀세액공제 : 세액공제 적용되는 기준소득 금액을 3,000 달러로 인하

□ 실업보험급여(2,400 달러 한도)를 2009년 과세소득에서 비과세

□ 생애 첫주택세액공제(First-Time Homebuyer Tax Credit) 확대

- 세액공제 한도 금액을 8,000 달러로 인상하고 24개월 이내 주택 처분시 세액공제금액을 환수하던 규정을 36개월로 완화

□ 자동차에 대한 Sales Tax 공제

- 2009년 동안 24,750 달러(가구 : 49,500 달러)를 한도로 신차, 소형트럭, 2륜자동차, 캠프 · 여행용 자동차(motor homes) 구입액의 sale tax를 소득공제
 - 총조정후소득(AGI) 금액이 125,000 달러를 초과(가구: 250,000 달러)하는 경우 Phase-out 규정 적용

나) 법인과세

□ 가속상각법과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 결손금소급공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되 TRAP 지원 받는 기업은 제외
- 가속상각법의 경우 2010년까지 손금효과가 있지만 2011년부터 익

금으로 귀속되지만 2009~19년까지 약 58억 달러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음

- 이월결손금의 소급기간 확대로 2009년에 47억 달러의 세수입이 감소되지만 2010년부터 세수입 증가로 2009~19년까지 약 9.5억 달러 감세효과

□ 재생에너지 및 환경보존세액공제 확대

- 재생에너지 생산품에 대한 세액공제는 3년, 조력발전의 경우에는 2년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세액공제의 한도금액을 폐지
- 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electric motor vehicles)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해 25만대의 한도규정을 50만대로 확대

□ 일자리기회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 확대²¹⁾

-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특정근로계층 대상자에 ‘실직퇴역군인(Unemployed Veteran)’과 ‘disconnected youth’를 적용 대상에 추가.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감세안에 포함되었지만 하원에서 폐기
 - Unemployed Veteran : 2001년 9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에 퇴역한 군인으로서 4주간 주 또는 연방정부의 실업급여를 받은 자
 - Disconnect youth : 고용당시 16세~25세인 자로 6개월간 직업훈련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고용경험이 없는 자 또는 취업을 위한 기술이 없는 자
- 2009년에 3.2억 달러, 2010년에 81억 달러, 2009~19년 기간 동안 약

21) 일자리세액공제(WOTC)는 특정근로계층(복지취약계층, Food stamp 수령자, 저소득 및 장애퇴역군인, 취약지역 출신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임금의 4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1인당 한도 2,400달러를 제공. http://www.taxpolicycenter.org/taxtopics/recoveryreport/unemployed_veterans.cfm)

23억 달러의 감세효과 예측

□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²²⁾

- 2008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1월 1일 전까지 채권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은 8년 이후에 과세소득으로 산입
- 2009년에 121억 달러, 2010년에 228억 달러, 2011년에 75억 달러의 세수감소를 초래하지만 이연시점 이후 과세되어 2009~19년 기간에 총 16억 달러의 감세효과 예측

〈표 II-11〉 미국의 경기대응 조세·재정정책

법안 통과/시행 시기	법안 내용	재정 규모/기간
2008.2	Economic Stimulus Act 2008 - 개인 및 법인 세액환급 - 가속 감가상각 등	- 조세지원 : ('08~'13) \$1,339억 - '08: \$1,517억, '09: \$160억 이후 재정수입 증가
2008.7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2008 - 주택소유 보호 관련 기금창설, 감독기구(FHFA) 설립 및 규제강화 - 주택구입세액공제, 재산세 공제 등	- 조세지원 : ('08~'13) \$1,339억 - '08: \$1,517억, '09: \$160억 이후 재정수입 증가
2008.10	Economic Stimulus Relief Bill - 부실자산 구제(매입, 보증) - 에너지효율향상 관련 조세지원, 각종 소득/세액공제 확대 등	- 재정규모:('09~'13) \$8,229억 - '09: (재정) \$7,000억 (조세) \$1,086억, '10:(조세) \$36억
2009.2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 개인 직접적인 지원금과 Making Work Pay tax credit -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지원, 결혼금 확대 등 - 실업 지원정책과 인프라구축, 과학, 의료비와 교육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 재정규모 : ('09~'19) \$7,872억 - '09: (재정) \$1,201억 (조세) \$648억, '10: (재정) \$2,193억 (조세) 1,801억

22) Deferral and Ratable inclusion of Income arising from indebtedness discharged by the repurchase of a debt instrument

〈표 II-12〉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경기부양 논의(Economic stimulus plan)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경기부양 논의(Economic stimulus plan) ²³⁾
<p>1)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침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오바마 당선자는 경기부양안을 마련하고, 의회에 지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음 ○ 약 6,750억~7,750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기부양안은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감세안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이 경기부양안의 핵심내용임 - 개인과 법인에 대한 감세안의 규모가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임 ○ 양당(공화당과 민주당)의 총수는 오바마의 경기부양안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지만, 민주당의 많은 의원은 대규모 감세안 통과에 유보적 입장을 표시하여 법안 통과에 난항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바마 진영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인 1월 20일 이후 몇주 내로 법안통과를 원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2월 중순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 <p>2) 감세안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부양책에 반영될 3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안으로 ① 중산층에 대한 조세지원, ② 고용증진에 대한 세액공제, ③ 소기업과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음 □ 중산층에 대한 조세지원(Tax relief for Middle-class American)으로는 근로지원 정책과 연계된 세액공제로 오바마의 대선공약에도 언급된 내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ing Work Pay tax credit :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인 근로가구에 연 1천 달러(근로자의 경우 500 달러)를 원천징수 금액 감소를 통해 환급 - 근로가구의 약 95%인 150만 가구에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2년간 약 1,400억 달러의 재정지출 수반 ○ 민주당에서는 경기부양책에 자녀세액공제 확대, 수업료에 대한 소득공제 증액 등의 반영을 추가로 요구

23) Phillip Rucker, "Obama Tax Cuts Likely Very Soon," The Washington Post, Dec. 29, 2008, p. A4.
 Tax Notes, "Obama Lobbies for Recovery Plan with Massive Tax Cuts," Jan.12, 2009, p.182
 오바마 대선공약집, <http://www.barackobama.com/pdf/ObamaBlueprintForChange.pdf>
 전병목, 「오바마 美 대선 당선자 공약 검토(조세분야)」, 조세·재정 BRIEF, 한국조세연구원 08-03호

〈표 II-12〉의 계속

- 고용 촉진과 감원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기업에게 고용증진세액공제 (new hire tax credit)를 허용
 - 1년간 새로 고용된 종업원 1인당 3천 달러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로, 약 400억에서 500억 달러의 재정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
 - 고용증진세액공제가 경기불황에 따른 수익감소를 겪고 있는 기업에게 신규인력채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
- 소기업(small business)과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50%의 추가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가속상각법을 2년 연장하고,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오마바의 대선공약에 언급된 것으로 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하여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비과세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500달러의 Making Work Pay credit를 허용
 - 법인세율 인하정책도 경기부양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2. 캐나다

가. 경제동향

	GDP (10억캐나다달러)	GDP증가율 (%)	재정수지 (GDP대비 %)	환율(CAD/US\$)	
				기말	평균
2003	1,214.60		-0.1	1.29	1.40
2004	1,290.18	6.22	0.9	1.20	1.30
2005	1,368.73	6.09	1.5	1.16	1.21
2006	1,439.29	5.16	1.3	1.17	1.13
2007	1,531.43	6.40	1.4	0.99	1.07
2008Q1	1,576.07		0.3	1.03	1.00
2008Q2	1,616.23			1.02	1.01
2008Q3	n.a.			1.06	1.04
2008Q4	n.a.			n.a.	n.a.

	이자율					CPI	실업률 (%)	주가지수 (TSX)
	시장 금리	재무성 증권 수익률	예금 금리	대출 금리	공채 수익률 (3~5년)			
2003	2.93	2.87	1.10	4.69	3.88	107.73	7.60	
2004	2.25	2.22	0.78	4.00	3.67	109.73	7.19	9,246.65
2005	2.66	2.73	0.79	4.42	3.50	112.16	6.80	11,272.30
2006	4.02	4.03	1.83	5.81	4.10	114.41	6.29	12,908.40
2007	4.34	4.15	2.08	6.10	4.21	116.86	6.00	13,833.10
2008Q1	3.82	2.91	1.78	5.58	3.23	117.64	n.a.	
2008Q2	3.01	2.71	1.55	4.75	3.21	120.05	n.a.	
2008Q3	3.00	2.27	1.55	4.75	3.14	n.a.	n.a.	
2008Q4	n.a.	n.a.	n.a.	n.a.	n.a.	n.a.	n.a.	8,830.72

주: 1. GDP는 경상수치임.

2. 주가지수는 종가기준임.

3. 대출금리는 90일 만기 자국화폐 예금금리, 대출금리는 최우량 대기업 대출금리

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8.11., IMF.

재정수지자료는 OECD Economic Outlook 84 database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신청, 메릴린치·AIG 구제자금 요청에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하여 캐나다는 정부 개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으나 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됨에 따라 다음 과정을 통하여 2009년 예산에 경기부양책을 반영하기에 이룸²⁴⁾
 - 2008년 10월 스티븐 하퍼 수상은 각 주정부 대표와의 회의에서 사회간접자본(인프라)예산 확대를 통한 금융위기 대책을 논의
 - 2008년 10월 연방정부는 수출지원 확대방안으로 수출보험공사(EDC)에 20억 캐나다달러를 지원
 - 2008년 11월 산업부 장관은 북미 자동차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과 공동 구제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2008년 11월 산업부는 산업개발은행(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
 - 2009년 1월 27일 발표된 2009년 예산안에 4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2009~2010년 경기부양책을 포함시킴
 - 의회승인 과정을 남겨두고 있으며 캐나다의 집권당인 보수당은 소수여당으로서 의회 통과에 논란이 예상

1) 2008년 11월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²⁵⁾

-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법제화는 2009년 예산안을 통하여 확정되는 것이지만, 정부의 소극적 개입과 균형예산을 견지하던 캐나다정부가 적자예산을 통해서라도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로 입장을

24) www.globalwindow.org 캐나다 관련 소식을 재정리

25) www.globalwindow.org

전환

가) 자동차산업구제책

- 북미 자동차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과 공동 구제금융지원
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
 - 보수당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퀘벡주 자동차산업을 보조하기 위
해 4억 5천만 캐나다달러의 보조금을 책정하였으나 구제방안에 대
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음
 - 향후 5년간 2억 5천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기업의 하이브리드
차, 고연비엔진 등 친환경 자동차 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
록 보조함

나) 인프라 예산 확대

- 각 주정부 대표와의 회의에서 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를 통한 금융위
기 대책을 논의
 - 다른 정책보다 정부의 인프라 예산증가를 통한 사회 공공시설 개선
및 확장이 가장 빠른 해결책임을 강조
 - 인프라 예산으로 최소 370억 캐나다달러를 책정했고, 일부 예산은
이미 진행중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있음

다) 수출지원

- 2008년 11월 산업부는 산업개발은행(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
 - 산업부는 산업개발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지원 기금을 97억 캐나다
달러에서 115억 캐나다 달러로 상향조정

- 연방정부는 캐나다 수출보험공사에 20억 캐나다 달러를 승인하여 캐나다 기업의 수출을 지원
 - 캐나다 산업개발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지원 확대방안과 수출보험 공사의 추가 수출지원은 캐나다 수출지원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

2) 2009년 1월 예산안 2009²⁶⁾

- 캐나다는 그동안 재정적자를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해왔으나, 2008년 경제위기 후에 2009년 예산안에는 사회 기반시설투자 등의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 계획하고 있음
- 2009년 예산안은 첫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조치와 민간투자 확대 증진, 둘째, 사회간접자본 즉각 신규투자, 셋째, 금융제도의 안정적인 보호, 넷째, 기업체와 소비자가 신용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 확보, 다섯째, 임업, 제조업, 자동차산업, 관광업, 농업을 포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지원, 여섯째, 실업자, 저소득층, 노인, 원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09년 예산안 중 경제위기와 관련된 부분은 경제행동조치로 구별되어 있음
- 경제행동조치의 기간별 예산
 - 4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하여 2009~2010년에 걸쳐 총 516억 캐나다달러규모의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26) www.cra-arc.gc.ca 캐나다 재무부 홈페이지 참조

-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되는 약 78억 캐나다달러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는 약 15억 캐나다달러이며, 사회간접자본으로 투자되는 약 120억 캐나다달러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는 약 90억 캐나다달러이고, 기업과 커뮤니티에 보조하는 약 75억 캐나다달러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는 약 13억 캐나다달러임

〈표 II-13〉 경제행동조치의 규모 및 내역

	2009	2010	total
	(millions of dollars-cash basis)		
Action to Help Canadians Stimulate Spending	5,880	6,945	12,825
- Measures for low-income households	2,030	2,110	4,140
- Other spending measures-training	648	686	1,334
- Other spending measures-others	175	228	402
-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818	1,631	2,449
- Personal income tax measures	2,210	2,290	4,500
Action to Stimulate Housing Construction	5,365	2,395	7,760
- Housing investment measures	4,365	1,395	5,760
- Infrastructure investment-municipal	1,000	1,000	2,000
Housing leverage	725	750	1,475
Immediate Action to Build Infrastructure	6,224	5,605	11,829
- Infrastructure-provinces and municipalities	3,195	3,195	6,390
- Infrastructure-First Nations	260	255	515
- Infrastructure-knowledge and information	1,786	1,351	3,137
- Infrastructure-federal	983	804	1,787
Infrastructure leverage	4,532	4,365	8,897
Action to Support Businesses and Communities	5,272	2,255	7,527
- Infrastructure investment	30	30	60
- Other spending measures-sectoral	4,342	1,431	5,773
- Other spending measures-training	7	13	20
- Other spending measures-research	100	100	200
- Other spending measures-others	262	180	442
- Personal income tax measures	70	-15	55
- Corporate income tax measures	461	516	977
Sectoral leverage	1,300	-	1,300

〈표 II-13〉의 계속

	2009	2010	total
Total federal stimulus	22,742	17,200	39,942
Total stimulus(with leverage)	29,298	22,316	51,613
As a share of GDP(%)			
Total Federal Stimulus	1.5	1.1	
Total Stimulus(with leverage)	1.9	1.4	

자료: 캐나다 재무부 홈페이지 『Budget 2009』 P.69

가) 민간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고 캐나다 금융시스템을 강화

- 이를 위하여 보증보험구입(Insured Mortgage Purchase Program)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하여 차입자가 지속적인 차입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동성 공급, 캐나다정부의 금융관련 규정의 정비,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강화를 포함

나) 캐나다 국민을 보조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 이를 위하여 고용보험 등에 대한 근로자혜택을 증가시키거나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고용보험 요율을 동결
 - 저소득가정에 대한 국가적인 아동지원정책(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의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

다)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조치

- 이는 과세면제와 자금차입(funding)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 사회주택에 대한 투자(78억 캐나다달러)
 - 친환경 개조(ecoENERGY retrofit program)에 대한 지원 : 2년에 걸쳐 3억 캐나다달러

-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액 증가 : 20,000 캐나다달러 → 25,000 캐나다달러
- 사회주거시설에 대한 개선 : 2년에 걸쳐 10억 캐나다달러
-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 건립 : 4억 캐나다달러
- 지방자치 정부의 상하수도 같은 주거시설을 위한 인프라 확장을 도모 : 20억 캐나다달러

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치

-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년(2009~2010)에 걸쳐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로 약 12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할 계획
 - 인프라 구축은 현대화와 환경친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 및 학교 등 사회시설, 연구개발시설, 철도 등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계획이 포함됨(65억 캐나다달러)
 - 도로, 교량, 하수구 시설 등 개선 및 관리공사가 필요한 시설 : 40억 캐나다달러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보조하기 위한 그린 인프라펀드 : 10억 캐나다달러
 - 하키장, 축구필드, 수영장 등 레크리에이션 시설 개선 : 5억 캐나다달러
 - 지역기금을 위한 착수금으로 즉시 착공 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 : 10억 캐나다달러
 - 캐나다 원주민 사회의 교육시설, 상수시설, 커뮤니티 서비스를 확대 및 개선(5억 1,500만 캐나다달러)
 - 대학교 시설 개선 및 확장을 위한 20억 캐나다달러를 책정하였고, 그 외 연구시설, 실험시설 같은 기타 지식기반 시설(18억 6천만 캐나다달러)

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 ☐ 단기조치로서 임업에 대한 지원(2년에 걸쳐 1억 7천만 캐나다달러), 농업에 대한 지원(5억 캐나다달러), 축산업에 대한 지원(3년에 걸쳐 5천만 캐나다달러)등 경제위기로 취약해지기 쉬운 업종에 대한 다양한 지원조치를 계획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청정에너지펀드 등에 지원 계획
 - 캐나다 소기업 금융프로그램과 캐나다 산업개발은행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소기업을 지원하고 캐나다 신생사업체 및 사업네트워크에 지원계획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원계획
 -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커뮤니티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조(2년에 걸쳐 10억 캐나다달러)

바) 고용시장보조

- ☐ 고용시장 안정과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실직자 고용보험 수령, 실직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설 확대(15억 캐나다달러)
- ☐ 2년 동안 실직자 고용보험 최대 수령기간을 45주에서 50주로 확대
- ☐ 구직자가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확대(5억 캐나다달러)

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정책

- ☐ 앞서 재정정책 중 2008년 11월 실물경제 활성화방안은 세제지원과 같

은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세제정책에 대한 설명에서는 제외하였고 2009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함

1) 2009년 1월 예산안 2009²⁷⁾

가) 개인과세

- 캐나다 국민을 보조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과세 면제
 - 2008~2009년 및 이후 5년에 걸쳐서 개인소득세 200억 캐나다달러를 과세 면제할 계획
 - 비과세 소득인 최저 개인소득(basic personal amount)과 저소득층에 대한 과세구간의 금액을 2008년 대비 7.5% 인상할 계획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혜택을 통한 세액감소 계획
 - 고령자공제를 1천 캐나다달러로 증가시켜 중산층 고령자에 대해 연간 150 캐나다달러의 세절감 혜택
- 캐나다 국민의 저축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 새로운 비과세 저축계정을 운용하여 캐나다 국민이 1년에 5천 캐나다달러를 해당 계정에 저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소득세법 18.2조에 이자공제한도를 폐지
 - 자본이득이나 해당 계정을 통해 벌어들인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저축에 대한 인출에도 과세하지 않음
 - 개인소득세를 경감하기 위해 2009~2010년에 연간 저축액에 대하여 2억 캐나다달러에 상당하는 세액환급을 보증

27) www.cra-arc.gc.ca 캐나다 재무부 홈페이지 참조

□ 주택건설촉진

- 주거시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감세방식으로 한시적인 주택개조 세액공제(한가정당 최대 1,350 캐나다달러)

나) 법인과세

- 최저 소득세율을 16%에서 15%로 낮추었고, 최저 법인세율은 2007년에 22.12%(법인세에 부가되는 세를 포함)에서 2012년에 15%까지 인하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 3년 동안 장비와 기계의 투자에 대하여 가속상각충당금(accelerated capital cost allowance)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정액법 상각액의 50%를 상각하는 가속감가상각충당금제도를 1년 연장하여 2011년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
- 장기적 관점에서 캐나다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27일부터 2011년 2월1일 이전에 취득한 컴퓨터에 대하여 일시적인 100% 자본비용공제를 실시할 계획
- 기계와 장비에 대한 관세를 5년간 면제(4억 4천만 캐나다달러의 조세지원규모임)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 자동적인 비용공제와 과세혜택을 위한 기장의무를 감소시켜 납세 비용을 낮춤
- 소규모사업의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 11%의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체의 소득기준을 400,000 캐나다달러에서 500,000 캐나다달러로 인상

다) 소비과세

- 중앙정부는 조세시스템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가 일반법인소득세(general corporate income tax rate)를 10% 수준으로 경감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유해한 소매판매세(harmful retail sales taxes)를 물품세(good and service tax)와 조화를 이루는 부가가치세로 대체하여 캐나다의 제조업자가 개입된 사업에 대한 세금을 경감할 것임

〈표 II-14〉 캐나다의 경기대응 조세·재정정책

법안통과/ 시행시기	정책내용	재정 규모/기간
2009. 1 (발표)	Budget2009 - 법인소득세율을 16%→15%로 인하 - 인적공제액 인상 및 하위 과세구간 확대 - 인하된 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소기업들을 확대 -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확대 - 경제위기에 취약한 특정업종 지원	- 지원규모 : ('09~'10)C\$ 400억 - '09: C\$ 227억, '10: C\$ 172억

3. 영국

가. 경제동향

	이자율		CPI	주가지수 (FTSE 100)
	재무성증권 수익률	대출금리		
2003	3.55	3.69	106.50	
2004	4.43	4.40	109.66	4,814.30
2005	4.55	4.65	112.76	5,618.80
2006	4.65	4.65	116.36	6,240.90
2007	5.52	5.52	121.34	6,476.89
2008Q1	5.01	5.33	123.99	5,702.11
2008Q2	4.96	5.00	126.46	5,625.90
2008Q3	n.a.	n.a.	127.68	4,902.45
2008Q4	n.a.	n.a.	n.a.	4,392.68

주: 1. n.a. = not applicable

2. GDP는 경상수치

3.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의 OECD 자료

4. 대출금리는 런던 어음교환조합은행 최저 기준금리

5. 주가지수는 종가기준

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8, 11., IMF, OECD Economic Outlook 84, 2008
<http://www.krx.co.kr/index.html>, 네이버증권 <http://stock.naver.com/world/>,
 야후금융 <http://finance.yahoo.com/intlindices?e=americas>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 재정전망

- 영국정부의 경상재정수지는 2008~2009년 GDP 대비 -2.8%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2009~2010년 -5.3%까지 하락하였다가 2010~2011년부터는 재정적자 폭을 줄어나갈 것으로 전망
- 순자본투자는 2008~2009년 GDP 대비 2.5%이며, 2009~2010년 2.7%

까지 확대되었다가 2010~2011년 이후부터는 2% 안팎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공공부문 순국가채무는 2007~2008년 GDP 대비 36.3%였던 것이 계속 증가하여 2009~2010년 48.2%에서 2013~2014년 57.4%까지 증가 추세를 유지

〈표 II-15〉 영국 일반정부 부문 예산 총량

(단위: GBP 10억, %)

경제전망	Outturn 2007-08	Estimate 2008-09	Projection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경상재정수지 (GDP 대비 %)	-6.7 (-0.5)	-41.2 (-2.8)	-78 (-5.3)	-73 (-4.7)	-54 (-3.3)	-37 (-2.2)	-21 (-1.1)
순자본투자 (GDP 대비 %)	29.9 (2.1)	36.5 (2.5)	40 (2.7)	33 (2.1)	33 (2.0)	33 (1.9)	33 (1.8)
순정부부채 (GDP 대비 %)	36.6 (2.6)	77.6 (5.3)	118 (8.0)	105 (6.8)	87 (5.3)	70 (4.1)	54 (2.9)
공공부문 순국가채무 (GDP 대비 %)	526.8 (36.3)	602.0 (41.2)	729 (48.2)	842 (52.9)	938 (55.6)	1,020 (57.1)	1,084 (57.4)

자료: 영국 『Pre-Budget Report』(2008) Annex B : The public finances

1) 2008 예비예산안상 경기부양책

- 달링 장관은 지난 2008년 11월 24일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8 예비예산안(2008 Pre-Budget Report)을 의회에 제출

- 예산기조별 주요 경기부양 정책은 아래 표와 같음

- 영국은 금융시장, 기업, 가계 등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음

재정건전성 확보				
금융시장 안정	기업지원	가계지원	공공서비스 개선	저탄소 녹색성장

○ 예비예산안상 재정정책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II-1] 예비예산안상 정책의 재정효과

	£ million			
	2008-09	2009-10	2010-11	2011-12
Measures announced since Budget 2008¹				
Personal allowance and basic rate limit changes for 2008-09	-2,650	-270	+90	0
September housing package: spending measures	-200	-645	+865	0
SDLT holiday for residential homes	-130	-150	0	0
Local Housing Allowance: cap benefit at 5 bedroom rate	0	+5	+15	+15
Class 3 NICs: Pensions Bill amendment	0	+230	+10	+10
Supporting the economy and ensuring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VAT rate reduction	-3,800	-8,600	0	0
Alcohol duties: increase in rates	+160	+640	+645	+675
Tobacco duties: increase in rates	+115	+340	+360	+365
Capital spending brought forward	-365	-2,545	+2,910	0
Indexation of personal allowance and basic rate limit	0	-2,930	-3,310	-3,270
£130 increase in personal allowance in 2009-10 and 2010-11	0	-630	-770	-100
Freeze basic rate limit in 2011-12	0	0	0	+180
Restrict personal allowance by half from £100,000 and to zero from £140,000 from 2010-11	0	0	+830	+1,320
Additional higher income tax rate of 45% above £150,000 and raise trust rate to 45% from 2011-12	0	0	0	+670
Align the NICs primary threshold with personal allowance in 2011-12	0	0	0	-1,610
Increase main employee NICs rate by 0.5% from 2011-12	0	0	0	+2,050
Increase additional employee NICs rate by 0.5% from 2011-12	0	0	0	+440
Increase employer NICs rate by 0.5% from 2011-12	0	0	0	+2,650
Increase main self-employed rate of NICs by 0.5% from 2011-12	0	0	0	+170
Increase additional self-employed NICs rate by 0.5% from 2011-12	0	0	0	+80
Public spending: additional value for money savings	0	0	+5,000	+5,000
Supporting business				
Foreign profits	0	+75	+25	-275
Loss carry back: temporary extension	-10	-175	-20	+15
Small Companies Rate of corporation tax: defer increase to April 2010	0	-20	-460	-130
Rates on empty property: temporary exemption	0	-185	+10	0
Backdated business rates bills	-80	-55	+25	+20
Income shifting: defer action	0	-25	-260	-200
Insurance claims equalisation reserves	-15	-35	-35	-35
Helping people fairly				
Child benefit: bring forward uprating from April 2009 to January 2009	-170	0	0	0
Child element of Child Tax Credit: bring forward £25 increase from 2010 to April 2009	0	-190	0	0
DWP Job Centre Plus funding ²	0	-400	-400	0
Uprating of pension credit above indexation	0	-260	-300	-310
Additional payment to pensioners and others	-900	0	0	0
Freeze pension lifetime and annual allowance from 2011-12 for 5 years	+25	+100	+200	+400
Index housing benefit disregard in tax credits	0	-5	-5	-5
Support for mortgage interest	-30	-15	0	0
Further support for debt advice	-5	-10	-5	0
Protecting revenues				
Change of Accounting Practice Regulations	0	+10	+15	+15
Enhance tax avoidance disclosure regime	0	+10	+15	+10
Delivering on environmental goals				
Air passenger duty	0	-60	-160	-50
Vehicle excise duty - cars and vans	0	-465	-515	-545
Vehicle excise duty - heavy goods vehicles	0	-10	-10	-10
Fuel duty	-180	0	0	0
Additional spending on Warm Front	-50	-50	0	0
Capital allowances: business cars	0	+10	+10	+5
Other policy decisions				
Addition to DfL reserve	-1,000	0	0	0
TOTAL POLICY DECISIONS	-9,285	-16,330	+4,775	+7,550
Memo: Resetting APM margin	0	-1,000	-2,000	-2,000

¹ Castings shown relative to an indexed base.

² Castings reflect Pre-Budget Report economic forecast and assumptions.

³ Yield increases due to lagged effects of self-assessment. For 2011-12 onwards, yield is £970 million / £1650 million / £1600 million.

⁴ The remainder of the employment package totalling £1.3 billion announced in Chapter 3 is funded from DWP End of Year flexibility.

자료: 영국 『Pre-Budget Report』(2008) p.10.

가) 재정건전성 확보 정책

- 세계적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정부가 당면한 정책과제는 기업 및 가계를 지원하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가가치세율을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5%p 한시적으로 인하(17.5%→15%)
 - 이로써 소비자 지출 GBP 125억이 절감되는 효과 기대
 - 공공투자 스케줄 조정
 - 2010~2011년에 계획된 공공투자 예산 GBP 30억을 경제적 위기로 인한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2008~2009년 및 2009~2010년으로 앞당겨 시행

- 하지만 장기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of the public finances)을 확보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정부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이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음
 -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율 인상
 - 2011년 4월부터 연소득이 GBP 150,000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0%→45%)
 -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세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에 제한
 - 2010년 4월부터 연소득이 GBP 140,000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GBP 100,000 ~ GBP 140,000 구간에 있는 경우 기본공제액을 감액
 - 사회보장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인상
 - 경제가 회복되어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1년 4월부터 0.5% 인상

- 또한 균형재정을 위해 정부는 재정안정법(Code for fiscal stability)에 따라 재정정책에 대한 한시적인 운영규칙을 신설함

나) 금융시장 안정 정책

- 금융시장 위기에 따른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정책은 다음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 지원 및 신뢰 회복
 - 예금자의 예금보호
 - 납세자의 이익보호
- 2008년 9월 금융시장의 위기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전체 은행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정부는 그 조직적인 붕괴를 막고자 다음의 정책을 단행한 바 있음
 - 첫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GBP 2,000억을 은행의 특별 유동성계획(Special Liquidity Scheme)에 투입
 - 둘째, 지급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약 GBP 500억을 은행 자본확충기금(Bank Recapitalization Fund)에 투입
 - 셋째, 자금조달 관련 신용보증제도(credit guarantee scheme)를 도입
-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대외정책으로 다음을 계획하고 있음
 - 2009년 G20 의장으로서 국제적 금융규제제도의 미래를 위한 선결 문제를 신속히 진행
 - 은행의 국제적 영업활동에 대한 감독 및 예금자보호와 관련하여 EU가 금융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함

○ 금융센터로서 장기적인 기회 및 도전을 검토

□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내정책으로는 다음을 계획하고 있음

- 폭넓은 경제적 지원을 위해 기업 및 가계에 적절한 수준의 대출 심사 등 금융시스템 감시
- 금융당국의 은행 그룹지주회사 상대능력 강화 및 투자회사의 지급 능력 향상을 위해 은행어음 강화
- 지분자본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도입

다) 기업지원 정책

□ 기업은 금융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금융시장 안정 정책은 이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또한 부가가치세율의 한시적 인하 역시 경제침체기 동안 기업에 큰 지원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이 외에도 정부는 기업의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지원정책으로 다음을 계획하고 있음

- 신용제약에 직면한 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 소기업 재정계획(Small Business Finance Scheme)을 통해 소규모 수출업자에 대해 GBP 10억의 은행 대출 지원
 - 기업부채의 지분(equity)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GBP 5,000만의 자금 지원
 - GBP 2,500만의 지역 대부자금 지원
- 국세청에 기업 납세지원서비스(Business Payment Support Service) 도입

- 일시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급계획에 따른 세금납부 허용
 - 결손기업을 대상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완화
 - GBP 50,000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 확대 (1년 → 3년)
 - 계획된 세법개정 중 일부를 조정
 -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율 인상(21% → 22%)의 적용시점을 연기
 - 비행기세(per-plane tax)를 유지하는 대신 비행기승객세(air passenger duty)를 개정
- 또한 정부는 영국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장기정책을 발표함
- 대기업 및 중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배당 면세제도의 도입 등 국외이익에 대한 과세 조정
 - 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ies)에 대한 반조세회피 규정을 영토적 접근법(territorial approach)에 따라 검토
 - 중소기업의 정부계약에 대한 접근성 제고
 - GBP 20,000을 넘는 모든 정부 계약에 대해 온라인 포털을 이용하도록 함
 -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
 - 지방당국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라) 가계지원 정책

- 정부는 경제적 위기로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지목하여 이를 대상

으로 한 정책을 발표함

□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 2008년 5월에 발표한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 인상(GBP 600)을 영구화하고, 추가적으로 GBP 130을 더 인상
 - 이로써 기본세율 구간의 납세자(basic rate taxpayers)는 2009~2010년에 한 해당 GBP 145의 세금을 절감하게 됨
- 4월에 예정되었던 자녀양육비보조금(child benefit) 인상을 1월로 앞당기며, 이로써 가정에 평균 GBP 22의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
 - 보조금 지급액은 자녀가 하나이거나 첫째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주당 GBP 20, 둘째 자녀부터는 주당 GBP 13.2임
-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의 자녀당 공제금액을 2009년 4월부터 물가지수가 조정된 공제금액보다 GBP 75를 더 인상
 - 이는 2010년 4월에 예정된 공제금액 인상분 GBP 25가 추가된 금액임
- 새해에 모든 연금수령자에 대해 GBP 60을 지급
 - 이는 4월에 예정된 기초연금 인상분을 1월로 앞당긴 것임

□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계를 지원하는 정책

- 대출 심사원단(Lending Panel)을 도입하여 가계 및 기업의 대출 심사를 개선
- 어려움에 처한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를 담보구제(mortgage rescue) 및 담보이자제도(Mortgage Interest scheme)를 통해 지원
- 주택소유자가 체납하는 경우 적어도 3개월 내에는 회수절차를 취하지 않도록 함
- 정부 자금조달을 통해 무료 부채 상담

□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실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GBP 13억을 추가적으로 투입
- 국가 고용 파트너십(National Employment Partnership)을 통해 정부 및 고용주가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
- 소규모 및 대규모 실업을 대상으로 한 즉각 대응 서비스(Rapid Response Service) 확대 및 단기 실업에 초점을 둔 지역 고용 파트너십(Local Employment Partnership) 확대

마) 공공서비스 개선 정책

□ 과거 10년간 기록적인 공공투자를 통해 영국의 학교, 병원 기타 공공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음

- 2008 예비예산안에서 역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높은 수준의 투자는 유지할 계획임

□ 특히 단기적으로는 세계적 경제위기로 타격을 받은 개인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투자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2010~2011년 회계연도에 잡힌 공공투자 예산 GBP 30억을 2009~2010년 및 2008~2009년에 앞당겨 시행
 - 이를 고속도로 개선, 공영주택 건설, 학교시설 보수 등에 긴급 투입하여 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실업자의 일자리 복귀를 지원하는 Jobcenter Plus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 담보이자제도(Mortgage Interest Scheme)에 대한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을 위한 소기업 금융제도(Small Business Finance Scheme) 도입

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및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정책의 선결과제로 평가되고 있음
 - 과거 3년간 저탄소 분야에 대한 투자는 GBP 500억을 육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법안(Climate Change Bill)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목표배출량 등 법적 장치를 제안하고 있음
- 2008 예비예산안에서 역시 정부는 저탄소 성장을 지원하는 등 장기적인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함
 -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투자 예산 중 GBP 5.35억을 에너지 효율사업, 철도교통 등에 투입
 - 2012년부터 EU 배출가스 거래제도(EU Emissions Trading Scheme)에 비행기를 포함하고 2008년 11월 19일 탄소경매 실시
- 또한 경제적 위기와 맞물려 개인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정책을 다음과 같이 유연하게 조정함
 - 신규차량에 대해 연료 효율을 반영하여 자동차 소비세(vehicle excise duty) 부과
 - 단, 모든 차량에 대해 세율인상폭을 2009년 GBP 5, 2010년 GBP 30 이하로 줄임
 - 그리고 2010년 이후에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폭을 기존에 계획했던 최대 GBP 90에서 GBP 30으로 축소
 - GBP 68억의 주택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통해 600,000개의 단열재 설치
 - 이 중 절반은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계획

- 동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으로 한 해당 GBP 300의 가계 에너지비용이 절감되고 탄소배출량 역시 감소될 것으로 기대
- 비행기승객세(air passenger duty)를 2009년 11월 1일부터 개정
 - 경제적 불확실성 시기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비행기세(per-plane tax)는 유지하지 않을 계획

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정책

1) 2008 예비예산안상 경기부양책

- 재무장관 Alistair Darling은 지난 2008년 11월 24일 2008 예비예산안(Pre-Budget Report 2008)을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세제정책을 발표함

가) 개인과세

-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 2008년 5월에 발표한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 인상(GBP 600)을 영구화하고, 추가적으로 GBP 130을 더 인상
 - 기본공제액 인상으로 기본세율 구간 적용납세자에 대해 2009~2010년 한 해당 GBP 145의 개인소득세 감소효과가 기대됨
 - 2009년 4월에 예정되었던 자녀양육비보조금(child benefit) 인상을 1월로 앞당김
 - 이는 가구당 평균 GBP 22의 효과
 -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의 자녀당 공제금액을 2009년 4월부터 물가지수가 조정된 공제금액보다 GBP 75를 더 인상
 - 이는 2010년 4월에 예정된 공제금액 인상분 GBP 25가 추가된 금액임

- 2009년 4월까지 지급 예정이었던 연소득이 GBP 40,000 이하인 가구에 대한 연간 GBP 120의 세금환급금(tax rebate)을 영구화

□ 재정건전성을 위한 선별적인 증세 방안

- 2011년 4월부터 연소득이 GBP 150,000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0% → 45%)
 - 또한 GBP 150,000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적용세율 인상(32.5% → 37.5%)
- 2010년 4월부터 소득규모에 따라 개인소득세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에 제한
 - 연소득이 GBP 140,000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GBP 100,000 ~ GBP 140,000 구간에 있는 경우 기본공제액을 감액
- 사회보장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인상
 - 경제가 회복되어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1년 4월부터 0.5% 인상하되, 사회보장기여금이 부과되는 소득금액 최저한 또한 인상

나) 법인과세

□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율 인상(21% → 22%)의 적용시점을 연기
 - 기존에 계획했던 2009년 4월 1일 대신 2010년 4월 1일부터 적용
- 국세청에 기업 납세지원서비스(Business Payment Support Service)를 도입하여 일시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급계획에 따른 세금납부 허용

- 이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납부에 대해 적용
- GBP 50,000을 한도로 결혼금 소급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 이는 2008년 11월 24일부터 2009년 11월 23일 중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발생한 결혼금에 대해 적용
- 대기업 및 중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법인의 국외이익에 대한 과세 조정
 - 대기업 및 중기업이 수취하는 국외 배당에 대해 그 지분율에 관계없이 과세면제
 - 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ies)에 대한 반조세회피 규정을 영토적 접근법(territorial approach)에 따라 검토

다) 소비과세

- 부가가치세율을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17.5% → 15%)
 - 따라서 2010년 1월부터는 17.5%의 세율로 복귀
- 하지만 담배, 알코올, 석유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인상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인상분을 상쇄할 계획
 - 따라서 해당 품목의 최종소비자가격은 변동이 없을 예정
- 자동차소비세(vehicle excise duty)
 - 신규 차량에 대해 연료효율을 반영하여 자동차소비세 부과
 - 단, 경제적 위기를 반영하여 2009년 세율 인상폭을 GBP 5 이하로

축소

○ 2010년 이후에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증가

- 단, 경제적 위기를 반영하여 인상폭을 기존에 계획했던 최대 GBP 90에서 GBP 30으로 축소

〈표 II-16〉 영국의 경기대응 조세·재정정책

법안통과/ 시행시기	정책내용	재정규모/기간
2008.11 (의회제출)	<p>2008 Pre-Budget Report</p> <p>1) 재정건전성 확보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인상, 개인소득세 기본공제 제한 - 사회보장기여금 인상 등 <p>2) 금융시장 안정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스템 감시, 은행어음 강화, 자본자본 조달 촉진 등 <p>3) 기업지원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율 한시적 인하(17.5%→15%: 2008.12.1~2009.12.31) - 신용제약에 직면한 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 소기업에 대한 납세지원서비스 도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완화, 법인세율 인상 (21%→22%) 적용시점 연기 <p>4) 가계지원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 인상, 자녀양육비 보조금 앞당겨 지급, 자녀세액공제금액 인상 - 담보구제 및 담보이자제도 - 실업자 일자리 지원에 GBP 13억 추가 투입, 국가고용파트너십 운영 등 <p>5) 공공서비스 개선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투자 스케줄 조정으로 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Jobcenter Plus에 대한 투자 확대 - 담보이자제도 지원 확대, 소기업금융제도 도입 등 <p>6)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배출차량에 대한 감세혜택 - 자동차소비세 인상폭 조정 	<p>- 재정규모: £133억 (’08-09 ~ ’11-12)</p> <p>- ’08-09: £93억, ’09-10: £163억, 이후 재정수입증가</p>

4. 독일

가. 경제동향

	GDP (10억 유로)	GDP증가율 (%)	재정수지 (%)	환율(EUR/US\$)	
				기말	평균
2003	2,163.80		-4.0	0.79	0.89
2004	2,210.90	2.18	-3.8	0.73	0.81
2005	2,243.20	1.46	-3.3	0.85	0.80
2006	2,321.50	3.49	-1.5	0.76	0.80
2007	2,428.32	4.60	0.1	0.68	0.73
2008Q1	622.96			0.63	0.67
2008Q2	622.10		0.0	0.63	0.64
2008Q3	n.a.			0.70	0.67
2008Q4	n.a.			n.a.	n.a.
	이자율		CPI	실업률 (%)	주가지수 (DAX)
	재무성증권 수익률 (treasury bill rate)	시장금리 (money market rate)			
2003	1.98	2.32	104.46	11.68	
2004	2.00	2.05	106.20	9.20	4,256.08
2005	2.03	2.09	108.28	9.20	5,408.26
2006	3.08	2.84	110.13	10.77	6,596.92
2007	n.a.	3.86	112.45	9.00	8,067.32
2008Q1	n.a.	4.03	114.51	8.57	6,534.97
2008Q2	n.a.	3.99	115.37	7.80	6,418.32
2008Q3	n.a.	4.22	116.20	7.57	5,831.02
2008Q4	n.a.	n.a.	n.a.	n.a.	4,810.20

주: 1.n.a. = not applicable

2.GDP는 경상수치임

3.재정수지는 GDP 대비 %임

4.주가지수는 종가기준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8.11.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08. 12.

한국증권선물거래소(<http://www.krx.co.kr/index.html>),

네이버증권(<http://stock.naver.com/world>), 야후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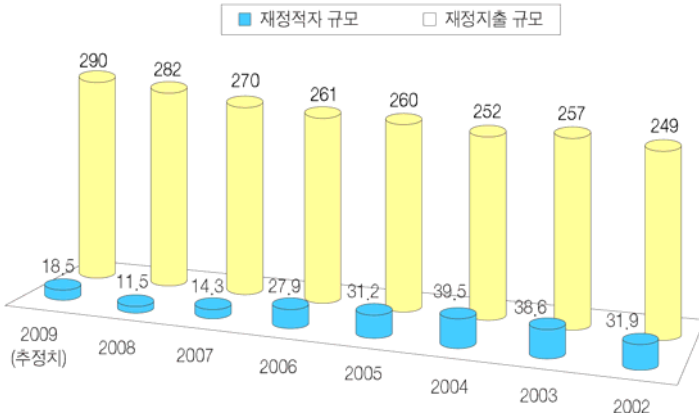
<http://finance.yahoo.com/intlindices?e=americas>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 독일의 2009년 예산안 규모는 2,900억 유로로 확정되었으나, 2차 경기 부양대책에 필요한 재정적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연방예산안이 계획되어 있음
- 2008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지출규모는 2,820억 유로이며 재정적자(순채무) 규모는 115억 유로로 집계됨²⁸⁾
- 추가 연방예산안이 확정되면 2009년 예산안 규모는 2,975억 유로가 되며 재정적자(순채무) 추정치는 368억 유로가 됨²⁹⁾

[그림 II-2] 독일 연방정부 예산(2002~2009년)

(단위: 10억 유로)



자료: 독일 연방정부, Bundeshaushalt 2009, 일부 수정

28) 독일 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홈페이지, 'Stark in der Krise'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nm_3378/DE/Wirtschaft_und_Verwaltung/Finanz_und_Wirtschaftspolitik/Bundeshaushalt/009.html?nnn=true), 2009. 2. 9일자 접속

29) 독일 재무부 홈페이지, 'Nachtrag zum Bundeshaushalt 2009'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nm_53848/DE/Press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09/01/20092701_PM4_Anlage.property=publicationFile.pdf), 2009. 2. 1일자 접속

- 독일 정부는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련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음
 - 2008년 10월, 사회보장지출 안정 및 가족지원 대책과 5,000억 유로 규모의 금융시장안정 대책 발표
 - 2008년 11월,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총 310억 유로 규모의 1차 경기부양대책이 발표되어 확정됨
 - 2009년 1월,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총 500억 유로 규모의 2차 경기부양대책이 계획됨

-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2008년 하반기 이후에 발표한 각종 대책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회보장지출 안정 및 가계지원 대책³⁰⁾

가) 사회보장지출 안정 대책

- 고용보험 요율을 감소시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반면, 연금보험 요율은 작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함³¹⁾
 -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고용보험료 요율이 3.3%에서 2.8%로 인하
 - 2009년 연금보험료 요율은 일반 연금은 19.9%, 광업종사자 연금은 26.4%로 2007년 이래로 변동이 없음

30)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Bürger entlasten - Wachstumskräfte ankurbeln'
(http://www.bundesregierung.de/nn_1496/Content/DE/Artikel/2008/10/2008-10-07-steuerliche-entlastung.html), 2009.1.8일자 접속

31) 독일 고용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홈페이지, 'Das ändert sich zum 1. Januar 2009'(http://www.bmas.de/coremedia/generator/29774/2008_12_17_aenderungen_2009.html), 2009. 1. 8일자 접속

- 2009년 1월 1일부터 법정최저연금이 79.60 유로로 설정됨

나) 가계지원 대책³²⁾

- ☐ 2009년부터 아동수당(Kindergeld)에 대해 첫째·둘째 아이는 월 154 유로에서 월 164 유로, 셋째 아이에 대해 월 154 유로에서 월 170 유로, 넷째 아이 이상은 월 179 유로에서 월 195 유로까지 증액함
- ☐ 2009년부터 자녀세액공제(Kinderfreibetrag)는 3,648 유로에서 3,864 유로로 증가하며, 여기에 보육비, 교육비, 훈련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2,160 유로를 포함하면 아동 1인당 총 세액공제액은 5,808 유로에서 6,024 유로로 증가됨
- ☐ 생활보호대상자의 10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학교는 100 유로를 지원 받는데, 이러한 지원금의 사용·용도는 필기류나 컴퓨터 관련용품과 같이 개인비품 구입용에 제한됨
- ☐ 2008년 10월 1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난방지원금은 월 92 유로에서 월 142 유로로 증가함

32) 독일 가족노인여성아동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홈페이지, 'Familien erhalten in 2009 mehr Leistungen'
(<http://www.bmfsfj.de/bmfsfj/generator/BMFSFJ/familie,did=118362.html>), 2009.1.8
일자 접속

2) 금융시장안정 대책

- 2008년 10월에 독일 정부는 총 5,000억 유로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안정법(Financial Market Stabilisation Act; FMStG)을 시행하고 있음³³⁾
 - 이 중 금융기관 간 대출보증에 4,000억 유로, 금융기관의 자본구성 재편과 위험인수에 800억 유로, 보증채무 변제를 위한 준비금에 200억 유로(4,000억 유로 × 5%)를 지원하게 됨
 - 이러한 지원에 소요될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1,000억 유로 규모의 금융시장안정화펀드(Financial Market Stabilisation Fund; FMS)를 설정함
-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실현수단으로 보증(Guarantees), 자본확충(Recapitalisations), 부실자산의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위험인수(Assumptions of risk)의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함
 - 금융시장안정법(FMStG)에 의하면 이들 수단 중에서 보증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보증만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자본확충이나 위험인수를 하도록 함

33) 독일 재무부 홈페이지, 'Stabilisierung der Finanzmärkte'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nr_53848/sid_CC7B8456BB3D113B57C4E52BDA018C69/DE/Wirtschaft_und_Verwaltung/Finanz_und_Wirtschaftspolitik/Finanzpolitik/122_Paket_Finanzmaerkte.html?_nnn=true), 2009. 1. 8일자 접속

3) 1차 경기부양대책³⁴⁾³⁵⁾

가)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대책

- 경제 전반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보장하기 위해 독일의 은행연합기관인 독일재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은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50억 유로를 한도로 하는 대출을 추가적으로 실시함³⁶⁾³⁷⁾
 - 이에 따라 독일재건은행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시장이자율로 중장기(만기가 5년 또는 8년)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KfW Sonderprogramm 2009)을 실시
 - 대출상한은 프로젝트별로 5천만 유로인데, 설비투자에 대해 신청인별로 1억 5천만 유로, 운전자본(working capital)에 대해 전년도 대차대조표 합계액의 30%(5천만 유로 한도)까지 허용함
 - 설비투자 대출의 90%, 운전자본 대출의 50%까지 독일재건은행이 대출손실을 분담하여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을 촉진함

34)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Government agrees on investment package' (http://www.bundesregierung.de/nn_6562/Content/EN/Artikel/2008/11/2008-11-05-investitionspaket_en.html), 2009.1.8일자 접속

35) 독일 경제기술부(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홈페이지, 「Federal Government's Package of Measures」 (<http://www.bmwi.de/Dateien/BMWi/PDF/massnahmenpaket-wachstum-beschaeftigung-englisch,property=pdf,bereich=bmwi,sprache=en,rwb=true.pdf>), 2009.1.8일자 접속

36) 독일재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홈페이지, 'Maßnahmenpaket "Beschäftigungssicherung durch Wachstumsstärkung"' (http://www.kfw-mittelstandsbank.de/DE/Home/KfW_Mittelstandsbank/Aktuelles/Bundeskabinett_beschliesst.jsp), 2009.1.8일자 접속

37) 독일재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홈페이지, 'KfW-Sonderprogramm 2009' (http://www.kfw-mittelstandsbank.de/DE/Home/Kredite/Die_Foerderprogramm_me_im_Einzeln/KfW-Sonderprogramm_2009/index.jsp), 2009.1.8일자 접속

- 상기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은 독일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으로서 그룹 매출액이 5억 유로 이하인 기업임

나) 사회기반시설 투자대책

- 연방정부는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긴급 투자를 실시하여 교통시설 보수·투자 프로그램에 2009년과 2010년에 10억 유로를 투입함
 - 이는 철도 개조·투자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소음 완화, 연방 고속도로의 관리 및 확장, 수로상의 구조물 관리를 위한 조치도 포함됨
 - 민관 합동 개발에 적합한 도로건설의 경우 해당 사업이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면 조기에 집행함
-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상으로 열악한 지방정부를 위한 독일재건은행의 사회기반시설 프로그램(지원금)을 30억 유로까지 증액함
 -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대한 감독권 행사를 요구하여 재정상으로 열악한 지방정부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2009년 1월 1일부터 연방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합동작업에 소요되는 투자금을 증액함
 - 연방정부는 1회성으로 2억 유로를 주정부에 추가 지원하는데, 이중 1억 유로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유로는 그 다음연도에 공약예산(commitment appropriation)으로 집행함

다) 에너지 효율화 및 친환경 기술개발 등 투자장려 대책

-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추가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0억 유로의 추가적인 지원을 집행함

- 이러한 투자촉진 정책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거공간 개조사업
을 포함함

□ 친환경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동시에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채택함

- 2007년 72억 유로에서 2009년 100억 유로로 증가할 예정인 최신 자동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차입금을 유럽투자은행(EIB)로부터 조달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함
- 또한 2007년 50억 유로에서 2009년과 2010년 80억 유로로 증가할 예정인 자동차 산업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조달함

라) 고용안정 및 사회안정망 지원대책

□ 경기침체의 여파로 구조조정될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안정망을 신설함

- 해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근로자와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현장 교육과 같은 특별프로그램을 확대함
- 2009년 1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간제 근로 수당(short-time work allowance)에 대한 수급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함
- 연방노동청에 1,000개의 고용중개직을 추가하여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함

4) 2차 경기부양대책³⁸⁾

가) 가계지원 대책

- ☐ 의료보험 요율을 인하하여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함
 - 의료보험료 요율은 2009년 7월 1일부터 15.5%에서 14.9%로 인하
 - 의료보험료에 대한 연방보조금이 2009년 30억 유로, 2010년 60억 유로가 증액 지급되는 것에 상응한 조치임
- ☐ 아동당 1회성으로 100 유로의 아동보너스를 지급하고, 2단계 실업급여 수급자는 2009년 7월부터 더 높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음
 - 아동보너스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

나)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대책

- ☐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2009년, 2010년에 서독 및 동독 기업들의 R&D 사업에 매년 4억 5천만 유로를 투입
 - 그 중 1억 유로는 동독 기업에만 배정하여 동독 기업들이 더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 1차 경기부양대책에서 나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상품과 유사하

38)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Emerging from the crisis ready for the next economic upswing' (http://www.bundesregierung.de/nn_6562/Content/EN/Artikel/2009/01/2009-01-13-zweites-konjunkturpaket_en.html), 'Beschlüsse des Koalitionsausschusses zum Konjunkturpaket II' (http://www.bundesregierung.de/nn_1496/Content/DE/Artikel/2009/01/2009-01-13-konjunkturpaket-2-materialien.html), 2009.2.9일자 접속

게 대기업에 대한 대출프로그램도 실시됨

다) 사회기반시설 투자대책

- 보육, 학교, 도로, 병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140억 유로를 지원하고 추가로 33억 유로를 투자함
 - 이 중 고속도로 프로젝트와 같은 연방투자에 40억 유로, 주정부 투자에 나머지 100억 유로가 투입됨
 - 연방투자를 위한 40억 유로 중 20억 유로를 연방 교통로(도로, 표지판, 수로 등)의 증축과 개설에 사용하고, 나머지 20억 유로는 건설, 장비 마련 및 관할 영역 연구에 투자
 - 주정부 투자를 위한 100억 유로 중 65억 유로를 교육시설 특히 유치원, 학교, 대학시설(에너지 친화적 리모델링) 및 연구 지원에 투자하고, 나머지 35억 유로를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현대화, 특히 병원, 도시건설, 시골 기반시설 및 지방자치단체 도로 주변의 방음장치 리모델링에 투자
 - 약 170억 유로의 절반 이상을 올해 말까지 집행할 예정임
- 오늘날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교통 시스템과 함께 초고속 인터넷의 중요성이 증대되므로 2010년 말까지 초고속인터넷 기반사업을 추진함
 - 2014년까지 전체 가구의 75%에 초고속 인터넷(초당 50 메가비트)을 보급하여 2018년에 보급률 100%를 목표로 함

라) 에너지 효율화 및 친환경 기술개발 등 투자장려 대책

- 2009년, 2010년에 걸쳐 연료전지와 수소기술을 사용하는 미래형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는 데 5억 유로를 지원함

- 1년 이상 보유한 연식 9년 이상의 자동차를 폐차하고 신규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Euro 4 기준 이상)를 구입하는 경우 2,500 유로의 환경 보너스를 받게 됨
 -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15억 유로를 예산으로 편성

마) 고용안정 및 사회안정망 지원대책

- 근로자의 능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도입함
 - 해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WeGebAu: 현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숙련 근로자 또는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을 개설하여 매년 2억 유로씩 증액 지원
 - 연방 노동청과 관련 서비스 기관에 5천개의 고용중개직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구인 구직 활동을 지원
 - 2009년, 2010년에 구직자의 사회 진출 도모와 직업능력 강화를 위해 12억 유로를 관련 사회기관에 투입하며, 정규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25세 이상의 근로자와 장기간 견습생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소년들에 대해 7억 7천만 유로 지원
 - 2009년, 2010년에 비정규 시간제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 교육수당을 지급
 - 비정규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하한을 법률화하기 위한 입법준비
- 2009년, 2010년에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해당고용주는 사회보장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음³⁹⁾
 -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하는 근로자에게 작업교육을 실시할 경우,

39) 독일의 사회보장보험에는 의료보험(Krankenversicherung), 산재보험(Unfallversicherung),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 고용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 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이 포함됨

관련 비용이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며 이 기간 동안 고용주는 사회 보장보험료의 100%를 지원받음

바) 국가채무 청산 대책

- 현재의 경제·재정위기 극복 방안들은 국가채무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데, 연방개정법 II에서 다음과 같은 순채무 제한 규정을 정함
 - 공공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국가의 채무부담은 GDP의 최고 0.5%까지만 가능
 - 순채무 제한규정의 준수 여부는 통제계정(controll account)을 통해 확인
 - 통제계정에는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채무 현황이 기록되며 결산 시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통제계정을 조절
 - 자연재해나 경제위기와 같은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두어 특별한 금융 수요에 충족하도록 추가적 대출을 허용

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정책

- 유럽 회원국들은 독일 정부에 대해 감세와 소비촉진을 위한 바우처⁴⁰⁾를 도입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왔음
 - 유럽 회원국들은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협력이 없이 경기부양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 독일의 일부 정치인들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감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메르켈 총리는 2009년 9월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는 감세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음

40) 바우처는 일종의 통화대용증권(ex. 상품권)으로 수혜자가 자기 돈 일정금액을 추가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시장 진작에 도움을 주는 제도임

- 메르켈 총리는 부가가치세 감세는 단지 가격을 낮추는 것에 영향을 줄 뿐이며 독일의 경우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힘

□ 이러한 배경에서 1차, 2차 경기부양대책은 재정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조세정책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수단에 국한되어 있음⁴¹⁾

1) 1차 경기부양대책

가) 개인과세

- ‘주택 개·보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9년 1월 1일부터 1,200 유로(6,000 유로의 20%)로 기존의 600 유로보다 2배 증가함⁴²⁾
 - 주택 개·보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재료비를 제외한 인건비(부가가치세 포함)의 20%를 소득 세액에서 공제함
 - 주택 개·보수에는 페인팅, 도배, 욕실 개조, 일부 수리, 마루교체, 창문·문·보일러 교체, 조경, 진입로 정비가 포함됨

나) 법인과세

- 200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동산에 대한 25% 정률법 상각

41) 독일 경제기술부(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홈페이지, 「Federal Government's Package of Measures」
([http://www.bmwi.de/Dateien/BMWi/PDF/massnahmenpaket-wachstumsbeschaeftigung-englisch, property=pdf,bereich=bmwi,sprache=en,rwb=true.pdf](http://www.bmwi.de/Dateien/BMWi/PDF/massnahmenpaket-wachstumsbeschaeftigung-englisch_property=pdf,bereich=bmwi,sprache=en,rwb=true.pdf)), 2009.1.8일자 접속

42) 적용시한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연방정부는 향후 2년간 강화된 세액공제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declining-balance depreciation)을 2년간 실시함

-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상각(special depreciation faciliation)을 2년간 연장함

다) 소비과세

- 소비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이 법안에 대한 내각 결정(Cabinet decision on the draft) 이후 등록된 차에 대해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간 자동차세를 면제함
 - 단, Euro 5 기준과 Euro 6 기준⁴³⁾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 면제됨
 - 이러한 면제 제도는 2010년 12월 31일에 만료됨

2) 2차 경기부양대책

가) 개인과세

-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09년 29억 유로, 2010년부터 60억 5천만 유로의 소득세가 감면될 예정임

43) 자동차 배출기준은 다음과 같음

EU 자동차 배출기준

(단위: mg/km)

기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디젤차	가솔린차	디젤차	가솔린차	디젤차	가솔린차
Euro 2(1996)	80-100	-	-	-	-	-
Euro 3(2000)	50	-	500	150	-	200
Euro 4(2005)	25	-	250	80	-	100
Euro 5(2009)	5	5	180	70	-	100
Euro 6(2014)	5	5	80	70	-	100

자료: <http://www.euractiv.com/en/transport/euro-5-emissions-standards-cars/article-133325>, 2009.2.10일자 접속

- 개인소득세 면세점이 170 유로가 인상되어 7,834 유로로 책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
 - 2010년부터 개인소득세 면세점은 8,004 유로로 인상
- 최저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15%에서 14%로 인하

나) 소비과세

- 소비위축 해소를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 자동차세가 개정됨
 - 질소산화물 배출량에 따라 g/km당 2 유로로 일률적으로 부과됨
 - 2008년 11월 5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들은 2013년부터 질소산화물 과세대상이 됨 (세액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추후결정)
 - 질소산화물 비과세 기준은 2010년과 2011년에 120g/km, 2012년과 2013년에 110g/km, 2014년부터 95g/km임
 - 헌법 개정을 통해 연방은 자동차세를 징수할 권한을 위임받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주정부는 연방의 전년도 세수에서 매년 일정 금액을 받음
 - 연방은 향후 5년간의 행정예산으로 1억 7천만 유로를 위임받음

〈표 II-17〉 독일의 경기대응 조세·재정정책

법안 통과 / 시행시기	정책 내용	재정 규모 / 기간
2008. 10. (의회통과)	사회보장지출 안정 및 가족지원 대책 - 고용보험세 인하 - 아동수당 및 자녀세액공제 증액	
2008. 10. (의회통과)	금융시장 안정대책 - 금융기관 간 대출보증, 자본확충 및 위험인수, 준비금 지원	5천억 유로
2008. 12. (의회통과)	1차 경기부양대책 - 동산 정률법 상각, 중소기업 특별상각 - 독일재건은행의 기업대출 특별프로그램 -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투자 장려 - 지방정부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금 증액 - 교통시설 보수·투자 프로그램 - 주택 개·보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자동차세 면제 - 자동차 산업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 시간제 근로수당 수급기간 확대	310억 유로 (2009~2010년)
2009. 1. (의회제출)	2차 경기부양대책 - 공공부문(도로, 교육시설, 병원 등) 투자 - 중소기업의 R&D 사업지원 - 친환경차 구입에 대한 환경보너스 - 자동차세 비과세 기준 변경 - 하이브리드엔진 개발을 위한 대출 지원 - 취약근로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 개인소득세 면세점 인상 및 최저소득구간 적용 세율 인하 - 아동보너스 지급 - 의료보험에 대한 연방보조금 증액 및 요율 인하	500억 유로 (2009~2010년)

5. 프랑스

가. 경제동향

	GDP (10억 유로)	GDP 증가율 (%)	재정수지 (%)	실업률 (%)	환율(EUR/US\$)	
					기말	평균
2003	1,594.81		-4.1	8.90	0.79	0.89
2004	1,660.19	4.10	-3.6	9.18	0.73	0.81
2005	1,726.07	3.97	-3.0	9.13	0.85	0.80
2006	1,807.46	4.72	-2.4	9.10	0.76	0.80
2007	1,892.24	4.69	-2.7	7.95	0.68	0.73
2008Q1	486.85		-3.2	7.40	0.63	0.67
2008Q2	486.51			n.a.	0.63	0.64
2008Q3	n.a.			n.a.	0.70	0.67
2008Q4	n.a.			n.a.	n.a.	n.a.

	이자율			CPI	주가지수 (CAC 40)
	예금금리	재무성증권수익률 (3개월)	공채수익률		
2003	2.69	2.28	4.13	105.77	
2004	2.25	2.02	4.10	108.02	3821.16
2005	2.15	2.07	3.41	109.98	4715.23
2006	2.44	2.89	3.80	111.74	5541.76
2007	2.85	3.86	4.30	113.41	5614.08
2008Q1	3.33	3.88	4.08	115.48	4707.07
2008Q2	3.50	4.03	4.47	117.09	4434.85
2008Q3	n.a.	4.24	4.48	117.29	n.a.
2008Q4	n.a.	n.a.	n.a.	n.a.	3217.13

주: 1. n.a. = not applicable

2. GDP 는 경상수치

3. 재정수지는 GDP에서 재정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임. 2008년 비율은 EU집행위에서 발표한 확정 재정수지 비율임.

4. 주가지수는 종가기준

5. 시장금리는 일반적으로 단기자금시장에서 금융기관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금리를 말함.

6. 예금금리는 비과세 통장예금의 저축은행금리, 대출금리는 은행단기대출금리

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8.11., IMF.

<http://www.krx.co.kr/index.html>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08/2, No. 84.

-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경기침체 현상이 발생함. 먼저 금융기관이 부실화된 후, 실물부문으로 위기가 전이되는 추세임
 - 특히, 건설업과 자동차산업과 같이 금융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의 경기침체 현상이 두드러짐
 - 주택건축, 운송, 및 건설 분야는 경기침체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함⁴⁴⁾
 - 재정난을 겪고 있는 프랑스 기업의 비율은 1993년 25%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6년 3/4분기에 10.1%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EU 집행위는 2009년 프랑스의 경제는 심각한 침체기에 접어들어, 실업인구, 정부의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⁴⁵⁾
 - 고용감소 및 실업률 급증 : 2008년 약 7.8%의 실업률이 2009년 9.8%로 악화된 후 2010년에는 10.6%로 치솟아, 10% 방어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 소비정체 : 급증되는 실업률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생활비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됨. 프랑스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가계소비 는 저물가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체할 전망이다
 - 투자감소 : 국제적인 금융위기 이후 수개월간 신용경색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대출규모는 부족하며, 수주 전망 및 생산시설 가동률이 악화되어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함

44) 김영호, 파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2008.10.30, KOTRA 글로벌원도우

45) 김영호, 파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2009.1.20, KOTRA 글로벌원도우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의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특히 2009년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사업으로 인하여, 재정적자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비율은 2009년에 -5.4%로 2008년에 비해 적자폭이 2.2%나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반면에,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해 재정적자가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프랑스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2009년 경제성장률이 0.8~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표 II-18〉 재정수지 현황 및 전망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전망)	2010(전망)
정부재정수지	-2.4	-2.7	-3.2	-5.4	-5.0
정부부채	63.6	63.9	67.1	72.4	76.0

주: 정부재정수지와 정부부채는 GDP 대비 비율임

자료: EU 집행위, KOTRA 글로벌윈도우 재인용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lw/>

1)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2008.10.13)

- 금융위기로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3,600억을 투입하여, 일부 금융기관을 국유화 하거나, 금융기관 간 대출보증에 사용함⁴⁶⁾
 - 금융기관 간 대출보증을 위해 €3,200억, 금융기관의 지분을 확보하

46) <https://member.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

는 재자본화 계획에 €400억을 투입할 예정임

- 이는 프랑스 GDP의 18.4%에 달하는 대규모 금액임⁴⁷⁾

- 또한, 기업 및 개인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105억 유로를 추가로 지원하며, 지자체 운용자금을 위하여 50억 유로를 지원함⁴⁸⁾

2) 실물경제 지원조치 (2008.10.21)

□ 기업지원을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어려움에 처한 전략기업을 위한 정부투자펀드(€60억)를 신설할 예정임
- 금융기관에 지원된 공적자금(€3,600억)에 대한 대가로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약속함

□ 경제활동 분야에 3년간 €1,750억 투자

- 에너지 효율성 향상, 무공해 기술 및 미래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디지털경제를 위한 지원에 3년간(2009년~2111년) €1,750억을 정부가 투자함

3) 실업자 구제정책(2008.10.28)

□ 2009년도 정부지원 고용계약(서비스분야에 국한) 규모를 당초 23만명에서 33만명으로 확대함

- 이외에도 비정규직 고용조건 완화, 직업변경계약 지원정책 적용지역 확대 등의 정책을 실시함

47) 『재정포럼』, p.44, 2009.1. 한국조세연구원

48) 김영호, 파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2008.10.30, KOTRA 글로벌원도우

4) 종합 경기부양 대책(2008.12.04)⁴⁹⁾

-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8년 12월 4일에 글로벌 경제위기의 대처를 위한 종합 경기부양 대책(Un plan de relance)(계획)을 발표함
 - 본 계획은 기업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과 주택 · 건설산업,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지원의 목표는 직접적인 현금보조, 정부부문의 공공부문 직접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임
 - 본 종합 경기부양 대책(안)은 의회에 상정되어 승인될 예정⁵⁰⁾
- 종합 경기부양 대책을 위한 예산규모 : 약 €260억
 - 이 규모는 프랑스 GDP의 약 1.3%에 달하며, 소비보다는 투자에 초점이 맞춰짐
 - 이 중 €114억은 기업에 보조금이나 세액공제(accelerated tax rebates and credits)로 지원
 - 또한, €105억은 직접적인 공공부문 투자
 - 또한, €18억은 주택건설(housing)에 투자

가) 인프라 구축

- 다음의 전략적 공공부문에 직접투자
 - 기반시설(infrastructure), 영구 시설물(développement durable), 문화유적(patrimoine), 고급 연구 · 국방산업의 4분야
 - 투자를 증가시키도록 약정한 지역에 대해서 연간 약 €25억 규모의 VAT 환급을 허용

49) <http://www.porte-parole.gouv.fr>

50) <http://www.lefigaro.fr/lefigaromagazine/>

- 〈참고〉 직접투자 이외에 정부는 EDF나 GDF Suez와 같은 대기업에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도록 유도함 : 2009년 €40억의 공공부문 투자를 유도할 계획임
 - EDF나 GDF Suez와 같은 대기업은 기반시설, 에너지 및 체신서비스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2008년에 비하여 35% 증가한 €40억으로 증가시킴

나) 기업지원

□ 자동차산업에 대한 대책

- 구형차의 대체를 위하여 신형차를 구매하는 구매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을 €1,000으로 인상함
 - 관련 예산 : 연간 €2.20억 규모
 - 다만, CO₂ 배출량이 160g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자동차 제조사의 자동차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구매자에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동차 금융회사에 크레디트라인⁵¹⁾을 제공함
 - 관련 예산 : 연간 €10억 규모
 - 이는 신차구매의 70% 정도가 은행의 금융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에 금융을 8%에 지원하는 것임
 - 또한, 전기차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개발 촉진을 위해 €13억 규모의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임
- 하도급업체의 지원을 위해 제조사와 정부가 총 €3억의 구조조정 펀드를 설립하여, 하도급업체에 지원함
- 대책의 배경 : 자동차산업은 인구의 10%인 250만명이 종사하는 산업으로, 최근 경제위기에서 피해를 가장 크게 받고 있음

51) 신용한도

- Washington Post(12월 5일)에 따르면, 11월의 프랑스의 신차 판매는 20%의 할인에도 불구하고 14%나 하락함

□ 건설업 지원 대책

- 2009~2010년의 2개 연도 동안 주택건설 등에 €14.5억을 지원할 예정
 - 주택 100,000채의 추가 건설에 €6억
 - 신규주택 구입을 위한 0% 대출을 2배 확대를 위해 €6억
 - 교외지역의 재개발에 €2억, 기타에 €0.5억
- 거주지 개선사업과 환경위생 사업에 2009~2010년의 2개 연도 동안 €2억을 지원
- 공동수용시설(accommodation) 등에 연간 €1.6억을 추가 지원

□ 민간투자 촉진 지원

- 직접적인 유동성 제공 : 2009년부터 연구개발세액공제액과 VAT 환급액의 조기지급을 통해서, 민간에 연간 €114억을 제공
 - 세금환급(€97억), 정부조달시장 선수금 증가(€10억), 투자지원(€7억)
- 민간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 지원
 - 신규투자에 대한 사업소세(taxe professionnelle)에 대하여 전액 면제
 - 전략적 투자펀드의 설립에 €200억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
-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 2010년에 €6.6억, 2011년에 €8억 규모로 예상

다) 고용창출

□ 실업대책

- 1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하는 기업은 2009년에 고용하는 신입직원
에 대해서 최소임금의 1.6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음
 - 관련한 세제혜택(tax breaks) 예산 규모는 연간 €7억에 달함
- 해고근로자의 직업교육 등을 위하여 예산을 추가로 편성함
 - 예산규모 : €5억
- 실업에 취약한 계층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RSA, Revenu de
solidarité)에 앞서 먼저 개별적으로 €200을 지원함
 - 수혜가능 가구는 약 38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예산규모는 : €7.6억

5)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2009.02.09)⁵²⁾

□ 정부가 Renault와 PSA Citroen에게 €30억의 자금을 저율로 대출함

- 다만, 금융지원의 조건으로 프랑스에서 해고나 공장을 폐쇄하지 말
아야 하며, 배당과 상여금도 감소시켜야 함

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정책

1) 실물경제 지원조치(2008.10.21)

□ 기업지원 조치

- 2010까지 신규투자에 대한 지방법인세 전면면제
 -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월 1일까지 신규투자금에 대한 지방법

52) <http://www.france24.com/en/20090209>

인세(부가가치의 3.5%)를 면제함

2) 종합 경기부양 대책(2008.12.04)

가) 법인과세

- ☐ 1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하는 기업은 2009년에 고용하는 신입직원에게 대해서 최소임금의 1.6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음
 - 관련한 세제혜택(tax breaks) 예산 규모는 €7억에 달함
- ☐ 연구개발세액공제 확대와 VAT 조기 환급
 - 2009년부터 연구개발세액공제액과 VAT 환급액의 조기 지급을 통해서, 민간에 €114억을 제공
- ☐ 민간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 지원
 - 신규투자자에 대한 사업소세(taxe professionnelle)에 대하여 전액 면제
- ☐ 신규구입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 2010년에 €6.60억, 2011년에 €8억 규모로 예상

나) 소비과세

- ☐ 투자를 증가시키도록 약정한 지역에 대해서 약 €25억 규모의 VAT 환급을 허용

〈표 II-19〉 프랑스의 경기대응 조세·재정정책

법안통과/ 시행시기	법안내용	재정규모/기간
2008.10.13 (정부발표)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 부실금융기관 국유화, 또는 대출보증	- 금융지원: €3,600억
2008.10.21 (정부발표)	실물경제 지원조치 - 에너지 효율성 향상, 무공해 기술 및 미래 경제성장의 동력의 개발에 투자	- 재정규모:('09~'11) €1,750억
2008.10.28 (정부발표)	실업자 구제정책 - 2009년도 정부지원 고용계약 규모를 당초 23만명에서 33만명으로 확대함	
2009. 12 (정부발표)	중합 경기부양 대책 (Massive stimulus package) - 전략적 공공부문에 직접 투자 - 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 자동차 금융회 사에 크레디트라인 제공 - 주택건설 지원, 거주지 개선사업 - 신규고용에 대한 세제혜택, 취약계층을 위 한 사회보장 급여 지급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와 환급 액 조기지급, 가속상각 허용	- 재정규모: ('09~'10) : 약 €260억

6. 스웨덴

가. 경제동향

	GDP (SEK 10억)	경상재정수지 (GDP 대비 %)	실업률 (%)	환율(SEK/US\$)	
				기말	평균
2003	2,515.15	-1.2	4.85	7.19	8.09
2004	2,624.96	0.6	5.52	6.61	7.35
2005	2,735.22	2.1	7.12	7.96	7.47
2006	2,899.65	2.2	7.04	6.86	7.38
2007	3,070.59	3.5	6.12	6.41	6.76
2008Q1	769.57	2.8	6.27	5.94	6.27
2008Q2	814.81		6.67	6.01	5.99
2008Q3	n.a.		n.a.	6.85	6.31
2008Q4	n.a.		n.a.	n.a.	n.a.

	이자율		CPI	주가지수 (SAX)
	재무성증권 수익률(3개월)	공채수익률		
2003	3.03	4.64	106.63	
2004	2.11	4.43	107.03	228.41
2005	1.72	3.38	107.51	302.91
2006	2.33	3.71	108.98	365.32
2007	3.55	4.17	111.39	351.84
2008Q1	4.19	4.01	113.44	303.15
2008Q2	4.14	4.22	115.31	269.88
2008Q3	n.a.	4.46	116.12	237.25
2008Q4	n.a.	n.a.	n.a.	197.25

주: 1. n.a. = not applicable

2. GDP는 경상수치

3.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는 OECD 자료

4. 재무성증권은 재무성이 발행하는 단기성 국채의 일종임

5. 주가지수는 종가기준

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8,11., IMF. OECD Economic Outlook 84, 2008
<http://www.krx.co.kr/index.html>, 네이버증권 <http://stock.naver.com/world/>,
 야후금융 <http://finance.yahoo.com/intlindices?e=americas>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 재정전망⁵³⁾

- 경기침체로 일반정부 순대출이 2008년 봄 재정정책안(2008 Spring Fiscal Policy Bill)에서의 예상치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1%의 국가재정 흑자 목표를 향후 몇 년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일반정부 순대출(net lending)은 2008년 및 2011년 각각 GDP의 2.0% 및 2.4%일 것으로 전망
- 중앙정부 부채는 계속해서 감소하여 2008년 31.1%, 2009년 27.5%, 2010년 23.7%에 이어 2011년에는 GDP의 19.2% 정도로 예상되며, 이는 197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한편, EU 및 OECD 국가 대부분의 경우 예산상 결손을 유지해 왔으며 해당 국가들의 평균 부채는 2008년 GDP의 70%를 초과하여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스웨덴의 이와 같은 견실한 재정 상태는 금융시장 위기에 대처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더 많은 자원을 교육, 건강 및 사회서비스 등에 집중할 계획
- 참고로, 스웨덴의 중앙정부 예산지출 및 예산수입 규모는 다음과 같음

53) <http://www.ud.se/sb/d/10213/a/111839>, 스웨덴 『Budget Statement And Summary』 (2009)

〈표 II-20〉 중앙정부 예산지출

(단위: SEK 10억)

구분	2007 (Outcome)	2008 (Forecast)	2009 (Estimated)
I. 총지출금액	769.2	781.0	766.4
II. 조정내역	168.8	176.0	224.5
1. interest on central government debt	-47.3	-42.8	-33.8
2. Old-age pension system outside the budget	188.2	201.9	220.7
3. Budgeting margin	27.9	16.9	37.6
III. Expenditure ceiling	938.0	957.0	991.0

자료: 스웨덴 『Budget Statement And Summary』(2009) Summary

〈표 II-21〉 중앙정부 예산수입

(단위: SEK 10억)

	2007 (outcome)	2008 (Forecast)	2009 (Forecast)
Central government tax revenues	815.5	807.6	786.2
Revenue from central government activities	66.5	54.5	47.1
Revenue from sale of property	18.0	80.2	50.0
Loan repayments	2.0	1.9	1.8
기타	-38.3	-38.4	-48.3
합계	863.7	905.8	836.8

자료: 스웨덴 『Budget Statement And Summary』(2009) Summary

1) 2009 예산안상 경기부양책

□ 정부가 2008년 9월 22일 발표한 2009 예산안(Budget for 2009)에 의하면, 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SEK 320억 규모의 경기부양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 예산안상 정부의 정책 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됨
 - 고용확대 및 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정책
 -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종합정책

-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정책

- 예산안은 2008년 9월 22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2008년 11월 19일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가) 고용확대 및 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정책

- 정부는 일자리 우선 원칙에 기반하여 노동공급 증가를 위해 근로 관련 세액공제와 더불어 소득세 인하를 제안
 - 이는 총 SEK 150억 규모로 약 97%가 넘는 근로자에게 매달 SEK 1,000을 초과하는 세액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업의 투자 및 인력채용에 대한 동기를 자극하기 위해 2009년 약 SEK 160억 규모의 감세 패키지를 제안
 - 법인세율을 28%에서 26.3%로 인하
 -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1%p 인하
 - 또한 조세행정의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
 - 2010년까지 기업의 조세행정 부담을 25%까지 줄일 계획
- 기타
 - 기업이 교육 수준을 높이도록 동기 부여
 - 스웨덴의 이주민들에게 구직 기회를 확대
 - 스웨덴의 이주민들이 스웨덴에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2010년 이후 SEK 9억이 투입될 예정

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종합정책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교육, 연구, 기반시설 및 환경 분야에 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

○ 교육 분야

- 취학 전 아동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일반 유치원의 확대, 육아 바우처 제도 도입, 유치원 교과과정의 명료화, 유치원 교사 및 보육 근로자 양성과정 개선 등
- 또한 수학, 자연과학 및 기술에 대한 지원 정책, 고등학교 견습과정 프로그램에서 지도자 프로그램 확대, 교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 및 직업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등

○ 연구 분야

- 연구의 질 향상 및 사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SEK 150억의 자원을 4년에 걸쳐 의학, 기술 및 기후에 대한 연구 영역에 집중

○ 기반시설 분야

- 2009년 및 2010년 한 해당 SEK 50억을 초과하는 자원을 투입

○ 환경 분야

- 친환경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환급금에 투입되는 예산을 증대
-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 2009년 SEK 7.95억, 2010년 SEK 10.7억, 2011년 SEK 11.65억의 예산을 할당
- 또한 발트해 및 북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

다)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정책

□ 정부는 스웨덴의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다음 정책을 제안

○ 연금수령자에 대한 감세

- 수령하는 연금이 전액 보장연금이고 소득에 기초한 연금은 거의 없는 경우 해당 연금수령자에 대해 연간 SEK 2,300 ~ SEK 3,500 정도를 감세
- 총 감세규모는 연간 약 SEK 20억으로 예상되며 90%가 넘는 연금

수령자가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한 해당 SEK 10억을 성과연계 의료보험에 투입
- 정신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주의회에 2009~2011년 연간 SEK 6.5억을 추가 투입
 -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연간 총 SEK 9억의 예산할당이 있을 것으로 예상

2) 2008년 12월 고용확대를 위한 종합정책⁵⁴⁾

-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5일 4개 여당 당수 공동 기자회견시 경기침체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3년간 고용 및 재교육 분야에 총 SEK 230억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
 - 동 대책에는 실업자 지원, 고교·전문대 수준의 직업교육을 위한 재정 확충, 인프라 구축사업, 주택 보수·유지 관련 건설서비스에 대한 감세 조치가 포함
 - 특히 주택 보수·유지 관련 건설서비스에 대한 감세 조치는 동 업종에 대한 고용증가 효과(7천명)와 더불어, 주택 소유주들에게 보유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공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
 - 2009년 SEK 83억, 2010년 SEK 88억, 2011년 SEK 58억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며, 이는 1월말 의회에 제출 예정
- 또한 종합고용대책을 통해 2009년 58,700명, 2010년 72,000명, 2011년 34,200명에 대해 취업 및 교육 지원을 제공할 예정
 - 아울러, 고용청(Arbetsförmedlingen)의 구직·구인 주선업무 향상

54) <http://swe.mofat.go.kr/kor/eu/swe/economy/news/index.jsp>

을 위해 약 SEK 30억을 지원할 예정

- 평생교육 및 재교육 분야와 관련, Jan Björklund 교육장관은 2009년 대상 인원을 5,300명으로 증원, 총 20,000~25,000명이 추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
- 그리고 27세 이상 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의 조건도 대폭 완화하여 현 30%인 학자금 대여수준을 80%로 인상

3) 2008년 12월 자동차업계 지원 정책⁵⁵⁾

-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11일 급격한 판매부진에 따른 손실 급증 등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총 SEK 280억 규모의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함
 -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국영회사 설립(SEK 30억)
 - 유럽 투자은행(EIB)으로부터의 대출에 대한 정부의 신용보증(최대 SEK 200억)
 - 대출 형식의 구제지원(rescue loan) 제공(SEK 50억) 등

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정책

1) 2009 예산안상 경기부양책

- 스웨덴의 2009 예산안상 경기부양 정책 중 세제정책의 규모는 법인세 분야의 경우 SEK 160억, 개인소득세 분야의 경우 SEK 150억으로 예상됨
 - 예산안은 2008년 9월 22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2008년 11월 19일

55) <http://swe.mofat.go.kr/kor/eu/swe/economy/news/index.jsp>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가) 법인과세

- 법인세율 및 사회보장기여금 인하를 통해 투자 및 신규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 2009년 1월 1일부터 법인세율을 현 28%에서 26.3%로 인하
 -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social contribution taxes)을 약 1%p 인하(32.42% → 31.42%)⁵⁶⁾
- 자산의 이전 및 특정 재고자산의 평가 관련 파트너십에 적용되는 조세 회피 규정을 수정

나) 개인과세

- 가계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초점을 둠
 - 근로소득을 받는 개인에 대한 공제 인상
 - 개별 납세자에게 월 평균 SEK 1,000의 감세효과 예상
 - 65세를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감세함으로써 퇴직연령 이후의 개인에게도 근로의욕 고취
 - 국세인 소득세(national income tax)에 대한 과세최저한 인상(월 SEK 28,400 → 월 SEK 31,700)
 - 개인인 납세자가 지불하는 가사서비스(예를 들어, 청소, 요리, 육아 등) 비용 관련 공제규정 수정
 - 통근비용 공제금액 한도 인상(SEK 8,000 → SEK 9,000)
 - 다른 EEA국가에서 개설되거나 발행된 복권 및 할증채권의 상급에

56) 자영업자(self-employed)의 경우 역시 30.71%에서 29.71%로 1%포인트 인하

대한 과세규정 수정

〈표 II-22〉 스웨덴의 경기대응 조세 · 재정정책

법안통과/ 시행시기	정책내용	재정규모/기간
2008. 11 (의회통과)	Budget for 2009 - 고용확대 및 기업지원 · 근로세액공제 및 소득세인하 · 법인세율 및 사회보장기여금 인하	- 재정규모 : SEK 320억
2008.12 (정부발표)	- 고용 및 재교육 분야에 대한 종합정책 · 실업자 지원, 직업교육을 위한 재정 확충, 주택 보수·유지 관련 건설서비 스에 대한 감세조치 등	- 재정규모 : SEK 230억 ('09~'11) - '09: SEK 83억, '10: SEK 88억, '11: SEK 58억
2008.12 (정부발표)	- 자동차업계 지원정책 · 연구개발 지원, 대출 지원 등	- 금융지원 : SEK 280억

7. 네덜란드

가. 경제동향

□ 네덜란드의 주요 경제지표⁵⁷⁾

경제지표	(annual growth rate)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GDP	3.5	2.25	-0.75	1
소비자물가지수(CPI)	1.6	2.5	1.5	1
장기채 금리	4.3	4.25	4	4
노동생산성	1.8	0.75	-0.75	4.25
실업률(level in % of labour force)	4.5	4	4.5	6.5
국가총채무(% GDP)	44.7	56.7	52.0	53.9
조세및사회보장부담금(% GDP)	38.9	39.5	39.0	39.3
재정수지(% GDP)	0.3	1.0	1.2	1.2

자료: Central Planning Bureau, 2008, 12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08/2, No. 84, December

	환율(EUR/USD)		이자율			주가지수 (종가기준)
	기말	평균	예금금리	대출금리	공채수익률	AEX
2004	0.73	0.81	2.31	2.75	4.09	513.31
2005	0.85	0.80	2.34	2.77	3.37	643.05
2006	0.76	0.80	2.98	3.54	3.78	495.34
2007	0.68	0.73	3.89	4.60	4.29	515.77
2008Q1	0.63	0.67	4.06	4.75	4.05	442.43
2008Q2	0.63	0.64	4.31	4.75	4.43	425.93
2008Q3	0.70	0.67	n.a.	5.00	4.48	331.45
2008Q4	n.a.	n.a.	n.a.	n.a.	n.a.	246.58

주: n.a. = not applicable

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MF, 2008, 1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57) 더욱 자세한 경제지표는 <http://www.statistics.dnb.nl/index.cgi?lang=uk&todo=DS>에서 찾아볼 수 있음

- 네덜란드의 2008년 3분기 평균 경제성장률은 2.7%였지만 네덜란드 경제성장의 기간산업은 수출로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타격을 받아 2009년에는 제로 성장(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
- 네덜란드 정부는 2009년 예산안의 경제전망 예상치를 1.25%로 보았으나, 네덜란드 중앙은행과 Central Planning Bureau은 정부의 발표수치보다 낮은 제로 성장(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제성장을 전망



- 2008년도 인플레이션은 과거 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09년은 1.5%로 예상⁵⁸⁾
-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의 네덜란드 시장가치는 작년에 비해 절반 수준을 기록. 2007년 말 네덜란드 주식 총 가치는 약 7,000억 유로였으나 2008년 11월말 3,330억 유로로 절반 수준

58) 네덜란드 통계청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1) 2009 예산안상 경기부양대책

□ 네덜란드 재무부가 2008년 9월 16일 발표한 2009년 예산안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 2009년에는 교육, 사회 개혁, 안전 보장, 지속가능한 발전에 투자
- 인플레이션 논쟁 ⇨ 부가가치세를 인상안 폐지
- 실업률 해소 ⇨ 고용보험료 폐지, 62세 이상 근로자 장려금 지급 등
- 혁신과 기업이윤 제고 ⇨ 법인세 인하 등

□ 금융지원

- 세계경제위기 속에서도 네덜란드는 큰 경기침체를 보이지 않지만 경제 정체기임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금융안정대책을 발표
 - 2008년 10월 7일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예금보호한도 증액(3.8만 유로에서 10만 유로) 발표
 - 국민들의 경제 전반에 대한 불신과 신뢰 저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자금인출 사태를 방지하여 경기침체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풀이되고 있음
 - 2008년 10월 9일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 및 중앙은행장은 흑자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구조자금을 금융권에 200억 유로 투입 결정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 국채 발행 계획(113억 4,000만 유로)
 - 대출보증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계획
 - 신용보증계획에 따라 은행 · 보험회사 · 연금펀드 대출 보장(최대 2,000억 유로)⁵⁹⁾
 - 2008년 10월 13일 네덜란드 총리는 은행 간 자금교환의 활성화

를 위해 2008년 10월 23일부로 은행 간 자금 교환에 대해 정부가 2,000억 유로까지 보증을 서주는 제도를 신규로 도입한다고 발표

- 신용경색에 따라 은행 간 자금차입이 어려워지자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대출금리 상승(Libor+3%) 등의 부작용 해결을 위해 도입되었음. 이 보증제도는 금융경색이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

□ 기업지원

- 신설법인 창업 지원수당을 155 유로에서 2,190 유로로 인상
- 중소기업의 첫 과세구간(250,000 유로)의 법인세율을 20%로 인하
- 연구개발 인센티브제도(research and development incentive scheme)를 혁신 IT 프로젝트까지 확대
 - 연구개발(인센티브)법에 따라 R&D에 총 3,900만 유로 지원
- 중소기업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지원금으로 4,000만 유로 배정

□ 가계지원

- AOW(Algemene Ouderdomswet) 수당 80유로 증액
- 청소년가족센터의 전국적 확대에 10,000만 유로 배정

□ 고용지원

- 정부는 고용지원과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고용주의 실업보험을 0%로 계획⁶⁰⁾

59) http://www.minfin.nl/english/News/Newsreleases/2009/01/Majority_of_banks_say_they_will_use_guarantee_scheme_in_2009

60) Budget memorandum 2009

- 18세 이상 27세 이하 국민에 적용하는 취업및학업등록제 (work/study entitlement)가 도입될 것임
- 18세 이상 27세 이하의 국민은 취업을 하거나 교육을 받게 됨(또는 교육과 취업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에너지정책지원

- 재생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기후대책에 17억 유로 배정
- 2009년에 주택건설에 도입되는 엄격한 에너지 소비기준으로 열펌프(heat pumps), 태양열 온수기, 태양 전지 패널 및 온실가스배출량 절감에 보조금 지급

□ 사회기반시설 투자지원

- 사회혁신프로그램(안전, 복지, 에너지)에 2,900만 유로 배정
- 철도운송 확장에 따라 새로운 철로, 역사건설로 2009년에 7,500만 유로 배정
- 표현의 자유, 언론의 다양성, 종교의 자유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기금에 2,500만 유로 배정

□ 네덜란드의 2009년 예산현황

수입	1,822억 유로	지출	1,790억 유로
소득세	49.1	교육문화과학부	34.9
법인세	18.4	사회노동부	25.2
배당세	3.8	지방자치기금관리	18.7
상속세	1.9	보건복지부	14.4
도박세	0.5	공채이자지급	14.2
부가가치세	46.0	건설교통/수자원/경제구조 강화기금/인프라기금	10.8
소비세	11.0	외교부/협력개발부/EU	10.7
거래세	6.1	국방부	8.1
환경세	4.6	내무부/국왕	6.6
여객운송세	3.5	청소년가족부	6.2
자동차세	3.4	사법부	5.7
수입세	2.4	주택지역통합부	4.9
항공세	0.4	재무부	4.1
포장물세	0.3	경제부	2.6
비알콜성음료등의 소비세	0.2	농림식품부	2.4
대형수송차량세	0.1	주택공간계획환경부	1.2
비조세수입(천연가스)	30.5	기타	8.3

자료: 네덜란드 재무부(<http://www.minfin.nl/dsresource?objectid=58547&type=pdf>)

□ 네덜란드의 Budget surplus(EMU balance) 2008~2011

(단위: % of GDP)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actual budget surplus	1.2	1.2	0.8	1.1
structural budget surplus	0.9	1.1	0.9	1.2

자료: Bureau memorandum 2009

2) 2008년 11월 경기부양대책

- ☐ 2008년 11월 21일 Jan Peter Balkenende 총리가 60억 유로(GDP 1%)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⁶¹⁾
 - 기업의 유동성 지원
 -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 조기 추진
 - 조세감면(투자 가속상각) : 11억 유로
 - 실업급여지원(근로시간단축) : 2억 유로

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정책

- ☐ 네덜란드 재무부가 2008년 9월 16일에 발표한 2009 세법개정안(The Tax Plan for 200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⁶²⁾

1) 개인과세

- ☐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육아휴가(parental leave) 공제 대상기간을 확대(13주 → 26주)
- ☐ 맞벌이 부부, 근로소득 등에 대해 세액공제 인상

61) Estimating the size of the European stimulus packages for 2009, 2008. 12(구체적 시행방안은 없음)

62) 2008년 12월 16일 상원 통과(2009년 시행)

(단위: 유로)

세액공제	2005	2006	2007	2008	2009
근로소득	1,287	1,357	1,392	1,443	1,468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기타)	389	608	700	746	770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소득관련)	0	0	0	0	995
노령 공제	454	374	380	486	661

- ☐ 연금보험료(annuity premiums) 공제한도 인상
- ☐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unemployment social security) 폐지
- ☐ 62세 이후 계속 근로하는 종업원에 대해 3,000 유로까지 장려금 지급
- ☐ 상속세및증여세 납부의무에서 스포츠클럽을 제외

2) 법인과세

-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생 이익 중 일부에 대해 과세면제하고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과세면제 금액 확대⁶³⁾
 - 중소기업 이익 중 과세면제 10.7%로 인상

3) 소비과세

- ☐ 표준 부가가치세율(standard VAT rate) 인상안(19% → 20%) 폐기⁶⁴⁾

63) http://www.minfin.nl/english/News/Newsreleases/2008/09/2009_Tax_Plan_entrepreneurship_and_simplification

64)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둔화된 경기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취소 결정

- 2008년 예산의 일부로 부가가치세 인상을 계획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둔화된 경기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취소 결정

□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한도금액 인상(7,000 유로 → 15,000 유로)되어 납부 간편화

- 그 결과 약 50,000개의 기업이 월별 신고대상자(1년에 12회)에서 분기별 신고대상자(1년 4회)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친환경 세제 관련 개정내용

- 자동차세(car and motorcycle tax) 과세기준을 표시가격(list price)에서 CO₂ 방출량로 변경
- 연료효율이 높은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
- 천연가스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인하
- 수소 차량에 대해 과세면제 도입

4) 기타

□ 납세제도 단순화 관련 개정내용

- 신규 고용 인력을 과세관청 및 관세청에 등록하는 의무 폐지
- 실무상 불명확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단순화
 - 예 : 급여로 간주되는 것 등

〈표 II-23〉 네덜란드의 경기대응 조세·재정정책

법안 통과/ 시행시기	정책내용	재정규모/기간
2008년 9월 16일 (정부 발표)	Budget memorandum 2009 - 금융시장 안정대책 - 사회기반시설 투자지원 · 사회혁신프로그램(안전, 복지, 에너지) · 철로, 역사 확장 건설 - 조세정책 · 맞벌이부부 소득공제 인상 · 연금보험료 공제한도 인상	
2008년 11월 21일 (정부 발표)	경기부양대책 - 기업의 유동성 지원 -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 조기 추진 - 조세감면(투자 가속상각) - 실업급여지원(근로시간 단축)	- 재정규모: 60억 유로

8. 핀란드

가. 경제동향

□ 핀란드의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GDP(change in volume %)	2.8	4.9	4.5	2.5	0.5
노동생산성(change %)	1.7	3.4	3.3	2.3	2.4
실업률(% of labour force)	8.4	7.7	6.9	6.5	7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change in volume %)	1.2	1.7	2.9	3.5	4
소비자물가지수(change %)	0.9	1.6	2.5	4	2
재정수지(% GDP)	2.7	4.0	5.3	4.6	3.3

자료: 핀란드 재무부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08/2, No. 84, December

	환율(EUR/USD)		이자율		소비자물가 지수	주가지수 (종가기준)
	기말	평균	시장금리	공채수익률		HEL 25
2004	0.73	0.81	2.11	4.11	105.28	n.a.
2005	0.85	0.80	2.18	3.35	106.19	2301.26
2006	0.76	0.80	3.08	3.78	107.85	2910.49
2007	0.68	0.73	4.28	4.29	110.56	3010.11
2008Q1	0.63	0.67	4.48	4.07	113.44	n.a.
2008Q2	0.63	0.64	4.86	4.49	115.01	n.a.
2008Q3	0.70	0.67	4.98	4.55	115.85	n.a.
2008Q4	n.a.	n.a.	n.a.	n.a.	n.a.	1515.65

주: n.a. = not applicable

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MF, 2008, 1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 ☐ 글로벌 금융위기가 핀란드에 미치는 파장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지는 않으나, 수출에 의존하는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를 지닌 핀란드도 결코 이번 파동에서 자유롭지 못함
- ☐ 이에 따라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핀란드 정부는 감세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대응. 또한 주택건설 촉진과 수출 진작도 구체적인 경기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
- ☐ 2009년 1월 27일 경제정책위원회는 금융시장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⁶⁵⁾
 - 은행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고 가계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음
 - Mari Kiviniemi 장관은 은행의 기업지원이 고용능력 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 2009년 2월 초 정부는 은행예금에 공공자본투자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 예정
 - 은행 후순위채권 발행(5년 만기 국채 이자율+6%p)
 - 은행은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유지해야 하며, 대출업무에 대해 재무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 은행 차환발행에 대해 정부 지급보증⁶⁶⁾

65) http://www.vm.fi/vm/en/03_press_releases_and_speeches/01_press_releases/20090127Measur/name.jsp

- 의회의 결정에 의하면 정부 보증은 최대 50억 유로이며, 2009년 4월 30일까지 유효. 이후에는 보증의 필요성에 대해 평가 실시할 예정
- 후순위채권과 차환발행의 정부 지급보증에 대한 조건은 은행의 최고 경영자 급여체계에 대한 제한을 포함
 - 경제정책위원회에 의해 설정된 공통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이와 동시에 급여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이익을 초과할 수 없음
 - 성과급 및 기타보너스도 성과에 기반하여야 하며, 옵션은 보너스로 지급될 수 없음
- 재무부는 국가연금기금도 재정구조가 건실한 핀란드 회사의 기업어음 매입을 위해 자산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
 - 이러한 결정은 기업어음시장의 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1) 2009 예산안상 경기부양대책

- 핀란드 정부가 2008년 9월 15일 발표한 2009년 예산은 경제성장 촉진과 고용증대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됨⁶⁷⁾
 - 정부부처별 예산 규모는 사회복지부, 교육부, 재무부가 가장 큼

66) 2008년 12월 국회통과

67) http://www.vm.fi/vm/en/04_publications_and_documents/01_publications/01_budgets/20090126Budget/Bk_2009_enkku_NETTI_%2b_KANNET.pdf

□ 핀란드의 2009년 예산안

(단위: € million, %)

	B/S	예산	예산안	변동	
	2007	2008	2009	2008~2009	
단위	€ million				%
수입					
조세	36,711	38,490	38,879	389	1
기타수입	4,023	4,795	4,805	10	0
이자수입	2,273	1,994	1,991	-4	-0
공채	205	242	234	-8	-3
합계	43,212	45,522	45,908	386	1
지출					
대통령	10	10	13	3	30
의회	106	122	125	3	2
국무회의	198	62	79	18	29
외무부	972	1,135	1,170	35	3
사법부	731	748	795	46	6
내무부	1,063	1,118	1,169	51	5
국방부	2,203	2,419	2,778	360	15
재무부	6,335	6,870	7,323	453	7
교육부	6,542	6,990	7,498	508	7
농림부	2,659	2,813	2,836	23	1
운송통신부	1,895	2,130	2,109	-22	-1
노동경제부	2,176	2,435	2,322	-112	-5
사회복지부	12,775	14,129	14,826	697	5
환경부	322	329	316	-13	-4
주 채무 지원	2,341	2,364	2,395	31	1
주 채무 감면	2,925	1,848	153	-1,695	-92
합계	43,252	45,522	45,908	387	1

자료: 핀란드 재무부

□ 기업지원

○ 기업 보조금 지원

- 투자 및 개발 프로젝트 보조금으로 4,400만 유로 배정

- 고용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보조금으로 1,200만 유로 배정
- 비즈니스 운영 및 취업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옵션 개선방안 실행
 - Aloitusrahasto Vera Oy and Veraventure Ltd에 3,000만 유로 배정
 - Finnish Industry Investment Ltd에 5,000만 유로 배정

□ 가계지원

- 셋째 자녀의 월 아동수당 10 유로로 증액
- 자녀 가정육아수당(3세 이하) 월 20 유로, 자녀 사설보육시설 보조금은 월 22.67 유로로 증액
-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s)⁶⁸⁾에 2,000만 유로 배정
- 주택 소유주들에게 보유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금 제공

□ 고용지원

- 고용창출을 위해 120만 유로 추가배정
 - 실업 보조금 지급(실업자가 구직활동으로 최소 6개월 동안 풀타임 근무 조건)
- 경기하강에 따른 실업률 증가 예상으로 1억 7,400만 유로 배정
- 저임금 근로자 보조금으로 1억 유로 배정

□ 사회기반시설 투자지원

- 노숙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주택건설에 8,500만 유로 배정
- 공공교육기관에 3,000만 유로 배정
 - 학교 건물 보수 공사 등에 사용

68) 자녀를 가진 가구를 위한 주택지원의 일종으로 가족의 규모, 수입, 주택비용, 주택 크기에 따라 저소득 가족에게 적당한 주택가격의 비용 일부를 지원

- 핀란드 Jokela and Kauhajoki의 직업학교에서 벌어진 총기사건을 계기로 소화기 비치 100만 유로, 경찰의 모니터 비용으로 881,000 유로 배정

2) 2009년 1월 경기부양대책⁶⁹⁾

- 2009년 1월 30일 핀란드 정부는 20억 유로 규모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경기부양대책 발표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수요회복에 집중
 - 25,000개 정도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과 교육, 연구지원, 도로 정비 등의 기반시설에 투자 집중되며, 추가경정예산은 57억 5,000만유로까지 확보⁷⁰⁾
-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공공 도로·철도건설, 다리 유지 보수, 중소도시의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건설 등에 5,000만 유로 배정
 - 헬싱키 지역의 대중교통수단 개선
 - Kainuu 지역개발사업
- 주택건설 사업
 - 임대주택, 주택유지보수 등의 2009년 사업에 3,700만 유로 배정
 - 지역의 복지사업용 건물의 개보수 보조금 지급

69) <http://www.valtioneuvosto.fi/ajankohtaista/tiedotteet/tiedote/fi.jsp?oid=252614>

70) 2009년 1월 30일 의회 통과

□ 공항, 초고속인터넷, 수로망 확충

- Helsinki-Vantaa 공항 개선계획에 1,000만 유로 배정
- Oulu 공항의 여객터미널 확장에 600만 유로 배정
- 초고속인터넷 건설에 2009년에 6,600만 유로를 배정하여 2015년까지 총 1억 9,800만 유로 지원 예정. 이에 따라 3,000개의 일자리도 창출
- 물공급, 수로망 확충, 호수 재건 사업 등에 2,440만 유로 배정

□ 국민연금 인하로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

- 2009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을 0.8%p 인하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며 새로운 연금제도는 2011년에 도입될 것임

□ 교육지원대책

-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직업기초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에 실시
에 1,000만 유로 배정

□ 기업지원대책

- 개발 및 기술 혁신 기업에 보조금 지급으로 1,000만 유로 배정
- 기업의 투자에 대한 상각금액 2배로 확대(2009년~2010년)

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정책

1) 개인과세⁷¹⁾

- ☐ 가구공제(household deduction) 한도 금액 인상(2,300 유로→3,000 유로)
- ☐ 경기활성화 및 고용촉진을 위해 근로소득세 인하
 - 과세표준 구간별로 개인소득세 세율을 1%p 또는 1.5%p 인하
 -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4%씩 상향 조정

〈표 II-24〉 근로소득세율

(단위: 유로)

과세표준	2009년 세율	2008년 세율
13,100~21,700	8+과세표준의 100분의 7	8+과세표준의 100분의 8,5
21,700~35,300	610+과세표준의 100분의 18	705+과세표준의 100분의 19
35,300~64,500	3,058+과세표준의 100분의 22	3,213+과세표준의 100분의 23,5
64,500~	9,482+과세표준의 100분의 30,5	9,793+과세표준의 100분의 31,5

- ☐ 국세 및 시세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인상함으로써 연금소득 과세 완화⁷²⁾
- ☐ 한 해당 400 유로를 한도로 비과세 문화 증빙(culture vouchers) 도입
- ☐ 상속증여세율 3%p 인하→세수 1,500 유로 감소 효과

71) 2009년에 소득세 수입이 80,000만 유로 정도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은 고용효과와 경기부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http://www.eurofound.europa.eu/eiro/2008/08/articles/fi0808029i.htm>)

72) 연금소득은 나이에 따라 10%에서 60%로 과세

- ☐ 목재 판매에 대해 2008년 4월 1일과 2009년 12월 31일 사이의 목재 판매 소득의 50% 과세면제

2) 법인과세

- ☐ 비거주자인 법인에 대한 과세
- EU 거주자이면서 관련 법령⁷³⁾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지분을 요건을 완화 (15% → 10%)

3) 소비과세

- ☐ 2009년 10월 1일자로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⁷⁴⁾ 인하(17% → 12%)
- ☐ 담배소비세를 권련(cigarettes)에 대해서는 10%(담배가격 30센트 인상), 손으로 말은 권련(hand-rolled cigarettes)에 대해서는 25% 인상(담배가격 50센트 인상)
- ☐ 알코올 음료 소비세 10%p 인상 → 세수 6,500 유로 증가 효과

73) Parent-Subsidiary Directive 2003/123/EC

74) 핀란드의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은 22%임

〈표 II-25〉 핀란드의 경기대응 조세·재정정책

법안 통과/시행시기	정책 내용	규모/기간
2008년 9월 15일 (정부 발표)	2009년 예산안 - 기업지원을 위한 투자 및 개발 프로젝트 보조금, 고용 및 생산성 향상 보조금 등 - 아동수당 증액, 실업보조금, 저임금 근로자 보조금 등 - 조세정책: 근로소득세 인하, 연금소득공제 인상, 식품 부가가치세율 인하	
2009년 1월 30일 (의회 통과)	경기부양대책 -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일자리 창출 - 주택건설 사업 - 교육지원대책	- 재정규모: 20억 유로

9. 호주

가. 경제동향

	GDP (10억 PUD)	재정수지	실업률 (%)	환율(AUD/US\$)	
				기말	평균
2003	809.67	1.8	5.93	0.75	0.65
2004	869.65	1.1	5.54	0.78	0.74
2005	933.65	1.5	5.10	0.73	0.76
2006	1,002.66	1.5	4.90	0.79	0.75
2007	1,083.99	1.6	4.40	0.88	0.84
2008Q1	283.48	1.8	4.13	0.92	0.91
2008Q2	293.36		n.a.	0.96	0.94
2008Q3	n.a.		n.a.	0.80	0.90
2008Q4	n.a.		n.a.	n.a.	n.a.

	이자율			CPI (%)	주가지수
	시장금리 (money market)	예금금리 (deposit rate)	대출금리 (leading rate)		
2003	4.81	3.26	8.41	110.50	
2004	5.25	3.63	8.85	113.08	4,053.10
2005	5.46	3.70	9.06	116.10	4,715.20
2006	5.81	3.95	9.41	120.21	5,644.30
2007	6.39	4.66	10.02	123.01	6,421.00
2008Q1	6.98	5.12	11.03	126.32	5,409.70
2008Q2	7.25	5.50	11.57	128.19	5,332.90
2008Q3	7.17	5.57	11.73	129.67	4,631.30
2008Q4	n.a.	n.a.	n.a.	n.a.	3,591.40

주: 1, n.a. = not applicable

2. GDP는 경상수지, 주가지수는 종가기준

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8.11.,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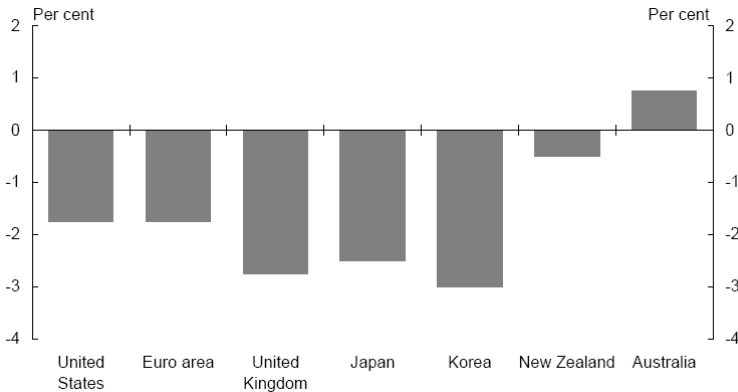
<http://www.krx.co.kr/index.html>, 네이버증권 <http://stock.naver.com/world/>,

야후금융 <http://finance.yahoo.com/intlindices?e=americas>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⁷⁵⁾

- 2008~2009년 호주의 경제성장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1%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9~2010년에는 0.75%로 예상하고 있음⁷⁶⁾
- 인플레이션은 2008년 3월에는 최근 16년간 최고치인 4.2%였으나,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하여 2008년 후반부터는 2%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하여 실업률은 2010년 6월까지 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림 II-3] 주요국의 GDP 성장률(2009년도 예상)



자료: Update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09,2

- 호주정부의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정책은 아래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중기기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예산 흑자 달성

75) Update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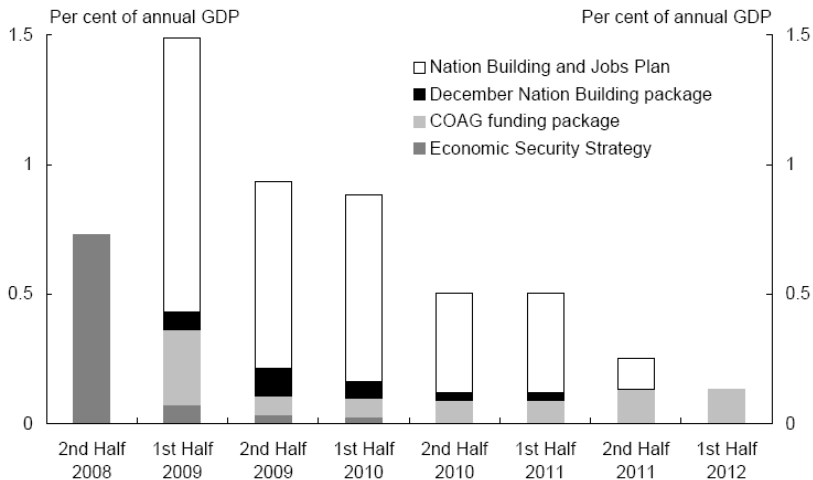
○ GDP대비 조세부담률을 2007-2008회계연도 평균수준 이하로 유지

○ 중기기간 동안 정부의 순재정가치(net financial worth)를 증가

□ 국제적인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호주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책은 2008년 10월에 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 2008년 11월에 발표된 녹색미래를 위한 신차정책(A New Car Plan for a Green Future), 2008년 11월에 지역사회 기반시설확충 프로그램(Regional and Local Community Infrastructure Program), 2008년 11월 국가개혁정책(National Reform Package), 2008년 12월 국가건설정책(National Building Package), 2009년 2월 국가건설 및 일자리창출계획(National Building and Jobs Plan)등이 있음

○ 호주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책에 대한 예산 규모는 아래와 같음

[그림 II-4] 호주정부의 경기부양책



자료: Update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09.2

1) 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 발표(2008.10.14)

-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관련하여 호주 경제를 위한 104억 호주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2008년10월 호주정부가 발표하였음
 - 경제안보전략계획으로 인하여 대략 GDP 1%가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며, 7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104억 호주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다음의 5가지 주요정책으로 정리될 수 있음
 - 48억 호주달러 규모의 장기연금개혁
 - 39억 호주달러 규모의 중·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 15억 호주달러 규모의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을 위한 지원투자
 - 2008-2009년도 1억 8,700만 호주달러 규모의 56,000개의 새로운 직업훈련장 투자
 - 호주 정부의 3개 국가건설기금 조성의 이행을 가속화 하고, 2009년도에 국가건설 프로젝트 투자 실시

2) 녹색미래를 위한 신차정책(A New Car Plan for a Green Future) 발표(2008.11.10)

- 62억 호주달러 규모의 녹색미래를 위한 신차정책을 호주정부에서 2008년11월에 발표하였으며, 이 경제부양계획으로 인하여 20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됨
 - 자동차 배기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연료 효율성을 높이며, 미래에 고급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산업을 육성시키는 계획임
 - 장기적인 자동차 산업을 보호·육성시키기 위한 계획임

3) 지역사회 기반시설확충 프로그램(Regional and Local Community Infrastructure Program) 발표(2008.11.18)

- 지역사회 기반시설확충 프로그램은 호주 사회의 기반시설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돕기 위하여 3억 호주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임
-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조달은 2009년 5월에 발표하는 예산안의 한 부분으로 지원될 예정임

4) 국가개혁정책(National Reform Package) 발표(2008.11.29)⁷⁷⁾

- 호주 정부는 13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51억 호주달러를 투자하여 경기를 부양하며, 보건, 교육, 주택, 기업규제 완화, 토착민들과의 격차해소 등에 개혁을 실시할 계획을 2008.11에 발표하였음
- 지방자치단체(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를 통하여 학교 · 병원 개선과 교사 · 간호사 · 의사들의 훈련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 이 계획을 통하여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호주경제의 부양책 역할과 1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음

5) 국가건설정책(National Building Package) 발표 (2008.12.12)⁷⁸⁾

- 호주정부는 경기부양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74억 호

77) www.infrastructure.gov.au

78) www.infrastructure.gov.au

주달러를 투자할 국가건설정책(National Building Package)을 2008년 12월에 발표하였음

- 주요한 철도, 도로, 교육인프라 시설에 74억 호주달러를 46가지 프로젝트들 통하여 투자할 계획임
 - 철로시설과 철도망 개발을 위하여 12억 호주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14개의 국영도로건설계획을 위하여 45억 호주달러(2008~2009년도와 2009~2010년 동안에는 7억 1,100만 호주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호주도로의 위험지역을 없애는 시설투자에 2008~2009년도에는 6천만 호주달러를 투자함
 - 교육인프라에는 16억 호주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관개농업과 사회인프라 개발을 위하여 1억 9,500만 호주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지원할 계획임

□ 국가건설프로젝트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대응하기 위하여 호주경제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GDP성장률 0.25%~0.5%p 제고 및 32,000개의 일자리 창출 등 2009~10년도에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6) 국가건설 및 일자리창출계획(National Building and Jobs Plan) 발표(2009.2.3)

□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호주국가내의 취업과 경제성장을 위해 420억 호주달러 규모의 국가건설과 일거리창출계획(Nation Building and

Jobs Plan)을 2009년 2월 발표하였음

- 2년간 9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 국가 건설과 취업계획(Nation Building and Jobs Plan)의 경제효과는 2008~2009년 GDP 성장률을 0.5%, 2009~2010년의 GDP 성장률을 대략 0.75%~1%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학교, 주택, 에너지 효율, 기반시설, 소규모 기업지원에 288억 호주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초등교육 시설과 운영, 중등교육 운영 등을 위하여 14억 호주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국영 주택산업을 위하여 66억 호주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면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소유자들에 천장 단열제를 공급·지원하고, 태양열 온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39억 호주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지방도로와 철도 교차로, 지방정부의 기반시설 등에 8억 9천만 호주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에 27억 호주달러가 지원될 계획임
- 정부는 127억 호주달러를 취업과 경제성장을 위하여 긴급 지원할 예정임
 - 여기에는 근로자를 위한 조세혜택으로 82억 호주달러, 외벌이가 구에게 14억 호주달러, 농촌근로자에게 2,040만 호주달러, 학교에 26억 호주달러, 교육과 훈련분야에 5억 1,100만 호주달러를 조세혜택으로 지원할 계획임

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정책

□ 2008년 5월에 발표된 2008~2009년도 예산안 이후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여 호주정부는 아래의 조세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 2007~2008회계연도 수준 이하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하여 예산 흑자를 달성하도록 함
- 세수부담을 높이지 않고 엄격한 정부지출을 통하여 예산 흑자를 달성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아 현재 수준 이하의 조세부담률(GDP대비 24.7%)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임

1) 국가건설 및 일자리창출계획(National Building and Jobs Plan) 발표(2009.2.3)⁷⁹⁾

- 2009년 2월에 발표된 국가건설 및 일자리창출계획(National Building and Jobs Plan)에 따르면, 호주정부는 127억 호주달러를 취업과 경제성장을 위하여 조세혜택으로 지원을 할 계획임

가) 개인과세

- 자녀들을 둔 외벌이 가족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경기부양을 돕기 위하여, 호주정부는 약 1,500만 가구들에게 자녀수에 관계 없이 가구당 950 호주달러를 지원하는 조세혜택 정책을 계획하고 있음
 - 2008~2009년도에 14억 호주달러를 지원할 예정임
- 의무교육 연령인 어린이들(4세부터 18세까지)중 Family Tax Benefit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비용 지원을 위하여 인당 950 호주달러의 조세혜택을 줄 예정임
 - 280만명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며, 26억 호주달러가 투입될 예정임

79) Update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09.2

- 2008~2009년도에 호주정부는 지원이 필요한 농촌일손들과 소기업들에게 2,040만 호주달러 규모의 조세혜택을 지원할 예정임
 - 특별한 어려움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인당 950 호주달러를 지원받음
- 호주정부는 82억 호주달러규모의 Tax Bonus를 납세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임
 - 2007~2008년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최고 950 호주달러까지 Tax Bonus를 지급할 계획이며, 약 870만명의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2007~2008년도에 과세소득이 80,000 호주달러이하인 경우 950 호주달러를 Tax Bonus로 지급받음
 - 2007~2008년도 과세소득이 80,000 호주달러를 초과하고 90,000 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650달러를 지급받음
 - 2007~2008년도 과세소득이 90,000 호주달러를 초과하고 100,000 호주달러이하인 경우 300 호주달러의 Tax Bonus를 지급받음

나) 법인과세

- 소기업과 일반기업 조세정책
 - 호주정부는 사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기업과 일반 기업들에게 감가상각충당금(Capital Allowances)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27억 호주달러를 지원할 계획임
 - 소기업의 경우, 2008년 12월 13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1,000 호주달러 이상의 자산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설치한 경우 감가상각충당금(Capital Allowances)이 고율인 30%로 인정되며,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2010년 12월 31일

까지 설치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충당금이 10%로 인정됨

- 일반 기업의 경우, 1만 호주달러 이상의 자산의 경우 위와 동일한 세 제혜택이 인정됨

〈표 II-26〉 호주의 경기대응 조세·재정정책

법안통과/ 시행시기	정책 내용	규모
2008.10 (정부발표)	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 - 장기연금개혁(A\$ 48억) - 중·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A\$ 39억) -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을 위한 지원투자(A\$ 15억) - 직업훈련장 투자, 국가건설 프로젝트 등	재정규모('08~'10): A\$ 104억
2008.11 (정부발표)	녹색미래를 위한 신차정책	재정규모: A\$ 62억
2008.11 (정부발표)	지역사회의 기간시설확충 프로그램	재정규모: A\$ 3억
2008.11 (정부발표)	국가개혁정책 - 주정부를 통하여 학교·병원 개선과 교 사·간호사·의사들의 훈련 등 투자	재정규모: A\$ 151억
2008.12 (정부발표)	국가건설정책 - 주요한 철도, 도로, 교육인프라시설에 투자	재정규모('09~'11): A\$ 74억
2009.2 (정부발표)	국가건설 및 일자리창출계획 - 학교, 주택, 에너지 효율, 기반시설, 소규모 기업지원 - 취업과 경제성장에 긴급 지원	재정규모('09~'11): A\$ 420억 - 재정:A\$ 288억, 조세:A\$ 127억

10. 일본

가. 경제동향

	GDP ¹⁾	재정수지	실업률	환율(yen/US\$)	
	(10억 엔)	(GDP비율)	(%)	기말	평균
2003	490,294	-7.9	5.26	107.10	115.93
2004	498,328	-6.2	4.72	104.12	108.19
2005	501,734	-6.7	4.40	117.97	110.22
2006	508,925	-1.4	4.14	118.95	116.30
2007	515,733	-2.4	3.90	114.00	117.75
2008Q1	509,400 ²⁾	-1.4	n.a.	100.10	105.20
2008Q2			n.a.	106.40	104.53
2008Q3			n.a.	104.30	107.61
2008Q4			n.a.	n.a.	n.a.
	이자율			CPI	주가지수 ⁵⁾ (TOPIX)
	예금금리 ³⁾	대출금리 ⁴⁾	공채수익률		
2003	0.04	1.82	1.01	98.11	
2004	0.08	1.77	1.50	98.10	1,149.63
2005	0.27	1.68	1.36	97.83	1,649.76
2006	0.68	1.66	1.73	98.07	1,681.07
2007	0.81	1.88	1.65	98.13	1,475.68
2008Q1	0.55	1.93	1.35	98.53	1,212.96
2008Q2	0.78	1.92	1.64	99.38	1,320.10
2008Q3	n.a.	n.a.	1.47	n.a.	1,087.41
2008Q4	n.a.	n.a.	n.a.	n.a.	859.24

주: 1) 경상수치입.

2) 재무성 「2009예산안」의 수치입.

3) 300만~1,000만엔 정기예금평균금리

4) 장단기대출, 여음할인, 당좌대출 등에 부과된 가중산술평균 은행금리

5) 종가기준

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8.11., IMF.

<http://www.krx.co.kr/index.html>, <http://stock.naver.com/world/>

<http://finance.yahoo.com/intlindices?e=americas>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 세계적으로 경기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경제는 국내수요도 정체되고 있고 경기하강 국면의 장기화 및 심각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특히 고용 정세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 기업의 자금 융통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일본 정부는 2008. 10. 30에 「생활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2008. 12. 19에는 「생활보호를 위한 긴급대책」을 2009년 예산안과 더불어 발표하였음
 - 2009 예산안은 2009.1.19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임

1) 2008년 10월 생활대책⁸⁰⁾

- 생활 안정, 금융·경제의 안정 강화, 지방의 저력 발휘라는 세 가지 중점 분야로 정리한 「생활대책」을 2008년 10월 30일 발표하였음
 - 「생활대책」이란 금융위기 및 경기후퇴에 대응하기 위한 26.9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경기대책’, 중단기적으로는 ‘재정재건’, 중장기적으로는 ‘개혁에 의한 경제성장’이라는 3단계의 경제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2009년 예산편성에 본 정책을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함
 - 조세지출 규모는 5조엔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대폭 확대 등 총 사업규모는 26.9조엔임

80) 『生活對策』, 新たな經濟對策に關する政府・與黨會議, 經濟對策閣僚會議合同會議, 2008.10.30.

〈표 II-27〉 생활대책의 내역과 규모

		조세지출	사업규모
국민생활안정	가계긴급지원대책(정액급부)	2조엔	2조엔
	고용세이프티넷 강화대책	3,000억엔	3,000억엔
	생활안정확보대책	5,000억엔	7,000억엔
금융·경제의 안정 강화	중소영세기업지원대책안(자금마련지원)	5,000억엔	21조 8,000억엔
	성장력강화대책(연구개발지원)	1,000억엔	1,000억엔
지방지원	지역생활화(고속도로비 인하, 농업지원)	8,000억엔	1조엔
	주택투자·방재 강화(공공시설)	2,000억엔	4,000억엔
	지방자치단체 지원	6,000억엔	6,000억엔
합계		5조엔	26조 9,000억엔

가) 국민생활 안정

□ 가계긴급지원

- 지원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는 한편 저소득자에게 공평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급부방식으로 지원
 - 전 세대에 총액 2조엔을 지급하는 「생활지원정액급부금(가칭)」을 1개 연도에 지급하는 조치
- 경제계에 임금 인상 요청
- 고용보험료의 보험료 인하

□ 고용세이프티넷 강화

- 경기후퇴에 의한 영향을 가장 받기 쉬운 비정규노동자, 중소기업 및 지방 기업을 중심으로 세이프티넷(safety net) 강화
 -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안정대책 강화: 사업자에 대한 특별장려금 신설, 비정규 노동자 취업지원센터 증설(3개소→5개소)
 - 사업이 악화되는 중소기업 등의 고용 유지 지원대책 강화

- 지방에 있어서의 고용기회 창출(고향고용재생특별교부금(가칭) 창설 등)

□ 생활안심확보 대책

- 소비자청(가칭)의 신설 등 소비자정책의 근본적 강화, 간호인재 확보 및 처우 개선, 출산 및 육아 지원, 장애자·의료·연금 대책 추진

나) 금융·경제의 안정 강화

□ 금융자본시장 안정 대책

- 국내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자사주 매입규제의 완화, 기업에 대한 자사주 매입 요청, 종업원지주회사에 의한 주식 취득 원활화, 거래소에 의한 공매정보 개시의 확충, 정부가 보유한 주식 매각 일시 동결 등
- 국가의 자본 참여에 의해 금융기관의 자본기반을 강화
- 현재의 시장환경에서, 자기자본비율의 급격한 변동에 의해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자기자본 비율규제의 일부 탄력화

□ 중소·소규모 기업의 지원

- 21조엔 규모의 긴급보증과 정부계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 실시

□ 성장력 강화 대책

- 저탄소사회의 실현과 연결되는 에너지 절약·신에너지대책 추진, 금속자원의 개발 및 자원 외교의 강화 등

다) 지방 지원

□ 지역 활성화 대책

- 고속도로 요금을 대폭 인하하여 지역 기업의 재생 및 물류코스트 절감
 - 고속도로 요금 인하는 도쿄, 오사카를 제외한 지방의 고속도로 이용에 대해 휴일은 1회 1,000 엔으로 제한 없이 사용하는 방안

□ 주택투자·방재 강화 대책

- 주택대출에 대한 감세 및 용적률의 완화 등을 통해 주택 투자 등을 촉진하고 에너지 절약, 육아 등에 이바지 하는 주택의 보급을 지원
 - 주택대출에 대한 감세 부분은 5조 엔의 조세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음

□ 지방공공단체의 지원

-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역 활성화·생활대책 임시교부금(가칭)」을 신설

2) 2008년 12월 생활보호를 위한 긴급대책⁸¹⁾

- 「생활보호를 위한 긴급대책」은 현재의 경제 금융정세에 대응하여 금년도부터 3년간 경기회복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국민생활과 경제를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 2009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하였음
 - 동 대책에는 2008.10.30에 발표한 「생활대책」의 실현 및 2009년 세제개정을 포함하는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자금조달대책을 포함하는 금융정책으로 이루어짐

81) 「生活防衛のための緊急!対策」, 경제대책각료회의, 2008.12.19

〈표 II-28〉 생활보호를 위한 긴급대책의 규모

(단위: 조엔)

	규모
I. 재정정책	10
1. 고용대책	1.1
2. 고용창출 등을 위한 지방교부세 증액	1
3. 경제긴급대응예비비 신설	1
4. 세제개정(감세조치)	1.1
5. 「생활대책」의 규모	6 ¹⁾
II. 금융정책	33
6. 금융시장·자금조달대책	33
- 금융기능강화법에 근거하는 정부의 자본 참가범위 확대	10
- 은행 등 보유주식 취득 기구의 활용·강화	20
- 정책 금융의 「위기 대응 업무」발동·확충	3
- 주택·부동산 시장 대책	0.2

주: 1) 「생활대책」중 21조엔 규모의 긴급 보증과 정부계 금융기관등에 의한 대출은 제외

자료: 「生活防衛のための緊急!対策」, 経済対策閣僚会議, 2008. 12. 19.

가) 고용 대책

□ 고용기회의 확보와 이직한 사람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고용대책에 최우선으로 임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원책에 관한 정보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전해지도록 관계기관이 최대한으로 노력함

□ 구체적인 시책

○ 주택·생활 대책

- 주택의 계속 사용

- 고용정지 및 해고를 한 파견노동자에게 계속해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주를 위한 지원으로 1인 1개월 46만엔, 6개

월까지 제공

· 2008.12부터 적용

- 주택·생활 지원 자금 대출

· 최대 186만엔(고용보험 수급자의 경우는 최대 60만엔)의 대출,
6개월 후 시점에 취직하고 있는 경우 일부 반환 면제

· 2008.12부터 적용

○ 고용 유지 대책

- 고용조정 조성금 등의 확충: 고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비정규노동자 등으로 적용 범위 확대

- 자사에서 일하는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신설: 중소기업 100만엔, 대기업 50만엔(한시적 고용의 경우 각각 50%만 적용)

- 해고 등의 노동 조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해고 및 고용정지 예방을 위한 지도, 임금 미지불 사안 등에 신속·적절한 대응, 정사원 전환을 위한 지도 등 노동 조건 문제와 관련되는 상담 강화

○ 재취업 지원 대책

-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고용 기회 창출: 도도부현에 대한 교부금을 기초로 한 기금(일반회계 1,500억엔)을 재원으로 긴급·일시적 고용·취업 기회 창출

- 생활대책의 「고향고용재생특별교부금(가칭)」에 근거한 기금(특별 회계로 2,500억엔)과 합하면, 4,000억엔 규모가 됨.

- 이직자 훈련 규모의 확충 및 고용안정 실현을 위한 장기훈련 실시

- 복지·간호 분야에 있어서의 직장 체험사업의 실시

○ 취업 내정 취소 대책

- 취업 내정 취소의 방지: 기업명을 공표하고 기업 지도 등을 강화

- 내정이 취소된 취직 미결정자를 정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1명에 대해 중소기업 100만엔, 대기업 50만엔

○ 고용 보험료 인하

- 2009년도 1년에 한해 0.4%(노사 각 0.2%) 인하(6,400억엔 정도)

○ 고용보험급부의 재검토

-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 수급 자격 요건 완화: 적용 기준을 「1년 이상의 고용」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
-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 일정기한 계약노동자의 수급 자격 요건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
-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의 지원 강화: 연령, 지역을 근거로 급부 날짜를 60일 연장

○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긴급 대책에 재정지원

- 지방공공단체가 임시적으로 실시하는 이직자의 긴급 고용·거주 확보 대책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지원
- 임시고용·취업기회 창출을 위한 대책: 삼림정비, 간호보조, 보조 교원 교육 등에 의한 고용 확보
- 이직자 등의 거주안정 확보를 위한 대책: 이직자 등이 사택에 계속 입주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 지원

나) 고용 창출을 위한 지방교부세 증액

- 2009년도 예산 1조엔 규모로 지방공공단체가 고용 창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활안정’이나 ‘지방의 저력 발휘’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를 1조엔 증액

다) 경제긴급대응예비비 신설

- 경제 금융정세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위하여 「경제긴급대응 예비비(가칭)」를 신설

○ 예비비의 용도는 고용, 중소기업 금융, 사회자본 정비 등임

라) 금융시장·자금융통 대책

□ 금융기관이 안심하고 지역경제나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및 일시적으로 자금융통이 악화되어 있는 중견·대기업이나 금융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주택·부동산시장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구체적 시책

- 개정된 「금융기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가의 자본 참가범위 확대
 - 금융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재무기반 안정을 확보해 원활한 금융 기능이 발휘되도록 국가의 자본 참가범위를 현행의 2조엔에서 12조엔으로 확대
- 은행 등 보유주식 취득 기구의 활용·강화
 - 은행 등 보유주식 취득기구의 시중으로부터의 차입과 관련되는 정부 보증범위를 20조엔으로 함
- 일본 정책금융공고의 위기 대응 업무를 활용한 중견·대기업의 자금 융통대책
 - 대출범위는 2008년 2차 수정예산에 의한 3조엔
 - 정책투자은행이나 상공조합중앙금고를 통한 자금융통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일본 정책금융공고의 위기대응 업무의 대출범위를 1조엔 확대
 - 일본 정책금융공고의 새로운 위기 대응 업무: 대출범위 2조엔
- 주택·부동산 시장 대책
 - 주택·부동산 사업자의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을 연내에 실시
 - 2008년도 대출범위는 500억엔, 2011년도 말까지 한시조치

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정책⁸²⁾

1) 생활대책

☐ 중소·소규모 지원대책

- 중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의 한시적 인하, 중소기업의 결손금 환급 제도 부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지원 강화

2) 생활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 ☐ 일본 재무성은 지난 2008.12.19. 「생활보호를 위한 긴급대책」과 더불어 현재의 경제금융정세를 고려하여 경기회복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주택·토지세제, 법인 관련 세제, 중소기업 관련세제, 상속세제, 금융·증권세제, 국제과세, 자동차 관련 세제 등에 대한 세제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세제개정안은 2009.1.19.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의중임

가) 주택·토지세제

☐ 주택세제

- 주택용자 감세의 적용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최대공제가능액을 500만엔(장기우량주택의 경우에는 600만엔)으로 인상
 - 주택을 취득하여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거주용으로 제공한 경우의 공제기간, 주택차입금 등의 연말잔고의 한도액 및 공제율은 다음과 같음

82) 『평성 21年度 税制改正의 大綱』, 재무성, 2008.12.19.

〈표 II-29〉 일본 주택차입금에 대한 특별공제

(단위: 만엔, %)

거주년	공제기간	주택차입금등의 연말잔고의 한도액	공제율
2009	10년간	5,000	1.0
2010	10년간	5,000	1.0
2011	10년간	4,000	1.0
2012	10년간	3,000	1.0
2013	10년간	2,000	1.0

- 인정장기우량주택의 신축 또는 건축 후 사용된 적이 없는 인정장기우량주택을 취득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에 거주용으로 제공했을 경우의 특례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공제기간 및 공제율은 다음과 같음

〈표 II-30〉 일본 인정장기우량주택차입금에 대한 특별공제

(단위: 만엔, %)

거주년	공제기간	주택차입금등의 연말잔고의 한도액	공제율
2009	10년간	5,000	1.2
2010	10년간	5,000	1.2
2011	10년간	5,000	1.2
2012	10년간	4,000	1.0
2013	10년간	3,000	1.0

- 자기 자금으로 장기우량주택의 신축 등을 하는 경우나 에너지 절약 및 장벽제거 개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
- 주택용 인정장기우량주택의 신축 또는 건축 후 사용된 적이 없는 인정장기주택을 취득하고 2011.12.31까지 거주용으로 제공한 경

우 해당 인정장기우량주택의 신축 등과 관련된 표준적인 성능강화비용상당액(1,000만엔)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소득세액에서 공제함

· 소득세액이 3,000만엔이 넘는 경우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공제액을 당해연도에 전액 공제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해의 소득세에서 공제함

- 자신의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에너지절약보수공사를 하고 해당 주택을 2009.4.1.~2010.12.31. 기간에 자신의 거주용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에너지절약보수공사비용과 표준공사비용 중 적은 금액(200만엔(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300만엔) 한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소득세액에서 공제함
- 거주용 주택에 장벽제거 공사를 하고 해당 주택을 2009.4.1. ~ 2010.12.31. 기간에 거주용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장벽제거 공사비용과 표준공사비용(200만엔 한도) 중 적은 금액의 10% 상당액을 당해연도 소득세액에서 공제함

□ 토지 세제

○ 2009년과 2010년에 취득하는 토지를 5년 초과하여 소유하고 양도할 때의 양도이익에 대해 1,000만엔을 공제하는 장기양도소득 특별공제제도 신설

- 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함

○ 사업자가 2009년과 2010년에 토지를 선행취득하고, 그 후 10년 내에 다른 토지를 매각했을 경우, 그 양도이익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신설

○ 토지의 매매 등과 관련되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감 조치인 현행 세율을 2년간 적용하고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표 II-31〉 토지의 등록면허세 세율

(단위: %)

	토지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의 소유권 신탁의 등기
2009.4.1 ~ 2011.3.31	1.0	0.2
2011.4.1 ~ 2012.3.31	1.3	0.25
2012.4.1 ~ 2013.3.31	1.5	0.3

나) 법인 관련 세제

□ 투자감세조치

○ 에너지수급 구조개혁 추진 설비투자 촉진

- 2009.4.1.~2011.3.31. 기간에 취득하는 에너지수급구조개혁추진 설비 등은 사업용으로 제공한 사업연도에 취득가격까지 즉시 상각함

○ 자원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설비투자 촉진

-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의 개정 시행일로부터 2012.3.31까지의 기간에 인정자원생산성혁신계획(가칭) 또는 인정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도입계획(가칭)에 기재된 자원생산성혁신설비 등(가칭) 또는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가칭)의 취득 등을 한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해서 취득가격의 30% 상당액(건물은 15% 상당액)의 특별상각을 허용
- 2011.3.31까지 기간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수급구조개혁추진투자촉진세제와 동일하게 취득가액까지 즉시상각을 허용

□ 중소기업 지원 세제

- 중소기업 등의 경감세율을 현행 22%에서 18%로 2009년부터 2년간 인하

- 중소기업이란 ① 보통법인 중 각 사업연도 종료시점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엔 이하인 법인 또는 자본 및 출자가 없는 법인 ② 공익법인 등 ③ 협동조합 등 ④ 인격이 없는 사단 등
- 중소기업은 2009.2.1. 이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생긴 결손금액에 대해 결손금 환급제도를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함
-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양도특별공제 적용범위 확대
 - 특정 주택지 조성사업 등을 위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1,500만엔 특별공제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에 상가활성화계획 또는 상가활성화 지원계획(가칭)에 근거하는 사업용 토지의 양도를 포함하였음

다) 상속세제

- 거래시세가 없는 주식 등과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유예제도 신설
 - 경영승계상속인이 비상장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그 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해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그 경영승계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 중 상속 등에 의해 취득한 의결권 주식 등(상속 개시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의결권 주식 등을 포함하고 그 회사의 발행제의결권주식 총수의 3분의 2까지)과 관련되는 과세 가격의 80%에 대응하는 상속세의 납세를 유예함

라) 증권·금융세제

- 상장주식 등의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 등에 대한 특례세율
 - 2009.1.1.~2011.12.31. 기간의 상장주식 등의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 등에 대한 세율은 7%(주민세 포함 10%) 경감세율로 함
- 상장주식 등의 배당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세율 연장

- 2009.1.1.부터 2010.12.31. 사이에 거주자 또는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진 비거주자에 대해서 지불하는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에 대한 7% 경감세율의 특례를 1년 연장함

□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보완

- 확정기여형 연금에 대해서 개인기여(매칭기여)를 도입함과 동시에 기여금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고 기여한도액을 인상
 - 기업형연금의 경우 다른 기업연금이 없는 경우 현재 월 46,000엔에서 51,000엔으로, 다른 기업연금이 있는 경우 현재 월 23,000엔에서 25,500엔으로 인상
 - 개인형연금의 경우 현재 월 18,000엔에서 23,000엔으로 인상

□ 생명보험료 공제의 개편

- 생명보험 계약 중 간호보장 또는 의료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현재의 일반생명보험료 공제와 별도로 4만엔의 소득공제(간호의료보험료 공제)를 신설
 - 2012년 이후의 소득세에서 적용하며, 적용 이행에 수반되는 제 과정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한 후 2010년 세법 개정에서 추가 조치를 강구함

연간 지불보험료	공제액
20,000엔 이하	지불보험료 전액
20,000엔 초과 40,000엔 이하	지불보험료 \times 1/2 +10,000엔
40,000엔 초과 80,000엔 이하	지불보험료 \times 1/4 +20,000엔
80,000엔 초과	일률 40,000엔

마) 국제과세

□ 외국자회사 배당이익금 불산입제도의 도입

- 일본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획득하는 이익이 국내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는 필요한 경과조치 등을 강구한 후 폐지하고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
 -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의 주식 등을, 배당 등의 지불 의무가 확정되는 날 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외국법인을 말함
 - 동 제도는 2009.4.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 등에 적용함

바) 자동차 과세

□ 일정한 배기가스 성능·연비 성능 등을 갖춘 자동차와 관련되는 자동차 중량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 2009.4.1.~2012.4.30. 기간에 받는 신규·계속검사(해당 기간 내에 최초로 받는 검사에 한정) 시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 중량세에 대하여 배출가스기준 및 연비성능 등에 따라 과세면제, 75% 세율경감, 50% 세율경감 조치함

〈표 II-32〉 2009년도 세제개정에 의한 세수증감

(단위: 억엔)

개정사항	평년도	초년도 (2009년도세수증감)
1. 주택·토지세제		
- 주택 용자 감세	△1,530 ¹⁾	△110
- 장기우량주택의 신축 및 기존주택의 개 량에 관한 세액공제제도	△240	△110
계	△1,770	△220
2. 법인 관련 세제		
- 에너지수급구조개혁추진설비등의 즉시상 각제도	△850	△780
- 자원생산성향상촉진세제	△430	△410
계	△1,280	△1,190
3. 중소기업 관련 세제		
- 세율의 인하	△1,110	△1,100
- 결손금의 환급 적용시한 폐지	△1,120	△940
계	△2,220	△2,040
4. 상속세제		
- 비상장주식등과 관련된 납세유예제도	△210	△170
- 농지 등의 납세유예제도의 재검토	△80	0
계	△290	△170
5. 금융·증권세제		
- 확정기여형연금제도의 개정	△270	△50
6. 자동차과세		
- 자동차중량세 감면조치	△1,020 ²⁾	△1,020 ²⁾
합계	△6,850	△4,690

주: 1) 주택용자 감세에 의한 평년도 수입 감소 예상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거주분에 대해 개정 후의 제도를 적용했을 경우의 수입 감소 예상액의 평균과 개정 전의 제도(2008년 중에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를 적용했을 경우의 수입 감소 예상액수와의 차액을 계상하고 있음

2) 자동차 중량세의 감면 조치에 의한 수입 감소 예상액은 특별회계분(평년도 △340억엔, 초년도 △340억엔)을 포함함

자료: <http://www.mof.go.jp/genan21/zei002.htm>

〈표 II-33〉 일본의 경기대응 조세·재정정책

법안 통과/ 시행시기	정책 내용	규모/기간
2009.10 (국회제출)	생활대책 - 가계긴급지원, 고용안정 등 - 금융·경제의 안정 강화	- 재정규모: 26.9조엔
2009.12 (국회제출)	생활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 재정정책: 고용대책,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교부세증액, 경제긴급대응예비비 신설, 세제개정 등 - 금융정책: 정부의 자본참가 확대, 정책금융의 위기대응업무 발휘, 주택·부동산시장대책 등	- 재정규모 (‘09~’11): 37조엔 - 재정정책 10조엔, 금융정책 33조엔

11. 싱가포르

가. 경제동향

경제지표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GDP	7.3	8.2	7.7	1.2	6.9	2.2	-0.2	-3.7
소비자물가지수(CPI)	0.5	1.0	2.1	-	-	-	-	-
노동생산성	2.8	1.5	-0.9	-	-2.7	-7.4	-9.6	
실업률(level in % of labour force)	3.1	2.7	2.1	2.3	-	-	-	-
경상수지(S\$)	371억	473억	590억	-	102억	92억	107억	-

	환율(S\$/US\$)		이자율		주가지수 (종가기준)
	평균	기말	예금금리	대출금리	STI
2004	1.6903	1.6338	0.23	5.3	531.73
2005	1.6646	1.6642	0.26	5.3	601.28
2006	1.5889	1.5336	0.25	5.33	2,985.83
2007	1.5071	1.4412	0.25	5.33	3,482.30
2008	1.4148	1.4392	0.22	5.38	1,770.65

주: n.a. = not applicable

자료: http://www.mas.gov.sg/resource/data_room/msb/january%202009%20Vol%2030%20No%201.pdf

싱가포르 증권거래소(<http://www.ses.com.sg/>)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 싱가포르 총리는 연두교서에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싱가포르도 피할 수 없다고 말함
 - 해외수요 둔화로 수출이 위축되고 서비스 산업도 둔화되어 싱가포르도 기술적 경기침체에 진입
 - 이에 대응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고용 유지, 기업의 자금지원 강화,

세제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S\$ 205억 규모의 경기부양 예산 포함) 2009 회계연도⁸³⁾ 예산안을 1월 22일 의회에 제출

-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재정지출과 조세감면을 포함한 S\$ 205억 규모의 부양대책(Resilience Package) 마련
- 경제위기 대응에 있어 고용유지 및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기업 및 가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각종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
- 세입은 2008년 대비 17.5% 감소한 S\$ 334.3억으로, 세출은 12.1% 증가한 S\$436.2억으로 경상재정수지는 S\$ 102.0억 적자
 - 기존의 재정잉여로 조성한 자금을 활용(S\$ 49억)하여 실제 올해의 종합재정수지는 S\$ 86.7억(GDP의 3.5%) 적자 예상⁸⁴⁾
 - S\$ 49억은 Job Credit(S\$ 45억) 및 기업 자금난 해결을 위한 특별위험분담대책(SRI, Special Risk-Sharing Initiative, S\$ 4억)에 사용

〈표 II-34〉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S\$억, %)

	2008년 B/S(A)	2009년 예산안(B)	증감	
			금액(B-A)	증감률
세입(a)	405	334.3	△7.07	△17.5
세출(b)	389	436.2	47.2	12.1
경상지출	292.5	321.6	29.1	9.9
경제사회개발지출	96.5	114.6	18.1	18.8
경상재정수지(a-b)	16	△102	△118	-
특별이전지출(c)	74	61.5	△12.6	△17
순투자순익(d)	36.5	76.7	40.2	110
종합재정수지(a-b-c+d)	△21.5	△86.7	-	-

자료: 싱가포르 재무부(http://www.singaporebudget.gov.sg/speech_ph/annexe.pdf)

83) 2009.4~2010.3

84) http://www.singaporebudget.gov.sg/speech_ph/ph.html#s2

〈표 II-35〉 부문별 세출예산(안)

(단위: S\$억, %)

	2008년		2009년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사회개발	159.3	41	180.8	41.4	13.4
교육	82.5	21.2	87	19.9	5.5
의료보건	27.5	7.1	37.1	8.5	34.5
지역개발·청소년스포츠	14.6	3.8	19.5	4.5	33.5
국가개발	19.5	5.0	19.2	4.4	-1.9
환경·수자원	9.5	2.4	10.9	2.5	15.4
정보·통신·예술	5.7	1.5	7.1	1.6	24.1
국방·치안·외교	139.8	35.9	149.3	34.2	6.8
국방	108.1	27.8	114.5	26.2	6.0
치안	27.7	7.1	30.3	7.0	9.4
외교	4.1	1.0	4.5	1.0	9.7
경제개발	75.5	19.4	88.8	20.4	17.6
운송·교통	38.1	9.8	46.4	10.6	21.9
무역·산업	27.8	7.7	32.7	7.5	9.8
인력개발(노동)	7.1	1.8	9.1	2.1	28.2
정보통신·미디어	0.6	0.1	0.6	0.1	9.7
정부부처행정	14.3	3.7	17.4	4.0	21.2
재정	6.5	1.7	8.6	2.0	32.6
법무	2.8	0.7	3.1	0.7	7.9
공공기관	2.7	0.7	2.9	0.7	9.8
총리실	2.4	0.6	2.8	0.6	19.3
합계	389	100	436.2	100	12.1

자료: 싱가포르 재무부

(http://www.singaporebudget.gov.sg/revenue_expenditure/attachment/Expenditure_Estimates.pdf)

□ 부문별 세출을 살펴보면 의료보건, 인력개발(노동), 지역개발 등 민생 지출을 확대하였음

1) 2009년 1월 경기부양 대책(Resilience Package)

□ 총 규모 S\$ 205억

- 고용지원 대책 : S\$ 51억(Jobs Credit S\$ 45억 등)
- 금융지원 대책 : S\$ 58억
- 기업의 현금흐름 원활화와 경쟁력 강화 대책 : S\$ 26억
- 가계지원 대책 : S\$ 26억
- 사회기반시설 확충 : S\$ 44억

가) 고용지원 대책⁸⁵⁾

□ Jobs Credit : 기업의 고용 유지 정책

- 근로자의 최초 월 급여의 S\$ 2,500에 대해 12%(최대 S\$ 300)를 기업에 지급(기업이 부담하는 중앙연금기금(CPF⁸⁶⁾)분으로 지급)
- 기업의 CPF 부담이 9% 경감하는 효과⁸⁷⁾
- 2009년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며 3월, 6월, 9월, 12월말에 지급

□ 싱가포르 정부는 실업방지에 초점을 맞춘 교육훈련 프로그램(SPUR, Skills Programme for Upgrading and Resilience) 실시

- 이는 싱가포르 노동부(MOM; Ministry of Manpower), 국가노조총회

85) http://www.singaporebudget.gov.sg/speech_toc/downloads/FY2009_Key_Budget_Initiatives1.doc

86) 중앙연금기금(CPF; Central Provident Fund)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일종의 강제저축임. 모든 싱가포르인들은 수입의 33~34.5%(고용주 13~14.5%, 본인 20% 부담)를 의무적으로 납입하며, 저축계좌는 공공주택 구매 등의 보조금으로 활용되는 기본 계좌(OA ; Ordinary Account) 및 투자, 의료혜택, 은퇴 후 지원 등을 위한 계좌(SMRA ; Special Account, Medisave Account, Retirement Account)의 총 네 가지로 구성(<http://www.iras.gov.sg>)

87) http://www.singaporebudget.gov.sg/speech_pc/pc.html

(NTC; National Trades Union Congress), 국가경영자연합회(SNEF; the Singapore National Employers Federation) 등 3자가 추진한 실업 대책으로 이미 120개 이상 기업이 가입해 향후 4,200명 이상 근로자의 교육을 시행

- S\$ 75,000만 규모로 2009년, 2010년 동안 시행
- 각종 자격인증 프로그램의 수강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비율 인상
 - PMET(professionals, managers, executives and technicians) 근로자의 경우 80%에서 90%로 인상

□ 저소득 근로자층에 대한 임금 보전 추진(WIS, Workfare Income Supplement)

- 2009년 동안 임금보전 수혜자(저소득층)의 대상을 확대하고 50%를 추가 지급
- S\$ 15,000만 규모로 2009년 시행

□ 정부(정부지원 사업 포함)가 2009년, 2010년간 18,000명 고용

- 교육 7,500명, 의료보건 4,500명, 공공서비스 2,600명 등

나) 금융지원 대책⁸⁸⁾

□ 싱가포르 재무부와 중앙은행인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2008년 10월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개인 및 비은행 고객의 예금 전액에 대해 2010년 말까지 정부가 지급 보증하겠다는 정책 발표

88) http://www.singaporebudget.gov.sg/speech_toc/downloads/FY2009_Key_Budget_Initiatives2.doc

○ 2010년 말까지 개인 및 비은행 고객들이 은행⁸⁹⁾ 등에 예금한 S\$ 및 외화표시 예금 전액에 대해 정부가 지급 보증⁹⁰⁾

□ 생존 가능한(viable) 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험분담정책(SRI, Special Risk-Sharing Initiative)을 시행. 이외에 기업자금 지원 대책을 확대하며, 은행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과세감면을 연장함

□ SRI는 신브리징론 프로그램(BLP, The New Bridging Loan Programme)과 무역금융계획(Trade Finance Schemes)으로 구성되었음

□ 신브리징론 프로그램(BLP, The New Bridging Loan Programme)

○ Bridging Loan Programme은 금융기관이 S\$ 50만 한도내에서 무담보·고정금리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운전자금을 대출할 경우 정부에서 미상환 리스크(default risk)의 50%를 부담하는 제도임

○ 2009년 2월 1일부터 1년간⁹¹⁾ 기업신규대출에 대해 80%까지 정부가 보증(20%는 Participating Financial Institution⁹²⁾)⁹³⁾

- 싱가포르 국내 기업 및 외국 중소기업을 대상

- 금리는 5%, 보증한도는 기존 대출의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S\$ 500만(현재 S\$ 50만)

□ 무역금융계획(Trade Finance Schemes)⁹⁴⁾

89) 은행 이외에 등록된 신용협동기구(credit cooperatives)에 예치된 예금도 보호대상

90) 대통령 승인받음

91) 상황에 따라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음

92) http://www.singaporebudget.gov.sg/speech_pd/annexb.pdf의 p.8에서 리스트를 찾아볼 수 있음

93) 기존에는 정부보증 50%, PFI보증 50%

94) http://www.singaporebudget.gov.sg/speech_pd/pd.html#s1

- 무역금융계획은 Loan Insurance Scheme-Plus(LIS+)와 Trade Credit Insurance Programme(TCIP)으로 구성됨
- Loan Insurance Scheme-Plus(LIS+)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
 - 미래에 수취될 무역액을 담보로 운전자금을 지원
 - 정부지원한도는 S\$ 1,500만 규모로 싱가포르 현지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모든 기업에 지원
 - 정부보증비율은 75%, 25%는 Participating Financial Institution
- Trade Credit Insurance Programme(TCIP)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
 - 싱가포르 기업이 무역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자금지원 대책

□ 기업자금 지원대책의 확대⁹⁵⁾

- Local Enterprise Finance Scheme(LEFS)⁹⁶⁾는 국내 모든 기업(싱가포르 현지인 지분율 30% 이상)의 설비투자 자금을 정부에서 Participating Financial Institution을 통해 고정금리로 지원(담보설정)하면서 정부에서 손실 일부를 책임지는 제도로 정부보증비율을 중소기업은 50%→80%, 그 이외의 기업은 50%로 인상⁹⁷⁾
 - 기업대출에 대해 80%까지 정부가 보증(20%는 Participating Financial Institution)
 - 금리는 5%(만기 4년 이하, 만기 4년 이상은 5.5%), 보증한도는 최대 S\$ 1500만
- Micro Loan Programme(MLP)⁹⁸⁾는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10인 이하의

95) 2009년 2월 1일부터 1년간 시행

96) <http://www.spring.gov.sg/lefs/>

97) http://www.singaporebudget.gov.sg/speech_pcl/annexb.pdf

98) <http://www.spring.gov.sg/microloan>

소기업(고정자산 S\$ 1,500백만 이하)과 종업원 200인 이하의 서비스업·건설업의 운전자금을 정부에서 Participating Financial Institution를 통해 무담보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기업이 자금 미상환시에는 정부에서 손실의 일부를 책임지는 제도임

- 정부지원금액 한도를 증액하여 S\$ 5만 → S\$ 10만
- 정부 손실부담비율을 인상하여 80% → 90%(PFI는 10%)

○ 국제화 자금지원(Internationalisation Finance Scheme)⁹⁹⁾은 싱가포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¹⁰⁰⁾의 해외 고정자산 취득자금과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해외 프로젝트 운전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임

- 정부지원금액 한도 증액하여 S\$ 1,500만 → S\$ 5,000만
- 정부 손실부담비율은 80%(PFI는 20%)
- 지원대상 기업은 상장 무역회사(매출액의 50% 이상이 무역업에서 발생)는 매출액 S\$ 3억 미만기업, 비상장 무역회사는 매출액 S\$ 5억 미만임. 상장 비무역회사는 매출액 S\$ 3억 미만, 비상장 비무역회사는 S\$ 3억 미만임

□ 은행 대손충당금에 대한 과세감면 연장

- 은행들이 적정 대손충당금을 쌓고, 금융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에 대한 과세감면을 향후 과세평가연도 3년간 연장

99) <http://www.iesingapore.gov.sg/ifs>

100) 금융, 마케팅, 구매, 물류, 인력개발(인사), 투자, R&D, 제조(기술)지원 중 3개 이상의 기능을 싱가포르내에서 수행하며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싱가포르 소재 기업임

다) 기업의 현금흐름 원활화와 경쟁력 강화 대책¹⁰¹⁾

□ 기업의 현금흐름 원활화 대책¹⁰²⁾

- 2009년 개인 및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해 40%를 환급(\$\$ 80,000만 규모)
 - 보유자가 세입자에게 임대료 등을 낮추도록 유도함
- 정부기관(JTC, HDB, SLA) 소유 부동산 임대료 15% 환급
- 비과세 해외소득의 범위를 기존의 배당, 지점소득 및 서비스소득에서 모든 해외원천소득으로 한시적(2009년 1월 22일부터 1년간) 확대
- 교통관련 세금 및 비용 감면¹⁰³⁾
 - 2009년 7월 1일부터 1년간 화물차, 버스, 택시에 대해 도로세 30% 감면
 - 2009년 4월 1일부터 1년간 싱가포르 항만 이용료 20% 할인
 - 공항 착륙요금 환급비율을 15% → 25%로 확대
 - 압축천연가스(CNG)차량에 대한 특별세감면을 2011년 12월까지 연장
- 2009년 12월까지 정부의 각종 수수료, 서비스요금(공영주차비, 인허가비용 등) 동결
- 호텔요금에 대한 평가율 인상(20% → 25%)을 1년간 유예

□ 투자 확산을 위한 대책¹⁰⁴⁾

- 국내 미디어, 디지털산업을 위해 \$\$ 23,000만 규모 지원(SMF:

101) http://www.singaporebudget.gov.sg/speech_toc/downloads/FY2009_Key_Budget_Initiatives3.doc

102) http://www.singaporebudget.gov.sg/speech_pe/pe.html#h1

103) http://www.singaporebudget.gov.sg/speech_pe/annexc1.pdf

104) http://www.singaporebudget.gov.sg/speech_pe/pe.html#h1

Singapore Media Fusion)

- 미디어, 디지털산업의 지적재산권 취득(2009년 1월 22일~2013년 10월 31일 사이 취득) 비용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5년→2년)
-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living lab”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S\$ 20,000만 규모의 “Test-Bedding Fund”를 조성
- R&D지원을 위해 S\$ 40,000만 규모의 “National Research Fund” 조성

라) 가계지원 대책¹⁰⁵⁾

-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고용대책(Jobs Credit, WIS, SPUR)을 통해 고용 유지, 가계에 대한 직접 지원,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병행 추진
- 가계에 대한 직접 지원 대책
 - 부가가치세(GST) 지원 및 노인층에 대한 보너스 지급(2009년 3월, 7월에 지급)
 - 60세 이상의 노인층은 GST Credits과 Senior Citizens' Bonuses로 총 S\$ 800를 지원
 - 소득 및 주택가격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S\$ 58,000만 규모
 - 소형(1~3의 방 개수) 공공주택 거주자에게는 1개월치, 대형(4 이상의 방 개수~고급) 거주자에게는 0.5개월치의 관리비 추가 지원(2009년 4월 지급 예정, 80만 가구 수혜 예상)¹⁰⁶⁾
 - 중앙연금기금(CPF)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대(S\$ 4,000 → S\$ 5,000)하고, 한도를 증액(S\$ 3만→S\$ 4만)

105) http://www.singaporebudget.gov.sg/speech_toc/downloads/FY2009_Key_Budget_Initiatives4.doc

106) Service and Conservancy Charge Rebates

- 유틸리티 사용(Utilities-Save) 보조금(S\$ 70~S\$ 210, 수혜대상 80만 가구), 7세~20세 아이들의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Account) 보조금(S\$ 100~S\$ 400)을 지원

□ 저소득층 지원 대책

- 대중교통 펀드(Public Transport Fund)에 정부가 S\$ 1,000만 출연하여 저소득층의 대중교통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단기학비지원제도를 마련하여 폴리테크닉, autonomous universities 등에 다니는 학생을 지원
- 1인 가구에 대한 지원금 증액(월 S\$ 30→S\$ 360)

□ 자선활동 지원

- 공공자선단체(IPCs: Institutions of Public Character) 및 기타 등록된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확대(200%→250%), 자발적 복지기구(VWOs: voluntary welfare organisations)에 대해 정부가 S\$ 1,500만 지원¹⁰⁷⁾
- 지역자활지원 펀드(Citizen' Consultative Committees Comcare Fund) 및 재활그룹 지원 펀드(Self-Help Groups)의 규모를 향후 2년간 각각 S\$ 700만 및 S\$ 900만으로 증액

마) 사회기반시설 확충¹⁰⁸⁾

□ 공공부문 인프라 확충

107) http://www.singaporebudget.gov.sg/speech_pf/annexd.pdf

108) http://www.singaporebudget.gov.sg/speech_toc/downloads/FY2009_Key_Budget_Initiatives5.doc

- 공공부문 건설 지출을 S\$ 180억~S\$ 200억 규모로 2009년부터 2~3년간 시행할 예정(2007년 S\$ 60억, 2008년 S\$ 150억 수준)

□ 부심권 개발

- Jurong 호수지역, Kallang 강변지구, Paya Lebar 지구 등 부심지역 신 상업지역으로 개발
- 공공주택 지역의 환경 정비(ABC Waters programme)
- 도시철도, 도로 등 교통망 확충 지속
- 상하수도망 정비, 확충

□ 지속가능한 개발¹⁰⁹⁾

- 향후 5년간 지속가능한 개발에 S\$ 10억 투자
 - 산업과 가정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녹색교통·운송체계, 청정에너지사용, 주거환경녹색사업 등

□ 교육과 의료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에 \$16억 투자

- 학교 교육 향상
 - 학교 시설 확충(실내체육관 건립 등)
 -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의 참여 확대
- 의료 분야 역량 확충
 - 향후 5년간 노인병원 재개발, 병원건립 등에 S\$ 40억 투자
 - 지역병원을 건립하고 심장, 신장질환 등의 치료와 노령화 관련 질병 치료의 능력을 강화

109) http://www.singaporebudget.gov.sg/speech_pg/pg.html#s2

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정책¹¹⁰⁾

1) 개인과세

☐ 개인소득세 환급

- 2009년도 과세연도(2008년도 소득 대상) 소득세의 20%(한도 S\$ 2,000) 환급

☐ 2008년~2009년 중 실직자에 대해 소득세 분할 납부기간을 12개월→24개월로 연장하며 외국인은 제외함

☐ 자가거주주택 재산세의 40%를 환급(2009년 1년간 적용)

☐ 주택순가치 상승에 따른 과세에 대해 2009년에는 S\$ 15만까지 비과세하고 2010년에 폐지

☐ 기부금(승인된 박물관, 학교 등) 공제비율 200%→250%로 확대

2) 법인과세

☐ 2010년 과세연도부터 법인세율 18%→17% 인하¹¹¹⁾

☐ 손실이연(Loss Carry-back Scheme) 한도 확대 : 2009년~2010년 과세연도에 대해 이연 한도 확대(S\$ 10만→S\$ 20만), 과세소득에서 손실 공

110) Overview of Tax Changes Announced in Budget 2009(2009년 1월 22일 의회에 제출)

111) http://www.singaporebudget.gov.sg/speech_pe/pe.html#h2

제 기간을 연장(1년 → 3년)

- ☐ 기업 인수합병,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관련 세제를 개편(2009년 2월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
- ☐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계, 설비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 2009년~2010년 중 투자한 부분에 대해 최초연도에 75% 상각 허용
(현재는 3년 균등 상각)
- ☐ 영세 서비스 사업업자의 사업장 수선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2010년 2년 동안 발생한 수선비용에 대해 비용처리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 ☐ 싱가포르에 등록된 선박과 관련한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원천과세 면제기한을 연장(2009년 1월부터 5년간)
- ☐ 과세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확대(이슬람은행 관련 소득 등)
- ☐ 금융기관 본부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대출이자에 대한 원천과세 면제(2009년 1월 22일~2013년 말)
- ☐ 파생상품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 2월 26일로 만료되는 세제혜택기간을 2013년 말까지 연장
- ☐ 비과세 해외소득의 범위를 모든 해외원천소득으로 한시적(2009년 1월 22일부터 1년간) 확대

3) 소비과세

- ☐ 경매, 전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물품에 대해서도 부가세 및 관세를 면제(2009년 4월부터 적용)¹¹²⁾
- ☐ 와인 전시 및 회의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반입되는 와인의 일정량에 대해 부가세 및 관세를 면제
- ☐ 항공관련 유지, 수리, 보수와 관련된 비용도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에 포함

〈표 II-36〉 싱가포르의 경기대응 조세·재정정책

법안 통과/시행시기	정책 내용	규모/기간
2009. 1. 22 (의회제출)	경기부양대책 - 고용지원, 금융지원, 기업경쟁력 강화, 가계지원강화, 사회기반시설 확충, 조세감면 등으로 구성	재정규모 (‘09): S\$ 205억 - 정책기간: 향후 5 년간

112)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관세청이 2009년 3월에 발표 예정

12. 대만

가. 경제동향

	GDP (10억 달러)	GDP 증가율 (%)	환율 (NT\$/ US\$)	이자율(%)	CPI	실업률(%)	주가지수
2003	305.6	n.a.	34,418	1.38	99.5	5	n.a.
2004	331	8.31	33,422	1.75	101.1	4.4	6,139.69
2005	356	7.55	33,299	2.25	103.5	4.1	6,548.34
2006	365.5	2.67	32,523	2.75	104.1	3.9	7,823.72
2007	383.3	4.87	32,417	3.38	n.a.	n.a.	8,506.28
2008	n.a.	n.a.	n.a.	n.a.	n.a.	n.a.	4,589.04

주: 1.n.a. = not applicable

2.GDP: 경상수치, 주가지수: 종가기준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8

<http://www.krx.co.kr/index.html>, 네이버증권 <http://stock.naver.com/world/>,

야후금융 <http://finance.yahoo.com/intlindices?e=americas>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 2005년 이후 재정수지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상 유례가 없는 경기부양정책 실행으로 2009년에는 NT\$ 1,650억의 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하고 있음¹¹³⁾

113) <http://www.taipeitimes.com/News/biz/archives/2008/12/24/2003431965>

〈표 II-37〉 대만의 재정수지 추이

(단위: NT\$ 10억)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0월 까지
세입	2,506	2,623	2,910	2,641	2,694	2,535
- 중앙정부	1,635	1,695	1,983	1,706	1,710	1,714
- 지방정부	871	928	927	935	984	821
세출	2,521	2,658	2,768	2,590	2,655	2,277
- 중앙정부	1,667	1,706	1,834	1,672	1,680	1,457
- 지방정부	855	952	934	918	975	820
재정수지	-15	-35	143	51	39	259
- 중앙정부	-32	-11	149	34	30	258
- 지방정부	16	-24	-7	17	9	1

자료: 대만 재정부

(http://www.mof.gov.tw/engweb/ct.asp?xItem=44024&ctNode=683&mp=2)

1) 2008년 11월 경기부양대책

□ 국제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3분기에 대만의 경제가 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자, 충격에 빠진 대만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2008년 11월 24일 NT\$ 4,829억 규모의 경기부양 종합대책 발표¹¹⁴⁾

○ 주요 내용: NT\$ 829억 규모의 상품권 지급, 향후 4년 동안 NT\$ 4천억 규모의 기반시설 투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 상품권 지급을 제외하고, 기타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

○ 상품권 지급을 위한 특별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26일

114) http://www.gio.gov.tw/ct.asp?xItem=44235&ctNode=2462

국회의 승인을 얻음

□ 재원조달계획¹¹⁵⁾

- 상품권 지급 등과 같은 경기부양정책으로 추가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2009년 1/4분기에 NT\$ 600억의 단기채권 및 NT\$ 1,100억의 중장기 채권 발행 계획
 - 2009년도 연간 기준으로 NT\$ 1,600억의 단기채권 및 NT\$ 4,300억~NT\$ 4,400억의 중장기 채권 발행 예상

가) 상품권 지급(확정)¹¹⁶⁾

- 소비 진작 목적으로 2009년 1월 18일 모든 대만 국민에게 NT\$ 3,600 상당의 상품권 지급
 - 상품권 지급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간소비 촉진이기 때문에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기로 함
 - 대만 정부에선 약 23,260,000명이 상품권 지급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음
- 2009년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초과하면 무효가 됨
 - 액면가액 NT\$ 500 상당의 상품권 6장과 액면가액 NT\$ 200 상당의 상품권 3장,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 식별이 불가능해 타인이

115) <http://www.taipeitimes.com/News/biz/archives/2008/12/24/200343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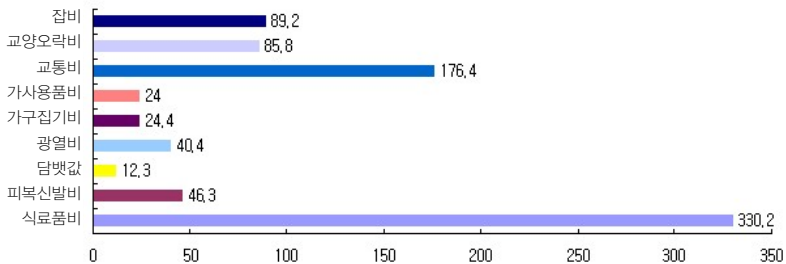
116) 『[금융위기] 대만 정부, 소비촉진책으로 對국민 상품권 지급』, 2008-11-19, KOTRA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2009년 대만 시장, 이것이 바뀐다』, 2008-12-20, KOTRA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http://www.taipeitimes.com/News/taiwan/archives/2008/12/27/2003432190>

사용하더라도 제재 불가

- 구입품목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업자등록을 필한 상가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면제되는 노점상, 의료·복지·교육기관 등에서는 사용 불가

[그림 II-5] 상품권 이용분포 예측

(단위: NT\$ 억)



자료: 「2009년 대만 시장, 이것이 바뀐다」, 2008-12-20, KOTRA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재인용

원자료: 행정원 주계처¹¹⁷⁾, 兆豐國際商業銀行

- 정부가 상품권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위해 국회에 특별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며, 2008년 12월 26일 국회의 최종적인 승인을 얻음
 - 2008년 12월 5일 “상품권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8년 12월 26일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음
- 소매 및 서비스업계에서 상품권과 관련하여 각종 판촉 전략을 전개하고 있고, 지방정부 또한 소비자의 호응도를 높여 상품권 지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권 사용 추천 이벤트 등을 마련하고 있음

117) 행정원(내각)의 하부 기관으로 예산 및 통계업무 담당

나) 기반시설 투자(계획)

- 2008년 11월 24일 정부의 경기부양대책에는 향후 4년간에 걸쳐 약 NT\$ 4,000억 규모의 자금을 기반시설 건설에 투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¹¹⁸⁾
 - 기존 지하철 시스템 확장, 교량 재건, 교실 건설 및 개조, 하수도 시스템 개선, 철로 개량, 도시 재개발 사업 등의 분야에 투자 예정
 - 대만 정부에선 이와 같은 정책의 실행으로 NT\$ 200억 이상의 민간 부문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2) 2009.02.01. 경기부양대책

- 2008년 11월 24일의 경기부양대책 발표 이후에도 경기침체 현상이 지속되자, 2009년 2월 1일 대만 정부가 경기부양자금 규모를 애초의 NT\$ 4,829억에서 NT\$ 7,150억으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발표¹¹⁹⁾
 - 향후 4년간에 걸쳐 집행되며, 이번 연도 중에 NT\$ 3,200억 집행 예정
 - 이를 통해 올해 안에 신규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하는 등 향후 4년 내에 약 2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계획
- 2009년 2월 2일 마잉주 총통이 경기부양자금 확대에 관한 내각의 案을 승인하였으며, 최종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필요
 - 그러나 집권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案이 실업률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바, 국회 승인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음

118) <http://www.gio.gov.tw/ct.asp?xItem=44235&ctNode=2462>

119) <http://www.taipeitimes.com/News/taiwan/archives/2009/02/03/2003435152>

가) 고용창출(계획)¹²⁰⁾

- 대만 정부에선 올해 공공 기반시설 건설 확대를 통해 12만개 내지 1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 분야에서 2만개 이상의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힘
- 또한 민간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 수를 감축하여 줄 것을 요청
 - 이를 통해 내국인을 위한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힘
- 대만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현재 대만 내 실업자 수가 총 116만 명에 달한 바, 이는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2008년 12월 실업률 5.01%)
 - 일부에선 올 한해 실업률이 6%까지 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3) 기타의 조치 또는 법안

가) 대만사랑 12대 건설 프로젝트¹²¹⁾

- “대만사랑 12대 건설 프로젝트(i-Taiwan project)” 착수와 함께 향후 8년 간에 걸쳐 NT\$ 3.99조 규모의 공공건설 투자가 예정되어 있음
 - 대만사랑 12 프로젝트(i-Taiwan project): 2008년 5월 마잉주 총통이 대선과정에서 내세웠던 주요 경제공약 중 하나로서 8년 동안 NT\$ 3.99조의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건설 사업을 대거 진행함으로써 내수를 확대하고, 경제성장 촉진
 - 올해 총 NT\$ 1,702억의 자금이 공공건설 분야에 투자되며, 향후 8년

120) <http://www.taipeitimes.com/News/taiwan/archives/2009/02/03/2003435152>

121) 「2009년 대만 시장, 이것이 바뀐다」, 2008-12-20, KOTRA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동안 NT\$ 2조 6,500억의 정부투자 및 NT\$ 1조 3,400억의 민간투자 발생 예상

〈표 II-38〉 대만사랑 12대 공공건설 프로젝트

(단위: NT\$ 억)

프로젝트	내용	2009년도 정부 예산	8년 내 정부투자규모
전국 교통망 정립	북부와 중남부 도심의 지하철망 확충 등 교 통인프라 정비	653.49	14,523
가오슝 자유무역, 생태항구 설립	가오슝 항구의 창고물류설비 확충과 국제적 인 해양 관광지 조성	69.53	577
타이중 아태 해운항공운송센 터 설립	타이중 항구·공항·과학단지 등 간의 연계성 제고, 공항 시설 확충	2.17	500
타오웬 국제항공 도시 조성	현 타오웬 국제공항 시설 정비 및 확충	13.64	670
지적수준 향상	인재 양성(외국어·IT 교육 강화), 문화창의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단지 조성, 무선브로드 밴드 보급 확산, 교통 및 주거환경 시스템화	241.82	2,250
산업지구 네트워크화	지역별 특정산업단지 대거 조성	98.90	1,150
도시·공업단지 개량	기존 설비 정비 및 재개발	30.60	570
농촌지역 활성화	農村再生 프로젝트 추진	22.74	1,500
해안지역 재조성	기존의 어업 전용 항구를 레저관광 겸용 현 대화 항구로써 개조, 연해 지역 생활권 및 관 광지 개발	31.17	200
녹지대 조성	8년 간 6만ha 평지 녹지지대 조성, 중남부 지 역에 대형 녹지지대 유원지(1000ha) 3곳 조성	26.77	300
치수정책	홍수재해 방지시스템 구축	379.12	1,860
하수도 건설	하수도 시설 정비	130.31	2,400

자료: 「2009년 대만 시장, 이것이 바뀐다」, 2008-12-20, KOTRA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재인용

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정책

□ 대만 정부의 최근 세법개정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조세개혁방안 중 일부로서 경제위기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내용

이 많음

-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위기 이후 그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오던 조세개혁 작업에 탄력이 붙고 있는 바, 조세개혁방안 중 일부 내용들은 경제위기 극복대책으로 의미를 가짐

〈표 II-39〉 대만의 세법개정 논의동향

구분	정책내용	추진사항	비고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인하	확정	조세개혁방안
	공제금액 인상	확정	조세개혁방안
소득세	소득공제 금액 인상	확정	조세개혁방안
	세율인하	논의중	조세개혁방안
	세금납부기한 연장	예정 (재정부 발표)	경기부양대책
법인세	법인세율 인하	논의중	조세개혁방안
	유보이익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법인세 과세 폐지	논의중	조세개혁방안
	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확정	경기부양대책
	세금납부기한 연장	재정부 발표	경기부양대책
	비즈니스 존 지정	논의중	
	기업의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정	경기부양대책
기타	자동차 상품세 인하	확정	경기부양대책

1) 개인과세

가) 소득세 공제금액 확대(확정)¹²²⁾

- 국내소비 진작을 위해 2008년 12월 12일, 대만 국회가 소득세 공제금액 확대에 관한 내각의 案을 승인했음
- 대만의 경제가 수출침체·실업률 증가·급여급감 등의 영향으로 동요하자, 소득세 공제항목 중 일부를 확대키로 함
 - 표준공제금액, 근로소득특별공제금액, 장애인특별공제금액, 교육비특별공제 금액 등을 2009년 5월 소득세 신고부터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키로 함
 - 대만 정부에선 이와 같은 세제개편으로 약 360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약 NT\$ 15.4억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행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음
 - 2명의 대학생 자녀를 가진 4인 맞벌이 가족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으로 NT\$ 5,820~NT\$ 38,800의 세부담이 감소하는 효과 발생

〈표 II-40〉 대만의 소득세 공제금액 확대

(단위: NT\$)

항목		개정이전	개정이후
표준공제	개인	46,000	73,000
	부부합산신고	92,000	146,000
특별공제	근로소득특별공제	78,000	100,000
	장애인특별공제	77,000	100,000
	교육비특별공제	가구당 25,000	학생당 25,000

주: 대만의 소득세 공제제도에는 일반공제 및 특별공제, 두 가지 종류가 있음.
 - 일반공제: 항목별 공제(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모기지 이자, 주택 임차료, 재해 손실 등) 또는 표준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특별공제: 자산양도손실, 근로소득특별공제, 저축투자특별공제, 장애인특별공제, 교육비특별공제 등이 있음.

122) <http://in.reuters.com/article/asiaCompanyAndMarkets/idINTP3094620081212>
<http://www.taipeitimes.com/News/front/archives/2008/10/17/2003426201>

나) 소득세 세율 인하(논의중)¹²³⁾

- 2008년 12월 29일 열린 “세제개혁위원회(Tax Reform Commission)”¹²⁴⁾ 제7차 회의에서 소득세율 인하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인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함
- 일부 위원들이 전 구간에 걸쳐 세율을 1%p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세율의 변경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결국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함
 -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각이 조만간 최종적인 의견을 낼 것이라고 재정부 장관 李述德이 밝힘
- 대만 정부에선 40%의 최고 세율을 변경하지 않는 대신 한계세율 21%, 13%, 6%를 각각 20%, 12%, 5% 수준으로 인하하며,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전반적인 소득세 유효세율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음¹²⁵⁾

〈표 II-41〉 대만의 소득세 한계세율

(단위: %)

소득구간(NT\$)	세율(현행)	세율(계획)
0 - 410,000	6	5
410,001 - 1,090,000	13	12
1,090,001 - 2,180,000	21	20
2,180,001 - 4,090,000	30	30
4,090,001 이상	40	40

123) <http://www.taipeitimes.com/News/biz/archives/2008/12/30/2003432453>

124) 2008년 5월 정권교체 이후 마잉주 총통이 선거과정에서 내세웠던 조세분야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결성되었으며, 정부·재계·시민단체·학계에서 뽑힌 20명 이상의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음. 부총통이 의장직을 맡고 있고, 2008년 6월말부터 매월 1차례 회의를 갖고 있는 바, 2008년 12월 29일 제7차 회의가 개최됐음.

125) “2008 YEAR IN REVIEW(China (R.O.C.))”, Tax Notes Int'l, Dec. 22, 2008, p. 949

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완화(확정)¹²⁶⁾

□ 부유층 자산의 해외 유출을 막고,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2009년 1월 12일, 대만 국회가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에 관한 정부의 案을 승인했음

-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재의 10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폐지 하는 대신 10%의 단일세율 체계 적용
- 상속공제금액 인상
 - 일반적인 경우: NT\$ 7.79백만에서 NT\$ 12백만으로 인상
 - 공무 수행중에 사망한 군인 · 경찰 · 공무원 · 교원: NT\$ 12백만에서 NT\$ 24백만으로 인상
- 증여공제금액 인상: NT\$ 1.1백만에서 NT\$ 2.2백만으로 인상

〈표 II-42〉 대만의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방안

항목		개정 이전		개정 이후
세율	기본구조	10단계 누진세율 체계		단일세율 체계
	세율구간	NT\$ 670,000 이하	2%	10%
		670,001~1,670,000	4%	
		1,670,001~3,340,000	7%	
		3,340,001~5,010,000	11%	
		5,010,001~6,680,000	15%	
		6,680,001~11,130,000	20%	
		11,130,001~16,700,000	26%	
		16,700,001~44,530,000	33%	
		44,530,001~111,320,000	41%	
		NT\$ 111,320,001 이상	50%	
면제금액	상속	NT\$ 7,790,000		NT\$ 12,000,000
	증여	NT\$ 1,110,000		NT\$ 2,200,000

자료: Guide to ROC Taxes 2008

(<http://www.ttc.gov.tw/public/Attachment/87179441471.pdf>)

126) Lawmakers Approve Tax Breaks, Jan. 26, 2009, www.taxanalysts.com

□ 대만의 부자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을 해외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 바, 부유층이 실제로 대만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¹²⁷⁾

○ 대만 재정부의 추정에 따를 경우 2007년에 잠재적인 상속세 납세자 88,170명 중 단지 4,684명만이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며, 잠재적인 증여세 납세자 188,704명 중 단지 27,597명만이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했음

- 또한 상속세 납세자 4,684명 중 대부분이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에 해당하는 바, 세액이 NT\$ 1억 이상 되는 자가 약 100명밖에 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제개편으로 연간 약 NT\$ 200억의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되나, 대만 정부에선 이와 같은 조치가 결국 부유층이 국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일부를 대만으로 돌아오게 하고 지역 금융센터(Regional Financial Center: RFC) 창설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2) 법인과세

가) 법인세 세율 인하 및 유보이익에 대한 추가적인 법인세 과세 폐지(논의중)¹²⁸⁾

□ 2008년 12월 29일 열린 “세제개혁위원회(Tax Reform Commission)”¹²⁹⁾

127) <http://www.taipeitimes.com/News/front/archives/2008/10/17/2003426201>
<http://www.taipeitimes.com/News/editorials/archives/2008/05/20/2003426125>

128) <http://www.taipeitimes.com/News/biz/archives/2008/12/30/2003432453>
 “2008 YEAR IN REVIEW(China (R.O.C.))”, Tax Notes Int'l, Dec. 22, 2008, p. 949

129) 2008년 5월 정권교체 이후 마잉주 총통이 선거과정에서 내세웠던 조세분야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결성되었으며, 정부·재계·시민단체·학계에서 뽑힌 20명 이상의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음. 부총통이 의장직을 맡고 있고, 2008년 6월

제7차 회의에서 i)법인세 세율을 5%p 인하(25%→20%)하는 대신
ii)특정 산업이나 기업에게 주어지고 있는 일부 세제상의 혜택들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짐

○ 세율인하 폭을 다소 낮춘 대신 ‘연구 및 인력개발 창업벤처기업·전문
인력 훈련기업·대만 내에 설치되는 지역운영본부 및 물류센터’ 등에
대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세상의 혜택을 계속하여 유지기로 함

□ 이와 같은 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동
법안이 실행되는 경우 약 NT\$ 800억의 세수감소 효과 예상

※ 대만의 법인세율 인하 논의배경 및 전망

- 대만의 경우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산업고도화촉진조례(Statute for Industrial Upgrading: 이하 “SIU”)”라는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음
 - SIU에는 법인세·소득세·관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비조세 혜택에 관한 내용 역시 함께 포함되어 있음
 - 1991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2009년 12월 31일 폐지가 예정되어 있음
 - 우리나라 “조특법”과 유사하며, 신흥·주요·전략산업, 연구개발, 민간 참여 공공건설, 낙후지역 투자, 물류센터 설립, 지역운영본부 설립에 관한 조세감면 혜택 등을 규정하고 있음
- SIU 종료기한 도래와 함께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법인세·소득세·상
증세 등의 세율인하 방안이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긴 하나, 정치적인 내
분과 국민적인 합의 부족으로 세법개정 작업에 난관이 계속되고 있음
 - SIU에선 특정 사업 활동·산업 또는 특정 기업 주주에만 조세감면 혜
택 제공
 - 공평하고 근로자를 위한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동 조례를 폐지하
는 대신 이를 통해 조달되는 추가적인 세원을 이용하여 법인세 등의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대만 정부의 견해이나, 기존에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던 기업이나 주주들은 동 조례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
음
- 법인세율 인하에 관해서는 천수이벤(陳水扁) 총통 시절에도 이미 두 차
례에 걸쳐 관련 법안이 내각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국회

말부터 매월 1차례 회의를 갖고 있는 바, 2008년 12월 29일 제7차 회의가 개최됐
음.

의 승인을 얻지 못해 무산됐음

- 2007년 3월 21일, 법인세 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최종적인 입안에는 실패¹³⁰⁾
- 2008년 1월 20일, 법인세 세율을 25%에서 홍콩과 유사하게 17.5%로 인하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최종적인 입안에는 실패¹³¹⁾
- 그러나 2008년 5월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정권교체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내용이 다시 검토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었으나, 2008년 12월 29일 열린 “조세개혁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두 번째 안 채택
 - [방안 1] 법인세 세율 7.5%p 인하(25%→17.5%)와 SUI 전면 폐지
 - [방안 2] 법인세 세율 5%p 인하(25%→20%)와 SUI상의 조세혜택 일부 유지
- 상기 방안이 그대로 채택되든 다른 방안이 제시되든 대만 정부에선 SUI 만료기한(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법인세를 인하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유보이익(retained earning)에 대한 10%의 추가적인 법인세 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의 반대가 있어 최종적인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함

- 대만에선 1998년부터 다음 과세연도 말 이전까지 분배되지 않은 법인의 유보이익에 대해 10%의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음
 -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며, 이후 연도에 선언되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에서 공제 가능
-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장기업에는 과세를 면제하되,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만 10%의 추가적인 법인세 과세를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

130) “Corporate and individual tax rates to be reduced”, TNS Online, 26 March 2007, www.ibfd.org

131) <http://www.taipetimes.com/News/front/archives/2008/02/21/2003402154>

나) 비즈니스 존(Business Zone) 지정(논의중)¹³²⁾

□ 劉兆玄 수상이 2008년 12월 30일 밝힌 바에 따르면 대만 정부가 국내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편의시설 및 세제혜택 등이 주어지는 비즈니스 존(business zone)의 설립을 논의 중에 있음

○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대만기업들을 좀 더 많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국내경기 부양을 위한 동인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음

- 대만에 기초를 두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본국의 높은 원가 부담 때문에 과거에는 해외에 사업소를 두는 경우가 빈번했음

- 그러나 과거 몇 년 동안 중국의 원가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문을 닫는 대만기업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자 대만 정부에선 이 기업 중 일부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장려하고 있음

□ 아직까지 계획단계(planning process)이다 보니 구체적인 지정지역이나 특별지역 내에 설립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편의시설 또는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

○ 구체적인 지역이 선택되진 않았지만, 경제부 측에서는 臺中수출가공지역 내에 비즈니스 존이 설립되길 희망하고 있음

○ 특별지역 내에 설립되는 기업이 받게 될 조세감면혜택, 외국인 고용비율 상한 등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간에 다소 이견이 있음¹³³⁾

- 먼저 법인세 감면과 관련하여 경제부 측에서는 비즈니스 존 내에 설립되는 기업에 대해 15%의 특혜세율 부과 또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로부터 5년 동안 100% 면제 · 이후 2년 동안 50% 감면 중 하나를 채택하여 줄 것을 재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재정부 측에서는

132) <http://www.reuters.com/article/rbssSemiconductors/idUSTP30332220081230>

133) <http://www.taipeitimes.com/News/taiwan/archives/2009/01/02/2003432665>

이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함

- 또 다른 대안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날로부터 3년 동안 100% 면제 ·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긴 하나, 재정부 측에서는 조세감면혜택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 또한 경제부 측에서는 비즈니스 존 내에 설립되는 기업이 40%(현행 20%)까지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게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동부 측에서는 외국인 고용이 늘어나게 될 경우 실업률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다) 결손금 공제기한 연장(확정)¹³⁴⁾

- 2009년 1월 6일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 기한을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음
 - 경제위기 때문에 손실이 난 6만여 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함
 - 이와 같은 세법개정으로 사실상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특히 국제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곤란을 겪고 있는 DRAM 산업 및 평판(flat-panel) 제조업체 등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

라) 기업의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확정)¹³⁵⁾

-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2009년 1월 12일, 대만 국회가 산업고도화촉진조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을 승인했음
 -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및 관련 기술 기

134) <http://www.taipeitimes.com/News/taiwan/archives/2009/01/07/2003433123>

135) Lawmakers Approve Tax Breaks, Jan. 26, 2009, www.taxanalysts.com

업에서 이루어진 신규투자 및 증액투자 등에 대해 5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기로 함

- 신규투자: 제품의 판매가 개시되는 날 또는 서비스가 처음 제공되는 날로부터 감면기간 개시
- 증액투자: 새로운 시설의 영업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감면이 개시되며, 새로운 사업소득에만 적용
-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감면기간 개시를 연장받을 수 있음

○ 대만 경제부에선 이번 세법개정으로 약 NT\$ 5,000억의 신규투자 유발효과, NT\$ 1,500억의 GDP 증가효과, 그리고 37,000개 내지 4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마) 세금납부기한 연장(계획)

□ 실업 상태에 있는 개인 및 재무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최대 3달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부를 연기 받을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2009년 1월 21일 대만 재정부가 밝힘

○ 다만,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법인의 경우 순영업수익(net operating revenue)이 i) 작년 4/4분기에 30% 이상 감소하였거나 ii) 이번 달로부터 1년 전의 4월까지 30% 이상 감소하였다면 최대 세 달 동안 세금의 납부를 연기 받을 수 있음

○ 대만 국내기업 중 1/3 이상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작년 하반기 동안 20만개 이상 기업의 이익이 30% 이상 감소했음

○ 세금의 납부를 연기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며, 올해 내에 세

금을 납부해야 함

- 개인의 경우 저소득자거나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는 최대 3개월 동안 소득세의 납부를 연기 받을 수 있음
 - 올해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들은 2월 중에 공표 예정

3) 소비과세

가) 신규 자동차 구입에 대한 세금 경감(확정)¹³⁶⁾

- 수요부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1월 12일, 대만 국회가 신규 자동차 구입에 관한 상품세 인하 案을 승인했음
 - 소형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품세 할인혜택 제공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신규 차량 · 트럭 · 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NT\$ 30,000 상당의 상품세 할인
 - 배기량 150cc 이하의 신규 오토바이, 스쿠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NT\$ 40,000 상당의 상품세 할인
 - 대만 국회에선 자동차 딜러들이 세금 할인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재정부가 다른 정부 부처들과 협조하여 딜러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했음
 -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규정이며,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자동차를 등록해야 함
 - 대만 재정부에선 이번 세법개정으로 NT\$ 80억 내지 NT\$ 90억 가량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음

136) Lawmakers Approve Tax Breaks, Jan. 26, 2009, www.taxanalysts.com

〈표 II-43〉 대만의 경기대응 조세·재정정책

법안통과/ 시행시기	정책내용	재정규모/기간
2008.11.24. (발표/일부시행)	경기부양대책 - 상품권 지급(NT\$ 829억) - 기반시설 투자(NT\$ 4천억)	재정규모('09~'13): NT\$ 4,829억
2009.02.01. (정부발표)	추가 경기부양대책 - 경기부양자금 규모 확대(NT\$ 4,829 억 → NT\$ 7,150억) - 일자리창출에 중점	재정규모('09~'13): NT\$ 2,321억 - '09: 총 NT \$3,200억

13. 중국

가. 경제동향

	GDP (10억 위안)	GDP 증가율 (%)	재정수지 (GDP 대비, %)	환율(Yuan/US\$)	
				기말	평균
2003	13,639.90			8.28	8.28
2004	16,028.00	17.51		8.28	8.28
2005	18,869.20	17.73	0.2	8.07	8.19
2006	22,117.00	17.21	0.5	7.81	7.97
2007	24,661.90	11.51	2.1	7.30	7.61
2008Q1	6,149.10		2.0	7.02	7.16
2008Q2	6,912.80			6.86	6.96
2008Q3	n.a.			6.82	6.84
2008Q4	n.a.			n.a.	n.a.

	이자율		CPI	실업률 (%)	주가지수 (상해종합 지수)
	예금금리 (deposit)	대출금리 (lending)			
2003	1.98	5.31	1.16	4.30	
2004	2.25	5.58	3.89	4.20	1,266.50
2005	2.25	5.58	1.82	4.20	1,161.05
2006	2.52	6.12	1.46	4.10	2,675.47
2007	4.14	7.47	4.75	n.a.	5,261.56
2008Q1	4.14	7.47	8.03	n.a.	n.a.
2008Q2	4.14	7.47	7.77	n.a.	n.a.
2008Q3	n.a.	n.a.	n.a.	n.a.	n.a.
2008Q4	n.a.	n.a.	n.a.	n.a.	1,832.91

주: 1. n.a. = not applicable

2. GDP-경상수치, 주가지수-종가기준

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8.11., IMF.

OECD Economic Outlook, 2007, 2008

<http://www.krx.co.kr/index.html>, 네이버증권 <http://stock.naver.com/world/>,

야후금융 <http://finance.yahoo.com/intlindices?e=americas>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 증치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경기부양지출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09년에는 GDP 대비 2.6%의 적자(중앙정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II-44〉 중국의 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GDP 대비 비율, %)

	1998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세입	11.7	13.5	15.7	16.0	16.5	17.3	18.3	20.6	21.2	20.5
세출	12.8	16.0	18.3	18.1	17.8	18.5	19.1	20.0	21.6	23.1
재정수지(중앙정부)	-1.1	-2.5	-2.6	-2.2	-1.3	-1.2	-0.8	0.6	-0.4	-2.6
재정수지(지방, 기금포함)	-0.9	-2.0	-1.6	-1.2	-0.4	-0.2	0.5	2.0	0.9	-1.7
재정팽창지수(FI)										
- 중앙정부기준	1.1	0.6	0.3	-0.5	-0.9	-0.1	-0.5	-1.4	1.0	2.2
- 일반정부 기준	0.9	0.4	0.0	-0.4	-0.9	-0.1	-0.7	-1.6	1.1	2.6

원출처: CEIC, World Bank

「World Bank의 09년 중국경제전망」(08.11.26)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인용

- FY 2009 경제운영방향: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¹³⁷⁾

○ 2008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중국 북경에서 개최됐던 중국경제공작회의¹³⁸⁾에서 다음과 같은 올해 경제운영 방향이 확정됐음

-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내수 진작

137) 『내년도 중국경제 운영방향 확정』, 2008-12-12, KOTRA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138) 중국 최고 지도부가 매년 연말에 한 번씩 개최하는 회의로서 당해 연도의 경제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차년도의 경제정책 기조와 노선을 확정하는 회의

- 안정적인 위안화 환율 유지,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 사회보장체계 개선 등을 통해 건실한 경제체계 확립

〈표 II-45〉 2009년도 중국의 경제운영방향

운영방향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소비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감세정책 실시 - 화폐신용대출 증대 - 농촌 노동인구 취업률 제고 및 농촌수입 확대 - 거주민의 자산수입비중 확대 - 하이테크 선진기술 및 관련설비, 주요 에너지 원자재 수입 증대 - 취업률 제고 ○ 고정자산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지출 확대 - 사회보장체계 개선 ○ 무역수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위안화 환율 유지 -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진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SOC 건설을 통한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 소비자의 구매력 확대 및 내수시장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생활수준 향상 - 균형적인 발전에 따른 사회안정 추구 ○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자금조달 및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 - 안정적인 수출증가 -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

자료: 「내년도 중국경제 운영방향 확정」, 2008.12.12., KOTRA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1) 2008년 11월 경기부양대책(확정)¹³⁹⁾

- 국제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오던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2008년 11월 5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대책 발표

139) http://english.gov.cn/2008-11/09/content_1143763.htm

http://english.gov.cn/2008-11/10/content_1144563.htm

「최근 중국경제동향, 정책대응 및 09년 전망」, 2009.02.02,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 첫째, 국내수요 진작을 위해 향후 3년(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10개 분야에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자금 투입
- 둘째, 거시경제 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긴축적인(tight) 통화정책 및 신중한(prudent) 재정정책”에서 “적당하게 적극적인(moderately active) 통화정책 및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전환
 - 2008년 하반기 들어 원자재 가격 급락 및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에 따라 거시경제 정책의 방향을 경기부양으로 전환

〈표 II-46〉 중국의 경기부양정책 10개 주요 분야

항목	세부내용
① 주택정책 (hou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가격의 주택공급 • 저가 임대주택 건설 • 낙후주택 개조를 통한 빈곤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속화 • 농촌의 낙후주택 재건을 위한 시범프로그램 확대 • 유목민족 정착 촉진
② 농촌기반시설확대 (ruralinfra-stru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기반시설 건설 가속화 • 농촌의 도로망 및 전력망 개선 • 메탄가스 이용 확대 및 음용수 안전사업 가속화 • 남수북조(南水北調)¹⁾ 사업 • 저수지의 위험요인 제거 • 관개시설 확충 • 빈민구제노력 확대
③ 운송 (transpor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망 확충사업 가속화(승객전용 철로 및 석탄노선 증설 포함) • 서부지역 간선철로 및 공항 건설 • 도시지역 전력망 개선

〈표 II-46〉의 계속

항목	세부내용
④ 건강 및 교육 (health &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서비스시스템 확립을 통한 건강 및 의료 서비스 강화 • 문화·교육 분야의 발전 및 중서부 지역의 학교 건설 • 전문적인 교육·문화시설 확충
⑤ 환경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 지역의 수질오염 방지, 하수 및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을 늘려 환경보호 강화 • 그린벨트 및 자연림 조성 프로그램 강화 •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량 감소사업 확대
⑥ 산업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조정 강화 • 첨단기술 및 서비스 산업의 발전 지원
⑦ 재해재건 (disasterrebuil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12일 지진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재건 가속화
⑧ 소득 (in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및 도시 지역의 평균소득 증대 • 2009년도 식량 최저구매가격²⁾ 상향조정 및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 • 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보조금 인상 • 근로자에 대한 연금기금 증액 및 공제 확대
⑨ 조세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치세제³⁾ 개편(생산형 부가세 시스템에서 소비형 부가세 시스템으로 전환)을 통해 약 1,200억 위안의 기업 세부담 경감 • 기술개발 장려
⑩ 재정 (fi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경제성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 상업은행 대출 쿼터 폐지 • 최우선 투자 프로젝트, 농촌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은행대출 확대

주: 1) 장강(長江)의 물을 중국 북부에 공급하는 사업

2) 식량의 시장 가격이 최저구매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정부가 최저구매가격으로 식량을 구매하는 제도

3) 우리나라 부가세와 유사한 세목

자료: http://english.gov.cn/2008-11/10/content_1144563.htm

□ 투자계획 및 조달방법¹⁴⁰⁾

- 4조 위안 가운데 철도·도로·공항·도시·농촌 전력망 건설에 가장 많은 1조 8천억 위안이 투자되며, 그 다음으로 재난 복구사업 등에 1조 위안 투자 예정
- 4조 위안 중 1조 1,800억 위안을 중앙정부에서 조달 계획
 - 2조 8,000억 위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조달방안 등이 확정되지 않음
 - 지방정부에서 자체조달 또는 기업으로부터 용자를 받을 확률이 높음

〈표 II-47〉 경기부양자금 투자계획

항목	투자예정금액(元)	비율(%)
철도, 도로, 공항, 도시, 농촌 전력망 건설	1조 8천억	45
재해 복구작업	1조	25
농촌민생, 농촌 인프라 시설	3,700억	9
생태환경 투자	3,500억	9
보장성 주택 ¹⁾ 건설	2,800억	7
자주창신(자주 브랜드 개발), 구조조정	1,600억	4
의료위생, 문화교육 사업	400억	1
합계	4조	100

주: 1) 도시 저소득층 및 중하위층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주택 시장에 개입해서 내놓는 저가형 주택

140) 『中 경기부양책 4조 위안, 어떻게 조달하고 사용하나』, 2008-12-04, KOTRA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중국 경기부양책 4조 위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2009-02-04, KOTRA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2) 기타의 법안 및 조치

가) 공공건설 투자

□ 주요 조치

- 2008년 11월 12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2,059억 위안 규모의 사회 기반시설 투자사업 승인(확정)
 -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핵발전소 공장건설, 민용 공항 건설 등에 총 2,059억 위안 투자 예정
- 운남, 광둥, 요녕, 중경 등 24개 지방정부에서 18조 위안 규모의 투자계획 발표(계획)

□ 2008.11.12. 내수부양 위한 4대 추가조치(확정)¹⁴¹⁾

○ 주요 내용

-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대책 발표(2008.11.05) 이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2008년 11월 12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 의결
 - 2,059억 위안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투자사업 승인
 - 지진피해복구기금 배정방안 확정: 지진피해복구기금 조기 투입
 - 남부지역 폭설 및 5.12.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분야 복구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 2,059억 위안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투자사업 승인
 - 녕샤(寧夏) 11개성, 광저우(廣州), 홍콩의 서기동수(西氣東輸)¹⁴²⁾

141) 『中, 수출증치세 환급률 또 인상 예정』, 2008-11-13, KOTRA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142) 중국이 “제10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전개했던 서부 대개발 사업 중 하나로서 “중국 서부의 에너지를 동부 지역으로 운송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 제1차 서

2선 프로젝트 동부 공정에 총 930억 위안 투자

- 천연가스 공급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연해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북동부 닝샤(寧夏)에서 남부 홍콩까지 11개 성을 관통하는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 광둥(廣東)성 양장(陽江)과 저장(浙江)성 친산(秦山)의 핵발전소 공장 건설 공정에 955억 위안 투자
-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產建設兵團)¹⁴³⁾, 꾸이저우, 장씨성 등의 수리공정 및 내몽고(內蒙古), 안후이(安徽)성 등 민용 공항 건설에 174억 위안 투자

□ 지방정부 경기부양대책(계획)¹⁴⁴⁾

○ 주요 내용

-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대책 발표 (2008.11.05) 이후 운남·광둥·요녕·중경 등 24개 지방정부에서 18조 위안 규모의 투자계획 발표
- 운남성 : 향후 5년간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철도 건설 등에 3조 위안 투자 계획 발표
- 광둥성 : 주장삼각주 철로 등 교통 인프라에 총 2조 3천억 위안 투자 계획 발표
- 요녕성 : 공항, 철도 등 인프라 시설에 총 1조 3천억 위안 투자 계획 발표

기동수 사업에는 총 1,400억 위안이 투입되었으며,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상하이까지 총 연장 4,000km의 천연가스 수송관이 건설됐음. 2002년 7월에 착공하여 2004년 8월에 전 구간이 개통됐음.

143) 중국중앙정부 및 신장 위구르자치구 정부의 관리를 받는 성급 권한을 가진 도시로서 1953년에 처음 생겨났음.

144) 「최근 중국경제동향, 정책대응 및 09년 전망」, 2009.02.02,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나) 수출기업 지원확대¹⁴⁵⁾

□ 주요 조치

- 2008년 12월 24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7대 수출촉진조치」 발표(확정)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2008년 12월 29일 553개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률이 인상되었으며, 2008년 12월 31일에는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품목 축소” 조치 발표
- 위안화 절상 억제

□ 7대 수출촉진조치(확정)¹⁴⁶⁾

- 2008년 12월 24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7대 수출촉진조치」 발표
 - 재정·세제정책 지원 강화: 일부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 중앙대외무역발전기금 규모 확대
 - 가공무역 구조조정 추진: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품목 축소¹⁴⁷⁾ 등
 - 수출금융 서비스 개선: 국책은행 수출융자 규모 확대, 수출환급제와 위탁 대출업무 장려, 중소수출기업 대출난 해소, 위안화 결제 시범실시¹⁴⁸⁾ 등
 - 투자와 무역의 상호연계 촉진, 세관 및 출입국 검역 서비스 개선, 필수적인 핵심기술 및 주요 부품의 수입 확대, 외국과의 무역마찰

145) 「최근 중국경제동향, 정책대응 및 09년 전망」, 2009.02.02,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146) 「中, 내수확대·수출촉진 추가 조치 발표」, 2008.12.25, KOTRA 글로벌윈도우우 (www.globalwindow.org)

147) ① 환경오염·고에너지 소모 제품에 해당하지 않고,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제품을 금지품목에서 제외, ② 노동집약제품,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제품, 환경보호·에너지 절약 제품을 제한품목에서 제외

148) 광둥·창장 삼각주 지역과 홍콩·마카오 지역, 광쑤, 윈난-ASEAN 화물무역에서 위안화 결제 시범실시

감소 등

다) 고용 및 내수경기진작

□ 주요 조치

○ 2008년 12월 24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7대 내수확대조치」 발표(확정)

- 유통을 활성화 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춤
 - 농촌 유통 네트워크 완비, 농촌 가전제품 보조금 제도 확대, 구 제품 회수 후 판매·보상판매 등 촉진, 유통기업발전 촉진, 신규 소비동력 발굴, 유통기업 및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 2008년 12월 21일 5개항의 고용안정 대책 발표(확정)

- 4대 보험료(의료·실업·상해·육아보험)의 단계적인 인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 대책(일정 기간 사회보험 징수기준 완화, 無해고에 대한 보조금 지급, 직원연수 및 정규직 확보 장려, 경제 보조금 지급)

○ 2009년 1월 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대졸자 취업촉진 7대 대책」 발표(확정)

- 도시 또는 농촌의 기층지역 취업 장려, 중소기업 및 민간기업 취업 장려, 주요기업들의 직원 채용 장려, 창업지원, 취업 서비스 강화, 빈곤학생 보조제도 창설 등

○ 빈곤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확정)

- 구정 직전 도시와 농촌의 빈민층 7,400만명을 대상으로 90억 위안 규모의 보조금 지급

□ 7대 내수확대조치(확정)¹⁴⁹⁾

149) 「中, 내수확대·수출촉진 추가 조치 발표」, 2008-12-25, KOTRA 글로벌원도우

- 유통을 활성화하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08년 12월 24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7대 내수확대조치」 발표
 - 농촌 유통 네트워크 완비: 2009년부터 2년간에 걸쳐 농산품 배송 센터 증설, 농산물 집산지와 원산지의 유통망 확충
 - 농촌 가전제품 보조금 제도¹⁵⁰⁾ 확대: 농민이 가전제품 구매 시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증액하고, 각 지역 농촌의 수요에 맞춰 보조금 지급품목 선정
 - 도시지역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도시소비 확대
 - 구제품 회수 후 판매·보상판매 등 촉진, 중고품 유통 활성화
 - 유통기업 간에 M&A 등을 통해 대형유통기업 육성, 유통기업발전 촉진으로 소비원가 절감
 - 신규소비동력 발굴, 연휴기간이나 박람회 등을 통한 판매촉진 활동 장려
 - 유통기업 및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 중국의 경우 내수확대 분야에서 특히 “농촌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도시에 비해 성장이 느린 농촌을 제대로 발전시킬 경우 내수부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대량의 농민공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 농촌경제 발전을 통해 농촌의 노동력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www.globalwindow.org)

150) 신농촌 건설과 농민소비 수요 증가에 따라 정부가 업계와 공동으로 농촌소비 특성에 맞는 가전제품들을 개발·생산하여 농촌의 소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통과 A/S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함.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산둥·허난·쓰촨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정부에서 정한 종류의 컬러 TV, 냉장고, 휴대폰 구입 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2008.12.21. 5개항의 고용안정 대책(확정)¹⁵¹⁾

-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12월 21일 5개항의 고용안정 조치를 담은 통지 발표
 -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보험 징수기 준 완화
 - 의료보험, 실업보험, 상해보험, 육아보험 등 4대 보험료의 단계적인 인하
 -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기업 또는 해고직원 수가 적은 기업에게 보조금 지급 허용(실업 보험기금 이용)
 -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직원 연수 및 정규직 확보 장려

□ 대졸자 취업촉진 7대 대책(확정)¹⁵²⁾

- 경제난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채용 계획이 유보 또는 취소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2009년 1월 7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졸자 취업 촉진 7대 대책」 발표
 - 도시 또는 농촌 기층지역 취직 장려, 무료 취업정보 및 각종 취업 서비스 제공
 - 졸업생이 중소기업이나 비공유제기업(민간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
 - 굴지기업(특히, 창신형의 국유대중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장려
 - 졸업생이 스스로 창업하는 것을 장려하며, 취업능력 제고
 - 각 학교가 창업교육 및 실습활동 적극 전개

151) 「일일중국경제정보」(2008.12.22),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152) 「일일중국경제정보」(2009.1.8),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 학생들이 졸업 전에 학습실습 활동에 참가하게 해야 하며, 2009년부터 3년 동안 100만 명을 대상으로 인턴과정 전개
- 빈곤학생 보조제도 창설

□ 빈곤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확정)

- 서민계층에게 용기를 주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구정 직전 도시와 농촌의 빈민층 7,400만명을 대상으로 90억 위안 규모의 보조금 지급
 - 주로 생활에 곤란을 겪는 빈곤층과 나이가 많은 공산당원에게 지급되며, 인당 최고 180 위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
 - 농촌에선 인당 100 위안, 도시에선 인당 150 위안, 건국 전 입당 공산당원에는 인당 180 위안의 현금 지급

라) 기간산업 지원¹⁵³⁾

□ 주요 조치

- 수요부진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10개 산업에 대해 조만간 진흥정책 발표 예정(일부 확정, 일부 논의 중)
 - 10개 산업이란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경공업, 방직, 비철 금속, 장비제조, 전자정보, 부동산을 말함
 - 200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동산을 제외하고 9개 산업의 부가가치 합계가 중국 전체 공업 부가가치 중 80%를 차지하는 바, 이는 중국 전체 GDP의 1/3에 해당
 - 이들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이 중국 전체 세수의 37%에 달함

153) 「중, 자동차 산업 진흥 계획안 발표」, 2009.01.15., KOTRA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중국, '9대산업 진흥계획' 발표 초읽기」, 2008.12.23., KOTRA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 특히, 경공업과 방직업의 경우 중국의 실업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2008년 10월 27일과 12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발표
- 2009년 1월 14일 국무원 회의에서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진흥계획 확정
- 2009년 2월 4일 국무원 회의에서 장비제조 및 방직에 대한 진흥계획 확정
- 그 밖의 산업에 대해서는 조만간 진흥계획 발표 예정

□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확정)¹⁵⁴⁾

- 2008년 10월 27일과 12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발표
- 주택대출금리 인하(대출기준금리×85%→대출기준금리×70%), 주택을 구입하는 때 본인이 부담하는 선수금 비율 인하(30%→20%)
- 1가구 2주택(평균주거면적 이하)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우대대출 확대
- 중소건설업체 등에 대한 은행대출 확대, 건설업종 인수합병 시에 금융지원 확대

□ 자동차 산업 진흥계획(확정)¹⁵⁵⁾

- 2009년 1월 14일 국무원 회의에서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한 진흥계획 확정
- 배기량 1.6리터 이하 소형차의 취득세 인하(10%→5%)

154) 「최근 중국경제동향, 정책대응 및 09년 전망」, 2009.02.02.,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155) “measures to support automobile and steel industries passed”, 2009-01-16, TNS Online, www.ibfd.org

- 농민이 기존의 저속트럭이나 삼륜차를 배기량 1.3리터 이하의 소형차와 교환하여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 2009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규정
- 기존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 인상
- 자동차 구입 관련 불합리한 규제 철폐
- 대형 자동차 완성업체 및 영세부품업체 간에 구조조정 지원
- 기술혁신, 신규 에너지, 자동차 부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0억 위안의 자금 투자
- 전기 자동차 및 핵심부품 산업 발전, 자주적인 브랜드 및 현대적인 자동차 서비스 산업의 발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출, 자동차 할부금융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지원 제공

□ 철강 산업 진흥계획(확정)¹⁵⁶⁾

- 2009년 1월 14일 국무원 회의에서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진흥계획 확정
 - 수출관세 조정, 낙후생산시설 퇴출, 철강업종 구조조정, 기술혁신 및 품질향상 목적의 자금 지원

□ 장비제조 산업 진흥계획(확정)¹⁵⁷⁾

- 2009년 2월 4일 국무원 회의에서 장비제조 산업 지원을 위한 진흥계획 확정
 - 산업진흥 및 기술수준 제고를 위한 전문자금 설치
 - 첫 번째 국산설비 사용 리스크 보상 제도를 제정 · 시행함으로써 주요 제품의 국산화 지원

156) 「최근 중국경제동향, 정책대응 및 09년 전망」, 2009.02.02.,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157) 「中, 방직업 · 장비제조업 진흥계획안 통과」, 2009.02.06., KOTRA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 수출자금 대출규모 확대를 통해 설비제품 수출을 지원하고, 수입이 필요한 주요 부품 및 원자재의 관세 및 수입 증치세 등을 면제
- 산업구조조정 지원

□ 방직 산업 진흥계획(확정)¹⁵⁸⁾

- 2009년 2월 4일 국무원 회의에서 방직 산업 지원을 위한 진흥계획 확정
- 자주창신, 기술수준 제고, 낙후기업 도태, 산업구조조정 등을 중점으로 하는 5대 진흥계획 발표
- 방직품 및 의류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 잠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지원, 지방과 기업이 면과 생사의 구매 확대 등

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정책

1) 개인과세

□ 소득세 면세점 인상 계획(논의중)¹⁵⁹⁾

- 국내소비 진작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개인의 소득세 면세점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현재에는 매월 수취하는 임금 및 급여수입에서 기본공제 명목으

158) 「中, 방직업 · 장비제조업 진흥계획안 통과」, 2009.02.06., KOTRA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159) 『中, 개인소득세 줄어들까?』, 2008-12-10, KOTRA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http://www.china.org.cn/business/highlights/2008-12/01/content_16880938.htm
『Government Plans to Raise Personal Income Tax Threshold』, Tax Notes Int'l,
Dec. 8, 2008, p. 765

로 2,000 위안¹⁶⁰⁾이 공제되고 있는 바, 소비축진 및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현행 2,000 위안의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음¹⁶¹⁾

- 소득세 면세점 인상에 관한 안이 이미 국무원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후에 있을 국무원 회의에서 이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
- 그러나 각종 언론보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2,500 위안 수준으로 정하여질 확률이 가장 높고, 3,000 위안을 넘어서기 힘들 것으로 보임
 - 최근 이루어진 경기부양지출 결정으로 인해 향후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여 소폭 인상 예정

2) 법인과세

□ 행정사업 수수료 징수 취소 및 정지(확정)¹⁶²⁾

- 중국 재정부가 2009년 1월 1일부터 100개 항의 행정사업 수수료를 징수 취소 또는 정지키로 함
 - 행정관리 수수료, 증명 수수료, 검정 수수료, 교육 수수료, 고시 수수료 등이 대상
 - 교육, 노동, 취업, 인재유동, 영업면허, 프로젝트 건설, 대외수출,

160) 2006년까지 800元을 줄곧 유지하여 오다 2006년부터 1,600元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2008년 3월에 다시 2,000元으로 상향조정 됨.

161) 중국의 경우 개인의 소득을 11종류의 소득으로 구분하고 종류별로 과세하고 있음. 이 중 근로소득 경우에는 매월 수취하는 임금 및 급여수입에서 2,000元의 기본공제 및 기본양로 보험료, 기본의료 보험료, 공상 보험료, 실업 보험료, 주택공적금 등을 뺀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있음.

162) 『中 경기부양 ‘먼저’-규제·세금·임금인상 ‘일단 정지’』, 2008-11-27, KOTRA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약품생산, 가축양식, 농업생산 등의 분야에 걸쳐 면제되는 수수료 규모가 약 200억 위안에 이릅니다

3) 소비과세

□ 기계장치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확정)¹⁶³⁾

- 기업의 투자욕 고취를 위해 2009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생산형 부가세 시스템”을 “소비형 부가세 시스템”으로 전환기로 함
 - 즉, 동북삼성(요녕, 길림, 흑룡강) 및 중부 6성(하남, 호남, 호북, 산서, 안휘, 강서), 사천원찬 지진피해지역에서 시범운영 됐던 “소비형 부가세 시스템”을 2009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실시기로 함
- 기존의 “생산형 부가세 시스템” 하에서는 기계장치¹⁶⁴⁾ 구입에 대해 증치세가 공제되지 않았으나, “소비형 부가세 시스템” 하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비투자 시에 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음
 - 또한 설비교체 및 기술개조 의욕을 자극, 산업구조조정 및 제품개발, 기업의 생산능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증치세제 개편으로 약 1,200억 위안 가량의 세수감소 효과

163) 『중국 증치세 개편, 무엇이 바뀌나?』, 2008-11-20, KOTRA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금융위기] 中, 증치세 개편 통한 30조 원 감세 추진』, 2008-10-24, KOTRA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164)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기계장치

- ① 기계·기계장치·운송수단 및 기타의 장비, 제조 또는 사업 활동과 관계되는 내용연수 1년 이상의 공구 및 장치
- ② 제조 또는 사업 활동과 관계되는 주요 장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단위당 가격이 2,000元 이상이며 내용연수 2년 이상의 품목

과가 예상되는 바, 이는 지금까지 있는 조세감면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음¹⁶⁵⁾

□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증치세율 인하(확정)¹⁶⁶⁾

- 고용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소규모 납세자¹⁶⁷⁾에 대한 증치세 세율을 각각 1%p(상업기업)와 3%p(공업기업) 인하했음
- 기존에는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4%(상업기업) 또는 6%(공업기업)의 이원적인 증치세율 체계를 적용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상업기업 여부와는 관계없이 3%의 단일세율 적용

□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확정)¹⁶⁸⁾

- 수출기업들의 원가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한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2008년 하반기에만 무려 네 차례에 걸쳐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했음¹⁶⁹⁾

165) 중국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증치세 세수가 약 1.5조원을 초과하는 바, 이는 전체 세수의 약 31%에 해당하는 수치

166) 『중국 증치세 개편, 무엇이 바뀌나?』, 2008-11-20, KOTRA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금융위기] 中, 증치세 개편 통한 30조 원 감세 추진』, 2008-10-24, KOTRA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167) 소규모 납세자의 기준

구분	연매출
재화의 제조 또는 과세용역 제공에 종사하는 납세자, 주로 재화의 제조 또는 과세용역 제공에 종사하나 재화의 도소매에도 종사하는 납세자	증치세 과세대상 연매출 100만원 이하
재화의 도소매에 종사하는 납세자	증치세 과세대상 연매출 180만원 이하

168) 『中, 3770개 품목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 목록 발표』, 2008-11-18, KOTRA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http://china.org.cn/business/news/2008-12/29/content_17026841.htm
VAT refund rates on exports raised, 4 December 2008, TNS ONLINE, www.ibfd.org
Amendments to VAT refund rates on exports announced, 7 August 2008, TNS ONLINE, www.ibfd.org

- 2008년 8월에는 일부 방직품 및 의류 제품의 증치세 환급률이 인상됐음(2008년 8월 1일부터 적용)
- 2008년 10월 21일에는 중국 총수출 품목의 약 25.8%에 해당하는 3,486개 품목의 증치세 환급률이 인상됐음(2008년 11월 1일부터 적용)
 - 노동집약제품(방직품, 의류, 완구 등) 및 부가가치 높은 제품(에이즈 치료약, 유전자 재조합 휴먼 인슐린 등) 등을 대상으로 함
- 2008년 11월 12일에는 중국 총수출 품목의 약 27.9%에 해당하는 3,770개 품목의 증치세 환급률이 인상됐음(2008년 12월 1일부터 적용)
 - 주로 노동집약제품, 기계전자제품, 기타 해외수요 감소에 영향을 크게 받는 제품을 대상으로 함
- 2008년 12월 29일에는 553개 품목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이 인상됐음(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
 - 주로 첨단기술제품, 부가가치 높은 기계·전자제품 등을 대상으로 함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영업세 개편(확정)¹⁷⁰⁾

- 수출제품 보증을 위해 사용되는 중국보험회사(Chinese insurance company) 상품에 대해 2009년 1월 1일부터 영업세를 면제키로 함

169) 중국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후 증치세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즉, 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에는 잔액을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하며, 초과매입세액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음. 다만, 수출기업 경우에는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바, 제품별로 환급률이 다름.

170) Regulations on VAT, business tax and consumption tax revised, 9 December 2008, TNS ONLINE, www.ibfd.org

〈표 II-48〉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조치

시행일자	대상품목	증치세 환급률(%)	
		조정 이전	조정 이후
2008-08-01	• 일부 방직품 및 의류	11	13
2008-11-01	• 방직품 및 의류	13	14
	• 완구	11	14
	• 가구	9~11	11~13
2008-12-01	• 고무 및 임목제품	5	9
	• 가정용품, 유리 식기	5	11
	• 일부 수산 제품	5	13
	• 가방, 신발, 모자, 우산, 가구, 침구, 조명기구, 시계	11	13
	• 일부 화공제품, 석재, 유색금속 가공원료 등	5, 9	11, 13
	• 기계장치 및 가전제품	9, 11, 13	11, 13, 14
2009-01-01	• 산업로봇	13	17
	• 항공기 산업에서 이용되는 GPS	14	17
	• 오토바이	11	14
	• 재봉기	13	14

주: 주요 품목만을 정리

4) 재산과세

□ 주식거래 관련 세금 인하(확정)¹⁷¹⁾

-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주식을 매입하는 때 부과되던 0.1%의 인지세를 2008년 9월 18일부터 면제키로 함
 - 추가폭락으로 2008년 4월 23일에 인지세 세율을 0.2%p 인하한데 (0.3%→0.1%)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이루어진 인지세 조정정책
 - 개정 이전에는 주식을 거래하는 때 매입자와 매도자, 양측에게 모두 0.1%의 인지세가 부과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주식을 매도하

171) http://english.gov.cn/2008-09/18/content_1098996.htm

는 경우에만 0.1%의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음

- 한시적인 조치이나 종료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주택 거래 관련 세금 감면(확정)¹⁷²⁾

○ 개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때 부담하는 세금을 줄여주고, 개인의 최초 보통주택¹⁷³⁾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 11월 1일부터 주택 거래 관련 세금을 다음과 같이 인하하기로 함

- 개인이 처음 구입하는 90m² 이하의 주택에 대해 계약세(deed tax)¹⁷⁴⁾ 인하(기존 3% → 현행 1%)

- 개인이 구입 또는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인지세(stamp tax)¹⁷⁵⁾ 면제

- 개인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토지 증치세(land appreciation tax)¹⁷⁶⁾ 면제

○ 한시적인 조치이나, 종료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음

□ 주택의 양도에 관한 영업세 정책 변경(확정)¹⁷⁷⁾

○ 보통주택 소비를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개

172) 『부동산거래단계의 조세정책 조정에 대한 통지』, 2008-11-25,

www.koreaemb.org.cn

재정부·국가세무총국, 부동산 거래 단계의 조세정책 조정에 대한 통지, 財稅 [2008] 137호

173) 용도, 용적률, 거래가액 등을 기준으로 정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174)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 및 소유권)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 취득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음

175)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이전의 당사자가 증서에 표기되어 있는 금액의 0.05% 상당액을 인지세로서 납부해야 함

176) 국유토지 사용권, 지상건물 및 그 부착물을 이전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4단계 초과누진세율(30~60%) 구조를 갖고 있음

177) http://www.koreaemb.org.cn/contents/economy/serv3-471_list_info.aspx?id=2834&type=data&info_type=Tax&bm=3&sm=2&fm=8

인주택 양도에 관한 영업세 정책을 아래와 같이 변경했음(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

- 영업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요건 완화(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 영업세 과세기준가액 변경
 - 기존에는 거래가액 기준으로 영업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세차익 기준으로 영업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부담 감소 효과 발생

□ 자동차 취득세 인하(확정)¹⁷⁸⁾

-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배기량 1.6리터 이하 소형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인하(10%→5%)
 - 2009년 1월 20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규정

178) “measures to support automobile and steel industries passed”, 2009-01-16, TNS Online, www.ibfd.org

〈표 II-49〉 중국의 경기대응 조세·재정정책

법안통과/ 시행시기	정책내용	재정규모/기간
2008.11. (확정)	경기부양대책 - 3년 동안 10개 분야에 4조 위안 규모의 경 기부양자금 투입 - 경제성장으로 거시경제 정책방향 전환	- 재정규모 (‘08~’10): 4조위안
2008.11. (정부발표)	지방정부 경기부양대책 - 운남·광둥·요녕·중경 등 24개 지방정부 에서 18조 위안 규모의 투자계획 발표	- 재정규모: 18조위안
2008.12 이후 (추가 확정정책)	5개항의 고용안정대책 7대 수출촉진조치 및 7대 내수확대조치 대졸자 취업촉진 7대 대책 철강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진흥 빈곤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2009.01 (확정)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 - 배기량 1.6리터 이하 소형차 취득세 인하	- 2009.01.20 ~ 12.31 적용

Ⅲ. 국가별 정책의 시사점

1. 국제적 정책흐름

-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조세·재정정책을 발표
 -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먼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
 - 유동성지원 규모: 미국 \$ 7,000억('08. 10), 영국 £ 2,500억('08. 9), 독일 5,000억 유로('08. 10), 일본 ¥ 33조('08. 12)
 - 금융시장 대책과 함께 실물부문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세·재정정책을 발표
 - 많은 나라들이 각국의 특성을 감안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시행('08 11월 이후)

-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패키지의 경우, 고용 및 소비 진작·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규모는 각국의 충격정도, 재정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의 진원지인 미국과 오랜 경기침체를 겪은 일본의 정책규모가 큼
 - 정책수단의 선정에 있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보조금, 각종 수당 등을 적극 활용하고 그 대상도 특정계층으로 한정하여 정책의 효과성 제고
 - 미국의 중산층지원 Tax Credit, 영국의 소득세 낮은세율 인하, 일

- 본의 생활지원정책액급부금, 프랑스의 사회보장급여 추가 등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미국, 프랑스 등과 함께 개발도상국인 대만(NT\$ 4,000억), 중국(18조 위안)에서 시행

〈표 Ⅲ-1〉 각국의 경기활성화¹⁾ 정책의 규모('08. 10월이후)

(단위: 10억 자국통화)

	총 규모	기간	2009년 지출	GDP비중(%)
미국	910	'09~'19	293.5	2.0
영국	13.3	'08/09~'11/12	16.3 ²⁾	1.1
일본	36,900	'09~'11	12,300 ²⁾	2.4
독일	81	'09~'10	40.5 ²⁾	1.6
캐나다	40	'09~'10	22.7	1.5
프랑스	201	'09~'11	67 ²⁾	3.3

주: 1) 금융부문에 대한 유동성지원은 제외.

2) 전체기간에 대한 평균 지출규모임.

- 경기부양조치는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
 - 추가 보조금 지급 및 세율인하 조치는 1~2년 기간으로 적용
 - 영국은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2010년 이후 세율인상 등 명시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부양조치와 함께 명시
 - 독일도 향후 정상적 경기상황에서 연방, 주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순채무를 최고 GDP의 0.5%로 제한할 예정('09. 1월 발표)
 - 과거에는 유로화 안정기준인 연간 GDP 3%내의 적자 허용

2. 주요국의 위기대응 정책 유형

- 위기대응 정책의 유형은 크게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과 실물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나누어짐

-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은 금융시장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 등의 정책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2008년 후반기에 시행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에서 유동성 공급 정책 시행
-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은 각 국가별 특성에 따라 기업 및 고용, 가계 및 소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
- 실물경기 활성화 정책의 경우 가계지원, 기업지원, 고용창출 정책, 친환경산업 육성 등으로 구분
 - 가계지원정책은 조세 및 보조금 정책을 통해 가계부문의 세후소득을 증대시켜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 기업지원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과 세부담 인하로 기업활동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유도
 - 고용창출 정책은 실업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재취업 지원, 해고근로자 교육 등으로 구성
 - 친환경산업 육성은 기업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 성장포텐셜이 높은 친환경산업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구성
- 각 부문 정책은 한시적 정책수단이 주된 역할을 하며 항구적 효과가 있는 정책수단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
 - 동시에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은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

가. 가계지원 정책

- 가계지원 정책은 소비활성화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는 정책으로 조세정책 및 보조금 정책으로 구성
 - 즉각적인 소비활성화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수당증

액, 기타 세제개편 등으로 구성

-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득세 원천징수 축소, 부가가치세율 인하,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인상, 자녀양육비 인상, 아동수당 인상, 상품권 지급 등이 제시됨

□ 한시적 지원정책이 중심적 역할을 하며 항구적인 정책은 보완적 역할을 수행

	한시적 정책	항구적 정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환급: \$ 600~\$ 1,200('08) - 소득세 원천징수 축소: \$ 500 ~ \$ 1,000('09 하원통과) - 실업수당 일시적 인상(\$ 25/주) - 긴급실업보상금 기간확대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율 인하: 17.5%→15%('08~'09) - 연금수령자 보조금지급('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비 보조금인상 조기적용('09 4월→1월) - 소득세 기본공제액 추가인상('09) - 저소득층 세급환급금 영구화('09)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너스지급: 100 유로/아동('09) - 신규등록 자동차세 면제: 1~2년 - 고용보험료 인하: 3.3→2.8%('0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소득세율 인하: 15%→14%('09) - 아동수당 및 자녀세액공제 인상('09)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금 증액('09) - 의료보험료 인하('09)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료 인하: 1.5→1.1%('09) - 생활지원정액급부금: 2조엔('09) - 상장주식 배당 및 양도소득 10% 경감세율 적용('09~11) - 자동차 중량세 감면('09~'12) - 주택차입금 특별공제 연장('08~'13) - 해고 파견근로자 주택제공시 고용주 지원('08~'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고용보험 혜택확대(1년→6월 이상 고용)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권지급: NT\$ 829억('09.1~2) - 국외소득 최저한세 과세연기('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하 검토

- 소비진작효과가 큰 저소득층(유자녀 가구 포함)에 집중된 정책을 통해 유효성 제고
 - 미국: 오바마 정부 '09 경기활성화 법안의 소득세 감세는 중산층(\$ 200,000 이하)에 적용
 - 영국: 연금수령자, 저소득층 지원과 자녀양육비 보조금 조기 인상
 - 독일: 유자녀 가구 지원 강화, 낮은 소득세율 인하
 - 프랑스: 사회보장급여 수급계층에 추가 지원 등

나. 고용유지 및 창출 정책

- 고용수준 유지/창출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정책수단들이 다양하게 제시
 - 고용유지 및 창출은 사회의 안정성 유지에도 필수적
- 그러나 고용창출 효과성에 대한 우려로 전체 경제활성화 대책 중 공공투자 사업의 역할은 그리 높지 않음
 - 다만 미국, 중국, 대만, 프랑스의 공공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정도
 - 미국(ARRA2009)¹⁷⁹⁾: '09~19기간 총 \$ 8,195억 중 재정지출 \$ 6,372억(78%)
 - 대만('09. 2): '09~'12기간 총 NT\$ 7,150억 중 기반시설건설 NT\$ 4,000억
 - 프랑스('08. 12): 총 260억 유로 중 공공투자/주택건설 123억 유로
 - 고용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프랑스에서만 시행될 예정이며, 미국은 그 효과성에 대한 비판으로 '09년 민주당법안(하원통과)에서 제외

¹⁷⁹⁾ 2008년 2월 경기부양법안(ESA2008)은 개인소득세 등의 감세에 중점. 2008년 10월 법안(ESRB)은 금융시장 유동성 제공이 목적.

	한시적 정책
미국	- 의료기록 전산망 구축, 과학연구시설 지원 등: \$ 360억 ('09 하원통과)
영국	- 자본지출조기집행: '10~'11→'08~'10(GBP 30억; Pre-Budget Report 2008) - 실업자재취업지원(GBP 13억), 국가고용파트너십 제도 지원 등을 강화
독일	- 교통시설 보수·투자: 10억 유로('08 11월 발표) - 지방정부 사회기반시설 투자지원금 증액: 30억 유로 - 연방·주정부 합동프로그램: 2억 유로 - 건물 효율화, 자동차 기술개발 투자지원: 135억 유로 - 학교, 도로, 병원시설 개선: 33억 유로 추가(총 173억 유로) - 고용보험료 인하: 3.3→2.8%('09~'10)
일본	- 고용유지 대책: 500억엔('08~'09) ('08 추경, 세제개편안) · 파견 근로자 고용시 고용주 지원 등 - 지방공공단체의 일시적 고용지원: 4,000억엔('08~'09) - 고용보험료 인하: 1.5→1.1%('09)
대만	- 교량, 지하철, 하수도 등 기반시설건설: NTD 4,000억('08 11월 발표)
프랑스	- 공공부문(인프라, 에너지서비스 현대화, 주택 등) 투자: 123억 유로('08 12월 발표) - 10인이하 고용기업의 2009년 신규고용시 최저임금의 1.6배까지 세제 지원
중국	- SOC 건설: 18조 위안 ('08 11월 발표)

다. 기업활동 지원 등

□ 기업활동의 유지를 위해 유동성 공급, 세부담 감면 혹은 이연 등의 조치도 시행

○ 새로운 시설투자에 대한 즉시상각 혹은 가속상각의 허용, 중소기업에의 자금지원 혹은 세율 인하, 결손금 공제기간 확대 등

	기업활동 지원정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투자자산에 대한 즉시상각/가속상각 허용('08 시행) - (소기업) 가속상각법 적용기한 2년 연장('09 하원통과) - (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한 연장: 2년 → 5년('09 하원통과)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수출기업 자금지원: GBP 10억(Pre-Budget Report 2008) - 결손금 소급공제기한 연장: 1년 → 3년 - 소규모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계획 연기: 21 → 22% - 해외배당 면세제도의 도입(검토)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특별대출: 150억 유로('08 11월 발표) - 중소기업 R&D 자금지원(연 4.5억 유로): '09~'10 - 미래형자동차 엔진개발 지원(5억 유로): '09~'10 - 자동차산업 중소기업 지원자금 조달(70억 유로): '09~'10 - 중소기업 특별상각제도 2년 연장: '09~'10 - 동산에 대한 25% 정률 상각 허용: '09~'10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수급구조개혁 설비투자 즉시상각: '09~'11('08 12월 발표) - 자원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특별상각: '09~'12 - 중소기업 경감세율 인하(22%→18%): '09~'10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용 자동차 구매 보조금인상: 1,000 유로('08 12월 발표) - 자동차 금융회사에 크레딧 라인제공: 10억 유로 - 하도급업체 지원을 위한 구조조정펀드 설립: 3억 유로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금 이월공제 기한 연장: 5년→10년('09 1월 의회 통과)

3. 시사점

□ 경기침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정책시차를 줄이기 위해 가계 및 고용에 대한 직접적 지원정책에 의존

○ 가계의 즉각적인 소비활성화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수당증액, 기타 세제개편 등의 조치 시행

- 동시에 저소득층 혹은 유자녀 가구로 지원대상을 특정화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 및 높은 소비효과 기대

-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 등 공공부문의 역할은 효과성에 대한 우려로 경기활성화방안에서의 비중이 높지 않음
 - 그 외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부문에의 지원은 감가상각제도, 결손금 이월공제제도 등 세부담 이연/감면 조치를 통해 이루어짐
- 경기부양조치는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
- 추가 보조금 지급 및 세율인하 조치는 1~2년 기간으로 적용
 - 독일은 정상적 경기상황에서 연방, 주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순채무를 최고 GDP의 0.5%로 제한할 예정('09. 1월 발표)
 - 과거에는 유로화 안정기준인 연간 GDP 3%내의 적자 허용
 - 영국은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2010년 이후 세율인상 등 명시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부양조치와 함께 명시
- 가계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소득세 원천징수 축소, 부가가치세율 인하,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인상, 자녀양육비 인상, 아동수당 인상, 상품권 지급 등이 제시
-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투자정책은 미국(대선공약), 중국, 대만,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그 규모가 크지 않음
- 투자대상은 개발도상국(중국, 대만)은 SOC, 선진국들은 에너지 등 각종 사회시스템 개선이 중심
 - 에너지효율 개선, 상하수도 개선,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등
 - 고용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프랑스만 시행할 예정이며, 미국은 그 효과성에 대한 비판으로 '09년 민주당 법안에서 제외
 - 일본은 지방공공단체의 일시적 고용을 위한 자금지원
-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부문의 지원은 중소기업중심, 녹색산업 및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한 부문에 집중

- 우리나라의 경기활성화 대책도 즉시성/효과성 측면에 가계/고용 중심의 외국 사례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 가계지원의 경우, 저소득층/실업자/유자녀가구를 중심으로 보조금 혹은 수당인상 방안이 바람직
 - 공공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은 건물·자동차 등의 에너지 수급구조 효율 향상, 상하수도 개선 등 사회시스템 개선이 바람직
 - 녹색산업 육성, 미래 재정지출의 조기집행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안
 - 단기적인 기업활동/고용 유지를 위해 조세부담의 이연/감면 제도를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
 - 특히 투자시기 조정을 위한 특별 감가상각제도 도입이 중요
 - 정책대안은 1~2년 시계로 시행

〈부록〉 외국 경제위기 대응정책의 부분별 내역

□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6가지 Sector구분

Sector 국가	금융시장	가계지원	기업지원	고용창출	친환경 (녹색성장)	기타
미국	TRAP 금융구제안	세액환급 중산층보조	즉시상각 특례일몰확대	SOC투자 녹색산업	재생에너지	주택세제지원 의료·교육
캐나다	보증보험 구입지원	소득세율↓ 비과세근로소득확 대 저축비과세 확대	가속상각 법인세율↓ 소규모사업체 경감세율기준안화	직업훈련프로 그램 고용보험확대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펀드	주택세제지원 공공시설 투자
영국	은행 유동성지원	부가세율↓ 기본공제↑	중소 자금지원 결손소급확대	SOC 조기집행	저탄소성장	고소득자 중세
독일	은행 유동성지원	아동수당지원 소득세율↓	중소 자금지원 정률법상각	SOC투자 고용안정망	친환경차 지원	주택세제지원 학교·IT·의료
프랑스	자동차금융신용한 도↑	사회보장급여지급	자동차·건설지원 VAT조기환급	채용세제지원 재취업교육	-	문화유적, 국방 등 투자
스웨덴	금융감독강화	감세(지방소득세, 연금)	법인세율↓ 자동차지원	SOC투자 고용재정↑	친환경자동차 환급금	교육·연구·의 료
네덜란 드	대출·예금보호한 도 상황	맞벌이부부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과세면제 확대	고용보험료 폐지 장려금 지급	친환경자동차 지원	부가가치세 인상안 폐지
핀란드	예금보호 한도 상황	소득세율↓	개발및기술혁신기 업 보조금지급	실업보조금 지급	-	상속세 인하
호주	금리 1%p↓	조세혜택지원	감가상각충당금 확대	SOC투자	친환경신차 지원	-
일본	대출·보증·자본 참여	생활지원 정액급부금	즉시상각 중소 경감세율	고용보험료↓ 장려금 신설	친환경자동차 감면	경제긴급대응 예비비 신설
싱가포 르	-예금 전액 보증 -기업 대출 정부 보증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개인소득세 환급	가속상각 법인세율↓ 손실이연 한도↑	저소득층 임금보전 직업훈련프로 그램	에너지효율화 청정에너지	기부금 공제 비율↑
대만	-	상품권지급 소득공제↑ 상중세↓	투자 감면↑ 납부기한 연장 결손공제확대	SOC투자	-	-
중국	증권 인지세 면제	빈민층 현금보조	감세(증치세) 산업진흥정책	SOC투자	생태환경투자	부동산 세제지원

□ Sector 1 : 금융시장

국가	주요 내용
미국	부시 정부: 부실자산프로그램(TRAP)시행, 모기지업체 자금지원, 예금 보호한도 증액
	오바마 정부: TRAP 자금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투입 필요성 강조 금융구제안 발표
캐나다	보증보험구입 등에 대한 지원, 유동성공급, 금융관련 규정의 정비,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강화
영국	은행에 유동성 지원(Special Liquidity Scheme), 지급불능 문제 지원 (Bank Recapitalization Fund), 자금조달 지원(Credit Guarantee Scheme)
독일	금융시장에 5,000억 유로 지원, 1,000억 유로의 금융시장안정화펀드 설정
프랑스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3,600억 유로 지원, 자동차 금융회사에 대한 신용 한도 증가
스웨덴	금융감독기관에 추가 자금지원(SEK 23백만), 은행위기 관리 특별행정 도입, 예금담보제도 개선, 금융감독기관 업무 개선
네덜란드	단기 국채 발행(113억 4,000만 유로), 은행·보험회사·연금펀드 대출 보장(최대 2,000억 유로), 예금보호한도 증액(3.8만 유로→10만 유로), 흑자기업 도산방지 긴급구조자금 지원(200억 유로)
핀란드	예금보호한도 증액
호주	금리 4.25%에서 3.25%로 1%p 인하
일본	국가의 자본참가범위 확대, 은행 등에 대한 정부보증, 중견·대기업 의 자금조달대책, 주택·부동산 사업자의 사업자금 대출
싱가포르	기업대출 정부보증 확대, 보증한도금액 인상
대만	-
중국	주식 매입 시에 부과되는 0.1%의 인지세 면제

○ 미국 : 7000억 달러의 TRAP에는 부실자산의 매입 및 보증업무와 금

용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경영자손금한도 규정, 부실자산의 시가평가 유예, 예금보호한도를 2009년 말까지 100,000 달러에서 250,000 달러로 증액

- 캐나다 : 보증보험구입 프로그램을 통하여 차입자의 지속적인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영국 : 은행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약 GBP 2,000억을 은행의 특별 유동성계획에 투입, 지급능력 신장을 위해 약 GBP 500억을 은행 자본 확충 기금에 투입, 자금조달 확보를 위해 신용보증제도 도입
- 독일 : 5,000억 유로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대출보증 4,000억 유로, 자본구성재편과 위험인수 800억 유로, 보증채무에 대한 준비금 200억 유로로 구성
- 프랑스 :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을 위한 유동성 확대를 목표로 함
- 스웨덴 : 금융감독기관에 SEK 23백만을 넘는 추가 자원 투입, 금융감독기관 내에 자금세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기관 신설
- 호주 : 호주 중앙은행은 금리 4.25%에서 3.25%로 1%p 인하
- 일본 : 국가의 자본참가 한도 확대(2조엔→12조엔)에 10조엔, 은행 등에 대한 정부보증에 20조엔, 중견·대기업 자금대출에 3조엔, 주택·부동산사업자의 사업자금대출에 0.2조엔의 예산 배정
- 중국 :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주식거래 관련 세금 인하

□ Sector 2 : 가계 지원

국가	주요 내용
미국	부시 정부: 1인당 600 달러(가구는 1,200달러) 세액환급, 소득세 공제 일몰규정 확대, 부동산담보대출 금액 감액조정
	오바마 정부: 중산층 조세지원(1인당 500달러, 가구의 경우 1,000 달러)
캐나다	비과세저축계정 운영, 저축에 대한 세액환급, 저소득 가정에 대한

	국가적인 아동지원정책, 소득세율 인하(16%→15%), 비과세 소득의 범위를 확대, 과세구간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낮은 세율을 적용, 고령자공제 확대
영국	부가가치세율 한시적 인하(17.5%→15%),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 인상, 자녀양육비 보조금 인상 조기 적용, 자녀세액공제 인상, 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출심사 개선, 주택담보구제, 담보이자 제도
독일	아동수당 증액(월 164 유로→월 195 유로), 자녀세액공제 증액(연 3,864 유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증액(월 142 유로), 일회성 보너스 지급(아동당 100 유로), 최저소득세율 인하(14%), 의료보험료 요율 인하(14.9%)
프랑스	실업취약계층에 사회보장급여 추가지급
스웨덴	국세인 소득세 부과기준 인상, 지방소득세 감세, 연금수령자에 대한 감세,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네덜란드	맞벌이 부부 세액공제 인상, 연금보험료 공제한도 인상
핀란드	가구공제 한도 금액 인상(2,300 유로→3,000 유로), 식품의 부가가치세율 인하(17%→12%), 근로소득세율 인하, 물가상승 반영하여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4%씩 상향 조정), 연금소득공제 인상,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주택구입비 지원 상향
호주	외벌이가구, 의무교육연령 어린이들, 농촌일손 등에 조세혜택 지원, 납세자들에게 Tax bonus 지급
일본	생활지원정책급부금 실시, 고속도로요금 인하, 주택용자에 대한 감세
싱가포르	개인소득세의 20% 환급(한도 S\$ 2,000), 저소득층 대중교통비·교육비 지원
대만	상품권 지급(1인당 NT 3,600), 소득세 공제금액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인하 및 공제금액 상향조정
중국	농촌 경제 지원에 중심을 둔 내수확대정책 시행, 빈곤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소득세 면세점 인상 계획(논의중)

○ 미국 : 부시정부의 2008~2009년에 750억 달러의 세액환급과 오바마 정부의 중산층지원을 위해 약 960억 달러의 Making Work Pay Tax

Credit 도입

- 캐나다 : 2008~2009 및 이 후 5년에 걸쳐 250억 캐나다달러의 과세를 면제할 계획으로 국민 1인이 1년에 저축하는 5,000 캐나다달러에 대해서는 비과세계정을 운용하여 세액환급하고 고령자공제를 1,000 캐나다달러로 인상하였으며, 비과세구간 및 과세구간을 증액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낮춤
- 영국 : 저소득층 및 중산층 납세자를 위해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 인상(GBP 600)을 영구화하고 추가적으로 GBP 130을 더 인상, 자녀 세액공제 인상, 연금수령자에 대해 GBP 60을 지급, 대출 심사위원단(Lending Panel)을 도입하여 가계 및 기업 대출 심사 개선
- 독일 : 자녀아동에 대한 수당, 세액공제 증액과 더불어 일회적 보너스를 지급하고, 가장 낮은 소득구간에 대하여 소득세율 1%p 인하
- 프랑스 : 실업취약계층에 €200씩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
- 스웨덴 : 국세인 소득세 부과기준 인상(월 SEK 28,400 → 월 SEK 31,700), 연금수령자에 대해 연간 약 SEK 20억의 감세 추진
- 호주 : 외벌이 가구들에게 조세혜택 지원, 의무교육연령인 어린이들에게 조세혜택 지원, 납세자들에게 Tax Bonus를 지급
- 일본 : 전 세대에 대해 총액 2조엔 규모의 생활지원정액급부금을 실시, 도쿄·오사카를 제외한 지방고속도로에 대해 휴일 1,000엔으로 무제한 사용, 주택용자에 대한 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최대 500만엔(장기우량주택은 600만엔) 공제
- 대만 : 소비 진작 목적으로 음력 설 이전에 모든 시민에게 NT 3,600 상당의 상품권 지급
- 중국 : 소비 진작 목적으로 음력 설 이전에 빈곤층을 대상으로 현금 보조금 지급, 농촌경제 지원에 중점을 둔 내수확대 정책 시행

□ Sector 3 : 기업 지원

국가	주요 내용
미국	부시 정부: 가속상각 및 즉시상각법, 법인세 세액공제 일몰규정 확대 오바마 정부: 가속상각법 2년 연장, 결손금소급공제 기간확대(2년→5년), 재생에너지 및 환경보존세액공제 확대
캐나다	한시적인 가속상각제도,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법인세율 인하(22.12%→15%), 소매판매세와 물품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 임업·농업·수산업 등 취약산업 지원, 컴퓨터에 대한 100%자본비용공제, 기계 및 장비에 대한 한시적 과세면제, 경감세율 적용 중소기업 확대, 경기불황에 취약한 사업에 대한 지원
영국	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위한 자금지원 및 법인세율 인상 연기,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1년→3년), 납세지원서비스 도입
독일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 특별대출 지원(150억 유로 한도), 우량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 정률법 상각, R&D 투자자금지원(매년 4.5억 유로)
프랑스	VAT 조기 환급, 신형차를 구매자를 위한 보조금 인상, 자동차 하도급업체를 위한 구조조정 펀드 설립, 주택 추가건설, 교외지역 재개발, 거주지 개선사업, 신규투자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전략적 투자펀드의 설립,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스웨덴	법인세율 및 사회보장기여금 인하, 조세행정 간소화, 자동차업계 종합지원(SEK 280억)
네덜란드	신설법인 과세면제 금액 확대, 중소기업 일부분 과세면제, 연구개발 인센티브제도에 IT 프로젝트도 포함
핀란드	기업의 금융 지원 옵션 개선방안 실행
호주	소기업과 일반기업에게 감가상각충당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27억 호주달러를 지원
일본	에너지수급구조개혁추진설비에 대한 즉시상각, 자원생산성향상 설비에 대한 특별상각, 중소기업의 경감세율 인하
싱가포르	2010년 과세연도부터 법인세율 18%→17%로 인하, 손실이연한도 확대, 기업의 설비투자 가속상각 허용
대만	비즈니스 존(Business Zone) 지정 계획(논의중), 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기업의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세금납부기한 연장, 신규 자동차 구입에 대한 세금 경감
중국	7대 수출촉진조치, 10개 주요 산업에 대한 진흥정책 발표 예정(자동차·철강·장비제조·방직 확정 발표), 100개 항목의 행정사업 수수료 징수 취소 및 정지, 기계장치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증치세율 인하,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 수출제품 보증을 위해 사용되는 중국보험회사 상품에 대한 영업세 면제, 자동차 취득세 인하

○ 미국 : 가속상각법 확대를 통한 세금환급과 세액공제의 일몰규정

확대로 투자촉진 유도, 결손금소급공제기간 확대(2년→5년)

- 캐나다 : 정액법의 50%를 상각하는 가속감가상각제도를 2011년까지 운영하고, 컴퓨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100% 자본비용공제를 허용하며, 11%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규모사업체의 소득 기준을 인상(400,000 캐나다달러에서 500,000 캐나다달러), 경기불황에 취약한 농업, 임업, 축산업 등에 대한 지원계획
- 영국 : 소규모 수출업자에게 GBP 10억의 은행 대출 지원, 기업부채의 지분(equity) 전환 위해 GBP 5,000만의 자금 지원,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율 인상(21%→22%) 적용시점 연기
- 독일 :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특별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우량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은 독일재건은행에서 시행, 25%의 상각률로 정률법을 2년간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특별상각제도는 2년 연장
- 프랑스 : VAT 조기 환급 등을 통해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 자동차 산업과 건설 산업을 위한 지원이 많음
- 스웨덴 : 법인세율 인하(28%→26.3%),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1%p 인하(32.42%→31.42%), 자동차 업계 종합지원 대책
- 호주 : 사업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소기업과 일반 기업들의 감가상각충당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27억 호주달러 지원
- 일본 : 2009.4.1~2011.3.31 기간에 취득한 에너지수급 구조개혁 추진 설비는 100%를 즉시상각, 자원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설비는 취득가격의 30%(건물은 15%)의 특별상각, 중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을 2009년부터 2년간 22%에서 18%로 인하
- 대만 : 산업고도화촉진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법인세 · 소득세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을 인하하는 조세개혁방안 추진 중
- 중국 :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기계장치 구입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허용,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

□ Sector 4 : 고용 창출 및 유지

국가	주요 내용
미국	오바마 경기부양안: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고용창출세액공제와 녹색산업을 통한 고용창출
	경기부양법안(H.R.1): 인프라 구축, 과학, 에너지, 교육과 의료분야에 대한 고용창출
캐나다	실직자의 고용보험수령을 확대, 실직자직업훈련프로그램 개설
영국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GBP 13억), 국가고용파트너십을 통해 실업증가 추세 저지, 자본지출 조기시행, Jobcenter Plus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독일	교통시설 보수·투자 프로그램 실시(10억 유로), 지방정부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프로그램 증액(30억 유로), 주정부에 대한 추가지원(2억 유로), 고용안정망 지원, 고용보험 요율 인하(3.3%→2.8%)
프랑스	신규고용직원의 임금보상, 해고근로자 직업교육
스웨덴	종합고용대책을 통해 실업자 지원(SEK 230억)
네덜란드	고용보험료(unemployment social security) 폐지, 62세 이상 근로자 장려금(최대 3,000 유로) 지급
핀란드	근로소득세 인하, 실업보조금 지급, 실업을 증가예상에 따라 17,400만 유로 배정
호주	새로운 직업훈련장 건설에 투자, 각종 기간시설확충 프로그램 확대, 일자리창출계획을 위한 투자계획 발표
일본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신설, 지방공공단체가 기금을 재원으로 일시적 고용 창출, 고용보험료 인하, 지방교부세 증액
싱가포르	교육훈련프로그램 실시, 정부가 2009년, 2010년 동안 18,000명 고용
대만	SOC 건설을 포함하는 NT\$ 7,150억 상당의 경기부양대책 발표(4년), 대만사랑 12대 건설 프로젝트 시행(8년간에 걸쳐 NT\$ 3.99조 투자), 외국인 근로자수 감축
중국	SOC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조 위안 상당의 경기부양정책 발표, 24개 지방정부에서 18 위안 규모의 투자계획 발표, 5개항의 고용안정 대책, 대졸자 취업촉진 7대 대책

- 캐나다 : 실직자의 고용보험수령을 확대하여 2년동안 고용보험 최대 수령기간을 연장(45주→50주), 실직자직업훈련프로그램 개설하고 구직자가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확대
- 영국 :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해 GBP 13억을 추가 투입, 고속도로 개선, 공영주택 건설, 학교시설 보수 등의 사업에 2010~2011년에 계획된 자본지출 예산 GBP 30억을 2008~2009년 및 2009~2010년으로 앞당겨 시행
- 독일 : 20억 유로 규모의 시간제 근로자 훈련개발 프로그램 실시와 1년간 시간제 근로수당의 수급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 확대
- 프랑스 : 신규직원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해고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확대
- 스웨덴 : 인프라 구축사업, 실업자 지원, 고용청의 구직·구인 주선 업무 지원, 교육(직업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재정 확충, 학자금 대여수준을 30%에서 80%로 인상
- 호주 : 새로운 직업훈련장 건설에 투자하고, 경제안보전략·국가개혁정책·국가건설정책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
- 일본 : 자사에서 일하는 파견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중소기업 100만엔, 대기업 50만엔의 장려금(한시적 고용은 50% 적용) 신설, 도도부현에 대한 교부금을 기초로 한 기금을 재원으로 일시적 고용기회 창출, 2009년 1년에 한해 고용보험료 0.4%(노사 각 0.2%) 인하와 지방교부세 1조엔 증액
- 대만 : NT 7,150억 규모의 경기부양대책 발표(상품권 지급, SOC 건설 등)
- 중국 : 철도·도로·공항, 도시 및 농촌의 인프라 시설 투자에 초점을 맞춘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대책 발표

□ Sector 5 : 친환경(녹색 성장)

국가	주요 내용
미국	부시 정부 : 대체에너지세액공제 일몰규정 확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액공제, 고효율건물 또는 생활제품에 대한 세액공제, 자전거 사용에 대한 조세지원 오바마 정부: 대체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 개발 등 녹색산업 활성화
캐나다	인프라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보조하기 위한 그린 인프라펀드조정(10억 캐나다달러), 사업에 대한 지원조치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사인 온실가스감축, 청정에너지펀드에 대한 사업지원, 주택건설과 관련된 조치 중 친환경개조에 대한 지원
영국	장기 환경목표로 저탄소 성장지원(GBP 5.35억), 경제위기를 반영하여 자동차 소비세 인상폭 완화
독일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투자 지원(30억 유로), 자동차 기술 연구·개발 차입금 증액(100억 유로), 미래형 자동차 엔진 개발 지원(5억 유로), 친환경차량 구입시 보너스 지급(2,500유로)
프랑스	-
스웨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환급금 예산 확대,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위한 예산할당
네덜란드	자동차세 과세기준 CO ₂ 방출량으로 변경, 연료효율 높은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 천연가스 차량 자동차세 인하, 수소차량에 대해 과세면제 도입
핀란드	-
호주	녹색미래를 위한 신차정책을 발표, 천장단열제 공급 및 지원 사업, 태양열 온수시설 지원
일본	일정한 배기가스 성능·연비 등을 갖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중량세 감면
싱가포르	지속가능한 개발에 S\$ 10억 투자(산업과 가정의 에너지 효율화, 주거환경녹색사업 등)
대만	-
중국	생태환경 투자에 3,500억 위안 투자 예정

- 미국 : 대체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풍력, 태양력), 바이오디젤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규정을 확대,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비용(1인당 20달러 한도)을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 영국 : 저탄소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사업과 철도교통 등에 GBP 5.35억의 예산 투입, 연료 효율을 반영한 자동차 소비세 (vehicle excise duty) 부과, GBP 68억의 주택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시행
- 독일: 친환경 제품의 보급 확대와 자동차 산업의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지원
- 스웨덴 :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 2009년 SEK 7.95억, 2010년 SEK 10.7억, 2011년 SEK 11.65억의 예산 할당
- 호주: 녹색미래를 위한 신차정책을 발표,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면서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주택단열제사업, 태양열 온수시설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함
- 일본: 2009.4.1~2012.4.30 기간에 배출가스기준 및 연비 성능에 따라 과세면제, 75% 세율경감, 50% 세율경감
- 중국: 2008년 11월 5일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대책 중에 3,500억 위안 규모의 생태환경 투자 포함

□ Sector 6 : 기타

국가	주 요 내 용
미국	부시 정부: 자동차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부동산세제지원
	오바마 정부: 과학연구와 학교 및 의료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캐나다	주택세제지원, 공공시설 투자
영국	장기성장을 위해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정책으로 고소득자 세율인상 및 기본공제 제한, 사회보장기여금 인상 등

독일	주택 개·보수 비용 세액공제 한도증액(1,200 유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초고속인터넷 기반사업 추진, 보육·학교·도로·병원 시설 개선사업(140억 유로)
프랑스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부문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
스웨덴	국가경쟁력 강화 및 미래 복지를 위해 교육, 연구, 기반시설, 환경 등에 대해 투자
네덜란드	부가가치세율 인상안(19%→20%) 폐지
핀란드	상속증여세율 3%p 인하, 알코올 음료소비세 10%p 인상
일본	고용정지 파견노동자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주 지원, 경제긴급대응예비비 신설
싱가포르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도시철도, 도로 등 교통망 건설 및 정비, 교육과 의료부문 지출 확대에 S\$ 16억 투자
대만	-
중국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시에 적용되는 각종 세 부담 완화(계약세, 인지세, 토지 증치세, 영업세)

○ 미국 :

- 주택구입시 10%와 7500 달러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고 15년간 국세청에 분할납부하는 생애 첫 주택구입세액공제와 임대주택 세액공제 한도를 증액
- 임대주택의 공급 및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이자 비과세
- 지역사회에 대한 초고속인터넷망, 병원진료기록 전산망 구축, 과학연구에 대한 지원, 주와 지방정부의 학교와 의료분야에 대한 재정지출금액 보조

○ 캐나다 :

-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액을 증액(20,000 캐나다달러→25,000 캐나다달러), 사회주거시설,

주거시설을 위한 인프라(상하수도 등)에 대한 투자, 한시적인 주택개조세액공제가 포함

- 환경친화적인 인프라구축 이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학교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로 2009~2010년에 걸친 대규모투자(120억 캐나다달러)가 계획
- 영국 :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0%→45%) 및 기본공제 제한(연소득이 GBP 140,000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불가, GBP 100,000 ~ GBP 140,000인 경우 기본공제액 감액), 사회보장기여금 0.5% 인상
- 독일 : 소비위축 해소를 위해 특정기준을 충족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1년간 면제하고, 미래성장동력을 비축하기 위해 초고속인터넷사업과 교육사업에 중심을 둠
- 프랑스 : 기반시설, 문화유적, 고급 연구·국방산업 등의 분야에 €4 billion을 직접 투자함
- 스웨덴 : 교육과 연구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SEK 150억의 자원을 4년에 걸쳐 의학, 기술 및 기후에 대한 연구 영역에 집중
- 일본 : 고용 정지한 파견노동자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1인 1개월 46만엔 지원(6개월까지 제공), 고용·중소기업 금융·사회자본 정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1조엔 규모의 경제긴급 대응 예비비(2009년)를 신설

■ 저 자

총괄 : 전병목

조진권 · 구자은 · 정희선 · 마정화 · 김태훈

정경화 · 김정아 · 송은주 · 기은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의 조세 · 재정정책 동향**

2009년 2월 24일 인쇄

2009년 2월 27일 발행

발행인 원윤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2186-2114(대) FAX: 2186-2179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9

ISBN 978-89-8191-422-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